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10th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 **결과자료집**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

결 과 자 료 집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했습니다.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세계 평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데 그 개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다양한 교육활동,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 연구(제주프로세스), 국내외 연구학술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www.jpi.or.kr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

결 과 자 료 집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개회사] 원희룡 • 011
- [영상 축하메시지] 반기문 • 013
- [축사] 게르하르트 슈뢰더 • 014
- [기조연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 016
 - 후쿠다 야스오 • 019
 - 존 하워드 • 023
 - 조 클라크 • 025
 - 리샤오린 • 028
- [환영만찬사] 윤병세 • 030
- [폐회사] 문태영 • 034

제1장 외교·안보

- [세계지도자세션]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 038
- [슈뢰더 전 독일 총리 특별대담] 통독 이후 구조개혁과 한반도 통일의 성공 조건 • 042
- [제13차 동아시아포럼 개최식] 비전통 안보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번영 • 045
- [전직 외교장관 초청간담회] 한국 외교의 발전 방향 • 049
-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 051
- 환동해 다자 협력: 에너지, 교통, 물류, 투자, 관광 • 054
- 아시아의 지역주의 무엇이 다른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통해 본 지역주의 • 056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견국 외교: 해양 안보와 중견국 네트워크 • 058
- 국제법상 사이버 범죄, 테러 및 전쟁의 규제 • 060
- 동북아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협력: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 방안 • 063
- 중국의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그 전략적 의미 • 065
- 광복 70년, 남북 민간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 • 067
- 북극 및 동아시아 해역의 평화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 071
- 동아시아의 미래: 역사, 권력, 이익, 정체성을 중심으로 • 074

PROSPERITY

제2장 경제·경영

- [창조경제대담] 무엇이 세상을 리드하는가 • 128
- 동북아 지역협력과 새로운 개발 구상 어디로 가야 하나 • 130
- 기술과 혁신, 그리고 창조경제의 미래 • 135
- 자유시장과 환경보호주의, 이 둘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 • 138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자정부 • 140
- 시민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수요자 중심적 지방 전자정부 계획 • 142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류 및 협력 방안 • 144
- [도시리더좌담회] 전자정부를 통한 지방정부 신뢰성 제고 • 147
- CSR에서 CSV로 가는 기업의 여정: 사례, 전략, 그리고 시스템 • 150
- G2 시대 아시아와 한중 경제협력 과제 • 152
- 기업의 글로벌 경제협력과 평화적 아시아 교류의 길 • 154
- 21세기 자본주의와 경영 실천: 아시아에서 세계로 • 156
- 아시아 금융시장 성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 방안 • 158

-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새 비전과 도전 • 080
- 북한의 미래: 핵, 인권, 사이버 전쟁의 함의 • 085
- 지정학을 넘어서: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동북아 정치를 향하여 • 088
- 제주포럼의 선구자들: 회고와 전망 • 092
- 한반도 통일의 경로: 기회와 도전적 과제 • 098
- 동북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공동체의 선결과제 • 101
- 동북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공동체의 모색 • 103
- 문화와 유엔 개발 목표 • 110
- 한반도 통일의 국제 공공재적 성격과 국제 언론의 역할 • 112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 네트워크 구축전략 • 114
- 유엔 창립 70주년: 새로운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 • 116
- Post-2015 개발협력 체제와 한중일의 전환적 파트너십 • 119
- 동아시아 영토 및 해양 문제: 발전과 과제 • 121
-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미해결 사항 및 잔존 문제: 국내 법원과 국제법 • 122
-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 법치주의 강화: 새로운 법적 쟁점들에 대한 평가 • 124

SUSTAINABILITY

제3장 환경·기후변화

- 제7차 세계물포럼 이후 • 162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기금 확대방안 • 164
- 산림치유에 관한 한중일 협력: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넘어선 3국 협력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 166
- 기후변화에 대한 아시아의 협력 • 168
- 아태지역 자연재난 사례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역할 • 171

DIVERSITY

제4장 여성·교육·문화

- [글로벌 5개국 청년 비정상회담] 국제시장에는 미생이 없다: 세대 갈등의 현주소와 해결 방안 • 176
- 한중일 소통장벽 극복 프로젝트: 한중일 공동상용 808한자 • 178
- 동아시아의 갈등 극복을 위한 문화협력 • 180
- 아시아의 평화, 여성 인권을 말하다 • 182
-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고양을 통한 여성 인재 양성 • 184
- 여성의 창조경제 • 186
- 글로벌 시대, 한중 여성 리더의 역할과 공공외교 • 188
- 창조경제와 고등교육의 역할 • 190
- 동아시아 국가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학 교육의 방향 • 192

COMPETITIVENESS

제5장 글로벌 제주

-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I • 196
-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II • 199
- 공공자원으로서 제주물 관리 및 가치 극대화 방안 • 202
- 북한 연계 동북아 평화 크루즈의 실현과 과제 • 204
- 미래사회 변화와 제주의 가치 제고 방안 • 206
-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 209

제6장 제주포럼 이모저모

- 화보 • 214
- 국가별 참가자 등록 현황 • 223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

2015. 5. 20^수 - 22^금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환경비즈니스, 인간개발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엔거버넌스센터, 세계전자정부도시협의체, 유엔협회세계연맹, 세종연구소, 프리드리히하우만재단, 대한국제법학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본 타마대학교,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한중지역경제협회, 국민은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라산, 블랙야크

TOWARDS A
NEW ASIA
OF
TRUST &
HARMONY

[개회사]

제주를 모태로 하는 새로운 평화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님,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님,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님,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님,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포럼은 2001년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논의 하는 글로벌 무대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 경제, 문화, 관광, 여성, 환경, 에너지 등으로 논의 주제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외교 포럼으로 우뚝 섰습니다.

제10회를 맞은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입니다.

아시아는 지금 격변의 정세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시아의 긴장은 어느 국가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시아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평화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새로운 아시아의 무한한 번영을 위해 새로운 평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화해와 상생을 이뤄낸 제주는 새롭게 확장된 평화의 개념을 잉태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기에 최적의 지역입니다.

제주를 모태로 하는 새로운 평화, 즉 확장된 평화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의 자연에서 우러난 '치유의 평화'입니다. 제주의 어머니 청정 대자연은 휴머니즘조차 초월한 생명공동체입니다. 대자연의 치유와 힐링으로 생태 평화를 빚어왔습니다. 자연에 대한 약탈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에 순응해온 제주인들,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둘째, 섬이라는 제주의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키워낸 '관용의 평화'입니다. 제주 섬은 이 해관계와 옳고 그름을 떠나 모두를 품어내며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왔습니다. 세계인이 제주에 와서 공존하고 소통하며 치유와 감동의 힘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힘은 개성 있고 아름다운 예술의 창조로 이어져 새로운 문화 가치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평화'입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평화롭게 이행되는 세상, 제주가 바로 그 시범이 되고자 합니다. 바람 많은 섬 제주, 태양이 불타는 섬 제주는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원천입니다. 자연자원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전기자동차를 움직이고, 이에 힘입어 폐기물이 줄어 들고 탄소 없는 섬으로 거듭남으로써 에너지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 없는 평화에서 벗어나 치유의 평화, 관용의 평화, 에너지의 평화로 확장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이곳 제주에서 활기찬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치유와 관용과 에너지의 평화를 담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작지만 강력한 평화의 발신지가 될 것입니다. 세계 정상들의 평화 회담과 국제적인 평화 프로그램의 주무대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회 제주포럼은 평화 담론의 지적 용광로가 되고, 평화 실천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평화 자원을 축적해가는 평화 기업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는 '평화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주포럼은 평화의 외연을 확대하고, 동시에 깊이를 더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신뢰와 화합의 메아리가 평화의 감동으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제주의 대자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맞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축하메시지]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 열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존경하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문태영 제주평화연구원장님, 외교단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의미 깊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0회 제주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제주포럼에 참석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제주포럼이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를 주제로 삼은 것을 환영합니다. 유엔은 현재 많은 긴박한 위기를 조율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세우고, 2015년 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새로운 보편적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큰 기회의 시기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을 강조해왔습니다. 일부에선 21세기를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동북아시아는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열쇠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간 큰 틀의 대화를 요청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속적인 안보는 신뢰와 화합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과감하고 더 큰 발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시아는 세계를 더 나은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축사]

협력 강화 다자체제 구축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제10회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포럼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극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지속가능한 미래에 맞추어 재설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제주포럼의 주요 임무는 다자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체제 구축이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화와 개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 간 긴밀한 지역협력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참여해온 유럽인으로서, 유럽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럽통합 진행, 공동시장 구축, 통화 통합 과정을 거치며 유럽은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국가들의 공동체로 구성된 유럽은 전쟁과 파괴로 얼룩진 지난 세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해법입니다.

유럽 대륙의 협력과 통합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적인 공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평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아시아에서도 지역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 강화 및 심화가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한 평화와 개발의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과 독일은 굳건한 정치·경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독일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며, 독일 역시 한국에 있어 핵심적인 유럽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은 2010년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 공통 가치로 묶여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독일은 나라가 분단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21세기 들어 노령화와 인구 감소,



기존 통치 방식과 새로운 세력 간 융합, 기후변화 대처 등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동반자로서 이런 문제에 함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제10회 제주포럼 같은 국제회의는 밀접한 상호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저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공통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통합을 통해 가능한 큰 이익을 끌어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특히 보육, 교육, 대학, 연구, 혁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아야 하고, 다른 문화 간 이해를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원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책무가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세계가 정치·경제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아 평화와 신뢰, 그리고 화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협력 증진과 심화에 힘써야 합니다. 제10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지식과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다시 제주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포럼에서 다루는 주제인 평화, 번영, 다양성, 지속가능성은 모두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구호로 내세웠던 가치들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돼 국제적인 녹색성장 캠페인을 이끌어나가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으로서 이들 가치를 구현해나가려 합니다.

어제 환영 만찬에서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늦춰온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을 포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움직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해 대통령직을 떠날 때 20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퇴보는 이미 복잡할 대로 복잡해진 역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체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도록 갈등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남북 긴장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은 아시아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소망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멋진 미래는 지정학과 지경학 사이의 부조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선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안보 문제가 분열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역내를 포괄하는 집단 안보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정학은 국가 간 무역, 투자, 인프라, 관광,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의존성과 유대를 강화해 국가 간 화합을 유도합니다. 경제협력이 곧두선 지정학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중, 일중 관계는 경제적 필요가 대립 욕구를 자제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핵심 주제는 평화와 번영입니다. GGGI 의장으로서 아시아의 미래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없이는 아시아의 미래가 없습니다.

2015년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시기입니다. GGGI는 오는 12월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아디스아바바, 뉴욕, 파리 회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제주포럼에서 냉전시대 때부터 고심해온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어떻게 신뢰 결핍을 극복하고,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서 동남아시아 사례와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요술 지팡이는 없습니다. 신뢰 자체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쌓았으면 잘 지켜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몇 세대 동안 평화롭게 살다가 원수가 되어버린 공동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처가 아무는 데 몇 세대에 걸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 어떻게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미래지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클수록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1999년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가 분리된 뒤 그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양측은 한동안 서로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지도부는 미래지향적 태도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고, 오늘날 양국은 여느 이웃 국가들만큼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뢰 구축의 또 다른 방안은 상생(원-원) 전략입니다.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불신과 고정관념은 진취적 사고에 장벽이 되곤 합니다. 평화를 향한 접근 방식을 바꾸면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은 지난 30년간 분리주의 무장반군 자유아체운동(GAM)으로 인해 분쟁을 겪었습니다. 평화는 너무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5년 제 첫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몇 달 뒤였습니다. 쓰나미 참사 이후 저는 원-원 전략에 입각한 평화 협상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GAM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고, 그들에게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항구적 평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반군은 무장을 해제했고, 분리주의운동과 사회 갈등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분리되지 않고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총소리가 울리지 않게 되었으며, 대립하던 적들이 형제자매가 되어 민주적 환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훌륭한 원-원 전략은 모두 득을 보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뛰어난 지도력 없이는 신뢰를 키울 수 없습니다. 어려운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손을 뻗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며 상당한 용기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제 오랜 친구인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께서 패널로 자리하시니 참 기쁩니다. 우리는 함께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관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지역 안정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제가 대통령직에 올랐을 때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양



국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두 나라에 해가 될 뿐이라고 판단해 호주와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다행히 존 하워드 총리 같은 든든한 파트너께서 국가 정상이어서 우리 두 나라는 역사에 남을 포괄적 안보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지역협력 구도, 테러리즘, G20 등 많은 공통의 과제에 협력했습니다. 신뢰를 한번 쌓으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투자한 관계는 오래 이어지는 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국내외적으로 신뢰 구축에 성공한 비결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사고와 창의적 원-원 전략, 리더십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문제는 이 세 가지 조합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뢰와 화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세대와 차세대가 열린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신세대가 마음을 닫고 변화에 저항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문화'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에서 불신의 요소가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한국 정부 '신뢰외교'에 공감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작아진' 세계와 문화·문명 충돌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국제사회가 IT 기술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정보, 사물, 인적 왕래, 관계가 비약적으로 신속하고 긴밀해져 어떤 의미에서 세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작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아진 세계'가 20세기나 19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테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정치·종교 원리주의의 확산은 국제사회 전체에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다툼과 지역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20세기 말 냉전 종식 이후 동서양 진영 간 이분법적 대립으로 억눌려 있던 전 세계 다양한 종교, 민족, 사회 등의 가치관에 눈뜨면서 제각각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한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아진 '세계' 안에서 이것들이 서로 뒤섞이며 충돌과 마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문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존중 등이 국제사회의 공통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 이런 주장이 널리 공유되고, 존중받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단순히 가치를 주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작아진 국제사회'에서 종전보다 개선된 '문명 간 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과 '평등'의 딜레마

해묵은 과제인 동시에 새로운 과제로서 '성장'과 '평등' 또는 '양극화' 문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전략 없는 '평등론'이나 '격차 해소'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깊이 있는 대책이 결여된 성장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각 나라와 국제사회의 미래에 불안정 요인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평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간과하는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이 경우 '양극화'에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전부터 존재한 중요 과제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입니다.

둘째, 이보다 더 새로운 문제로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 내에서도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극명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 경제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각국을 비롯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화에 가장 앞선 선진국에서조차 자국 내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숙하고 안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다수를 차지해야 할 중산층의 세력이 약화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 지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경제성장 정책뿐 아니라 사회보장, 공공사업, 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절박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과제

현재 세계는 '작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식량,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선 지구호'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이 준 유한한 자연과 자원을 얼마나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뒤늦게 문제를 깨닫는 어리석은 동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과 에너지 같은 문제는 일단 입계치를 초월해 문제가 악화된 뒤에는 다시 돌이키는 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아시아 중심축 시대

이상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논점은 지나치게 개념적(philosophical)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각 나라가 맞닥뜨린 눈앞의 과제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장기적 비전을 세워 대처해나가야 할 전략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예로 들어 국제사회가 에너지 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고도성장기, '문명 간 대화'가 제기되거나 유엔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열심히 논의하고 수립했던 2000년 뉴 밀레니엄 전후를 비교해볼 때,

현재 국제사회에는 전략과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미소 양국 대립 체제였던 냉전시대부터 냉전 종식 이후 미국 '1강 체제'를 거쳐, 브릭스(BRICs)라는 신흥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상징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 전체의 지정학적, 구조적 변화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21세기 초인 지금은 20세기에 비해 단극적(uni polar) 또는 양극적(bilateral polar)이기보다 다극적(multi polar)인 위상이 더욱 강력한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초강대국 혹은 몇몇 국가가 세계를 주도해나가기보다 다수의 강대국(major power)이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러 중견국(middle power)과 협력해 이끌어가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요 강대국이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릇 인간의 사고방식은 과거 유형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깊어져 새로운 역할을 자발적으로 자각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지정학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세력인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호주, ASEAN 같은 나라와 조직이 협력하여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아시아 중심축(Asian Polar)'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적 또는 전 지구적 과제를 놓고 아시아 각국이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뢰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런 관점에서 우선 지역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개인 간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신뢰외교'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각국이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관계 확대를 지향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향후 동북아시아 국가 간 구체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비핵화 추구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일 관계 50주년

끝으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안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의존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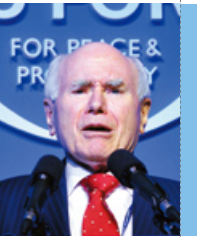
강화해왔습니다. 양국 교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왕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도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관계를 한층 돈독히 해 앞으로 더 멋진 50년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일본 경제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차세대가 밝은 미래 관계를 계승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연설]

국가 간 갈등, 피할 수 있다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이 토론의 장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 기쁘고 특히 오랜 친구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도요노 대통령 재임기에 저도 호주 총리였고 우리는 매우 가깝게 지내며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종교, 문화, 민족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 두 나라 간 공동 목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2년 발리 폭탄테러 당시 호주 국민들을 살해한 범인을 붙잡기 위해 치안부대를 동원해 협력했던 사실을 저는 호주를 대표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연설 중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된 과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들으며 세계 지정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정치적 사건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소련 공산주의 붕괴,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입니다. 동유럽 전반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소련과 대부분 소비에트 위성국가에서 마르크스-엔겔스 철학을 벗어나, 중앙통제 경제체제를 옹호하며 수십 년간 성과 없는 헛된 노력 속에 주도권 경쟁을 했던 허위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실로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킨 사건이자 대변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자 세계사적 전환으로 아시아 지역이 세계 성장 강국으로 부상한 사건입니다. 이제 세계경제의 미래가 아시아에 달려 있음은 자명합니다. 제 나라 호주도 멀게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여정에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채 1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호주·일본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60년대 호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일본 시장에 수출하면서 호주 경제는 괄목할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몇 해 그리고 2015년 호주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호주와 아시아 간 무

역 관계 성장은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화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1950년대 이후 이 놀라운 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과 증산증이 급격히 팽창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그간 한국 경제 체제의 주목할 변화를 돌아보면 세계화와 경쟁자본주의 확산의 엄청난 수혜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 규모와 폭을 고려했을 때 경제체제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정치에 기여하는 부분을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팽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세계사적 대전환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팽창을 두말할 것 없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중 관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미국은 여전히 경제와 군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지닌 강대국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미국처럼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역시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19세기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미국과 독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 연설의 핵심 논지는, 강조하건대 미중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길 강력히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날이 커지는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과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호주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지난 30년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시기였으며 이는 바로 세계화와 경쟁자본주의의 수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점을 극대화해야 하고, 갈등 회피를 다가올 미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끝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제주포럼에 참석한 모든 분을 대신하여, 이 아름다운 섬 제주의 원희룡 도지사님과 한국 국민들이 베풀어주신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

중견국, 국제사회 역할 커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한국을 다시 방문해 이렇게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제주포럼이 마련한 진취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은 세계의 많은 나라가 내부지향적 자세를 취하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정신은 밖으로 뻗어가고 있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관련국들이 새로 부상하는 과제에 직면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그 어느 지역보다 강성해질 수 있도록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함께 성장하기 위해 그 노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일찍이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실질적으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6·25전쟁 때 2만5000명이 넘는 캐나다 병력이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5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에 굳건한 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7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많은 성취를 이루며 양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랑스러운 이민국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귀화한 캐나다인 중 상당수, 지난해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이어서 캐나다인의 관점이 하루가 다르게 '아시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관계에서 괄목할 점은 올해 1월 1일 발효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FTA 협정을 체결·발효한 첫 아태 지역 국가입니다. FTA를 통해 자유무역뿐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다자 협정을 포함한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양자 그리고 다자 협정은 아태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아태 지역 내 이니셔티브는 상대적으로 흔치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에서 이뤄진 협력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태 지역 내

무역과 각종 협정, 다자협력은 독보적인 경제성장과 통합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와 번영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안보협력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국제사회의 혼란이 심화되면서 점차 속도가 더뎠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핵심적 협력이 어떻게 안보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캐나다와 한국이 공조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떠오릅니다. 캐나다는 1990년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민간 차원의 북태평양협력안보대화(NPCSD)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외무장관이었습니다. 현인(賢人)이었던 고 김경원 대사의 리더십이 떠오릅니다. 온건하면서도 긴요했던 당시 대화체제 제안은 그동안 역내 안보에 관한 다자 간 대화 기회가 거의 없었던 동북아 지역 관계국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과 6자회담 개최에 일조했습니다.

팔복할 사실은 그 안보 대화가 중견국만이 할 수 있는 발의였다는 점입니다. 강대국들은 그들 자신의 안보 이익과 대책에만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시선은 패권을 가진 국가, 즉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향해 있습니다. 양국에 내재한 야망과 패권, 그들이 공유한 이익, 그리고 긴장감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중견국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현재 중견국들은 과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그들 간 긴장 고조로 인해 더 넓은 시각에서 사안을 보지 못해 새로운 변화를 자극하고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중견국들은 새로운 회담을 개최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체제에 회의적이거나 봉쇄된 국가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독려하는 데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 강대국보다 중견국이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역할들입니다.

- **갈등 중재:** 강대국을 신뢰할 수 없는 사안일 경우
- **절제:** 미국과 중국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논쟁을 초래할 만한 이슈에 대해
- **타협과 절충:** 강대국보다는 중견국이 제안하기 쉬운 경우가 더 많음.
- **선두가 아닌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기**

패권국 시대에, 리더십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민주국가가 상당 부분 패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정부 활동 세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중심에 있다는 것은 누가 상석에 앉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무대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성취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성취한다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고 동맹을 맺기 위해 세계적 도전 과제가 있는 시대, 표현할 기회 그리고 현시대를 특징짓는 중요한 차이를 조화시킬 기회가 있는 이 시대에 전례 없이 중요

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이 시대에 새로이 입지와 영향력을 확보한 비국가 주체, 즉 비정부 단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환경운동가, 사회적 기업 등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도 고려할 시각입니다.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것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두 나라는 영향력로나 지리적으로나 중견국 위치에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패권국가 옆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정책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동시에 추구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강력한 이웃 나라인 미국과 최대한 친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부유하지 않은 나라와의 관계,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대한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추구해왔습니다. 캐나다와 다른 중견국들은 지역개발과 평화 유지 활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지뢰 같은 사안에 맞서 공익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날 중견국들은 각기 다른 이익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유하는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자 간 공조체제를 이행하는 토대가 됩니다. 다자 간 공조체제는 단순히 패권이나 무력이 아닌 협정에 의거하여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약소국과 중견국은 강대국에 비해 국제 규범과 질서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다자 간 공조체제에 기인한 공유 이익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제적, 내부적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 항상 격동의 가능성을 품어온 광범위한 아태 지역에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미국의 패권이 도전받으며 중국이 부상해 세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다자적 접근 방법과 제도가 어떻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강대국이 사라져가는 시대인 만큼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 방식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조연설]

‘아시아의 꿈’ 실현을 위하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회장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를 대표하여 제주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창설 이후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저명한 국제 포럼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과 함께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구축이란 주제로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뢰와 화합은 인류 진보를 돕는 촉진제이자 전쟁의 외상을 달래는 진통제입니다.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교류는 국민의 우호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간 신뢰 구축은 국민들 사이에 상호 이해와 교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가 간 분쟁과 이견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교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1954년 창립한 이래 세계 인민의 우의 증진, 국제협력 촉진, 평화 수호와 공동 발전을 목표로 국제사회에서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인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 협회는 현재 46개 국가, 지역별 우호 협회를 설립하여 전 세계 157개 국가의 약 500개 민간단체, 조직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 단일화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협회는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호응하여 아시아 각국과 민간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과 공동으로 청년 우호 사절 상호 방문, 청소년 그림 전시, 문화교류 축제, 영화제 등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며 아시아 각국 인민과의 상호 소통, 상호 신뢰, 상호 이해,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한중일 우호도시대회 등을 개최하여 아시아 각 도시와 지방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은 우정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중국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산과 강이 연결돼 있고 혈액이 상통하며 문화도 비슷합니다. 자연조건으로 이웃이 되었으니 서로 돕고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방침은 바로 선린 우호, 이웃과 벗이 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민심이 관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민간 외교 단체로서, 우리 협회는 앞으로 몇 가지 방면에서 아시아 국가의 상호 신뢰와 화합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주 만나고 자주 오가는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각종 민간교류 활동, 예를 들면 각 분야의 대표단 상호 방문, 수교 기념 축제, 각종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각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둘째, 브랜드를 창출하여 도시 간 우호 교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도시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면서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창출하여 각국 도시와 지방정부의 교류 장소와 제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 도시가 아시아 각국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장려·지도해 우호 도시 네트워크를 기초로 각국 도시와 지방정부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협력을 추구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은 국가 이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존공영의 운명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호혜의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협력의 장을 만들어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 과학 기술, 인재 등 각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 사항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각국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넷째, 호혜와 포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포용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조화롭게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군중과 인민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거대한 아시아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발전할 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포용의 사상을 홍보할 것입니다. 중국 인민이 더 넓은 마음과 더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건설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지난 10여 년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포럼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시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기회와 도전과 번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 인민들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차이나드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도 '코리아드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한국과 중국의 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리아드림과 차이나드림이 함께 나아간다면 새로운 동북아의 꿈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차이나드림, 코리아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지향하는 '아시아드림'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국가는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있고, 지역 간 경제무역, 환경보호, 문화교류, 에너지 이용 등 각 분야 협력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상호 신뢰하고 의존한다면 새로운 아시아는 더욱 광활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간다면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드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환영만찬사]

한반도 통일, 세계 평화·발전 향한 여정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주는 한국 외교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네스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연이어 회동했습니다. 또 저는 내일 서울에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 미타(MIKTA) 5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출범한 이래 올해로 제10회를 맞았습니다. 제주포럼은 다보스포럼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측면의 지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해 주제인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는 종전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헤이자 아시아 패러독스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신뢰와 화합을 통한 동북아 평화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지적했듯이 동북아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의 파고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지정학의 귀환'이니 '미니 냉전'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이 지역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이 상당히 다차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탈냉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위협과 문제의 주원인이었다면, 이제는 갈등과 긴장의 원천이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각국은 저마다의 계산법과 시각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정책, 중국의 신안보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재 일본의 정책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비전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나로 수렴될 것인지에 따라 21세기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내일 논의될 우리의 공동 도전에 관한 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날이 커지는 북한발 위협과 예측 불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무기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국·미국·중국과의 대화, 심지어 러시아의 모스크바 초청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북한이 계속해서 문을 닫아걸고 있을 때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둘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얀마, 이란, 그리고 최근 쿠바에서처럼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요즘 북한 정권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인성,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중국의 부상에 관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아직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은 역내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혹자는 환태평양파트너십(TP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미 간 라이벌 관계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넷째, 중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긴장관계에 머물까요? 아니면 베이징과 반둥에서의 최근 두 차례 정상 회동으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는 걸까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 간 관계 개선을 바랍니다. 지난 3월 저는 서울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하여 지난 3년간 동면에 빠져 있던 3국 간 대화를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중 양국은 물론, 미국도 회의를 주최한 한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한국은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바람이긴 하지만 2010년에 그랬듯 3국 정상회의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제주에서 다시 개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일본의 새로운 전후 질서 추구 양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평화헌법에 대한 재해석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적극적 역할에는 분명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어찌서 이를 탐탁해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아야만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최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이달 초 전 세계 187명의 역사학자들은 전례 없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만에 그 수는 거의 500명까지 늘었습니다.

여섯째, 미중 관계 발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언급했듯이 미중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물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간에는 경쟁과 협력의 요소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미중 간 협력증진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 중국 정상과의 연내 방미를 요청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일곱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증대된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딜레마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보다 영향력 있는 역내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변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바로 며칠 전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한미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곧 실현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어느 때보다 우호적입니다.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듯이, 한미·한중 관계는 전적으로 양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중 양국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흥 대국관계 추진에도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역내 질서에 있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남중국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홉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서방 국가 간 관계의 부정적 여파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동북아에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빠르게 이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자를 모스크바에 초청했지만 북한은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꾸어 러시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5자가 이 문제에 관해 단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진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한국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세계교육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유네스코 현장의 문구를 되새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역내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보다 협력과 조화를 바라는 이들이 많은 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한국은 협력과 조화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 등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작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유엔 사무총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동북아는 유엔의 소지역협력 네트워크에서 빠져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따라서 보다 긴밀한 역내 협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기존 포럼을 보완·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퍼즐을 완성할 기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 간 대화 및 협력과 더불어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적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면, 이는 70년을 지속해온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독일 통일이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을 변화시켰듯이 한반도 통일도 향후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서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우리의 이러한 여정에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주포럼이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사]

평화·번영 비전 공유 플랫폼, 제주포럼

문태영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됨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지난 2001년 저명한 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의 평화정착과 다자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으로 발족해 올해 제10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인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는 지역 내 여러 난제와 개발 협력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명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아시아를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도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안보 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아시아'라는 비전을 세우고 신뢰에 기반한 화합의 지역협력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3일간 세계 62개국에서 온 지도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언론인, 기업인 등 3800여 명의 참석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치, 안보, 경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조연설과 전체세션, 동시세션, 교류회 등을 통해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건설을 위한 기존의 구상을 검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주포럼이 지역 내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협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럼 개최에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폐회 만찬을 주재해주신 김한욱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이사장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주포럼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외교부,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측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주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모든 참석자와 후원기관, 참여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제주포럼을 성공적인 행사로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인 제주포럼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아름다운 제주의 경치를 즐길 여유를 가지시고,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1회 제주포럼은 2016년 5월 25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PEACE

제1장 외교·안보

TOWARDS A
NEW ASIA
OF
TRUST &
HARMONY

[세계지도자세션]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제주평화연구원

진행	안착히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사회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토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GGGI 의장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정리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홍석현

- 최근 일본이 재설정하고 있는 국가 위상과 그 목적은 무엇이며 아베 총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일본'이란 표현에 대한 후쿠다 전 총리의 의견은?
- 중국은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AIIB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다양한 전략을 시도 중인데, 이는 중국과 일본의 꿈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양국의 계획에 대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의견은?
- 캐리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긴장 상태를 풀 것을 중국에 요청했는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주권 활동이라고 주장. 하워드 전 총리의 생각은?
- 아시아 패러독스가 존재한다면, 아시아를 끌어안을 공통의 틀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임. 다자적 안보를 형성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제도'로 북핵 등 여러 이슈를 다자적 맥락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헬싱키프로세스를 참조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 역사상 처음으로 초강대국 두 나라가 이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음. 게다가 한중일 간 대화도 부재한 상황에 북핵 위기까지 있는데, 이를 어떤 구조 속에서 내재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은?
- 모든 일을 강대국이 해결하기보다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중견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한국의 역할은?

후쿠다 야스오

- 한중일은 서로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지며 안정화될 것. 일본의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는 희망적인 것이 사실임. 정치에서 지향해야 할 것은 전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안보 관련 법제가 변경되려는 상황인데, 이는 헌법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기존의 생각이나 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님. 여러분이 안심해도 될 것

이라고 생각함.

- 북한문제는 매우 시급한 현안임. 북한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음. 북한 주민들은 인권유린, 경제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 과거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방북하여, 납치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논의했고 일부는 성공했음. 과거에는 6자회담이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는 중단됨. 한중일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북한문제 해결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문제임.
- 아세안(ASEAN)은 참여하는 국가들이 서로 민족, 역사 등이 다르지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음. 인도네시아가 대표적 사례로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봄. 아세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한중일은 이를 통해 하나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임. 한국이 삼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 중국의 부상은 현실이므로, 다만 중국이 평화적으로 굴기하기를 바라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여러 나라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환영할 만한 일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역내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기를 바람.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의 국가들이 함께 역동적인 균형점을 찾아 평등, 존중, 책무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지역 상황을 만들기를 바람.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환영하며, 중국이 다른 역내 국가들과 함께 책임 있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지키기를 바람. 일본도 경제, 기술 등에서 아시아의 강대국이지만 아시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임.
- 여러 문제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견국임. 한국은 미국, 중국의 경쟁 국가가 아니므로 각국에 쉽게 접근하여 지역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 동아시아 정상회담 사례를 보자면, 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중국, 미



국 등을 따로 만나 이 지역의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청한 바 있음. 후진타오, 오바마는 모두 인도네시아의 의견을 경청했고,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음.

- 시진핑, 아베 독트린 모두 동아시아 긴장을 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에 기반한 역내 새로운 아키텍처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 대화 등은 신뢰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이 됨. 예컨대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다뤘던 방법이 하나의 참조 사례가 될 것임. 즉 발리 회의에서 아세안은 중국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즉 군사력 사용 중단, 회의 테이블에서의 대화, 국제법 존중 등을 제시한 바 있음.

존 하워드

- 남중국해를 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항행

의 자유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중국의 주권 주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함. 이는 다른 나라들이 불안하게 보는 요소임.

- 중국의 성장은 세계적으로도 유익. 다만, 하나의 의구심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향후 중국의 고령화 문제. 인도도 마찬가지.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요구 또한 커질 것이므로,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함. 시진핑 주석은 자국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베 총리 역시 같은 것으로 평가됨. 일본의 대중국 투자 규모가 크므로 분쟁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제3자로서 북한에 대한 쟁점을 판단하자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중국은 북한에 진정한 압력을 넣지는 않는 듯함.
- 역사적 문제가 서로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있는데 한중일이 그러함. 경제와 교역이 중요하지



홍석현 수실로 방방 유도요노 후쿠다 야스오 존 하워드 조 클라크

만, 공동된 가치는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 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해 미중 간 긴장이 있었음. 이때 미국은 호주가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이는 한국에도 참조가 될 것임.

Keywords
정상회담, 항행의 자유, 중견국, 신뢰, 한국의 역할

조 클라크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경우 안보와 방위를 위한 제도화된 형식이 여전히 부족함. 예컨대 방위조약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럽-미국 간 대화를 위한 항구적인 장이었음. 특히 동북아시아는 그러한 장치가 부족함. 경험상 폐쇄된 비공식적 회담에서 지도자들 간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봄.
- 다만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함. 양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함. 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기존 관행을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한 국가의 각료가 다른 국가의 각료를 초청하여 한 쟁점에서 다른 쟁점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러한 관행을 쌓는 과정임.
-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긴밀하므로 주도권을 쥐고 중국과 더불어 다른 나라를 이끌 수 있음. 한국이 주지해야 할 역할은 강력한 이웃 국가를 존중하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난국 타개의 해결책은 국가 간 정상회담이며,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함.
- 선-후진국 간 가교 역할은 중견국의 책임임.
- '항행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도는 갈등을 푸는 기초적인 열쇠임.
- 북한문제 해결은 시급하지만, 중국 등 강대국에만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없음.
-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체 제도화가 시급함.

[슈뢰더 전 독일 총리 특별대담]

통독 이후 구조개혁과 한반도 통일의 성공 조건

제주평화연구원·한경비즈니스

진행 안착히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기초연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대담자 권영세 전 주중대사/ 국회 한독의원친선협회회장
 정리 장승규 한국경제매거진 부장

- 독일은 1945년 분단됐고 1949년 두 개 독일이 건국돼 고착됐다. 분단은 나치 폭정과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분단은 40년 이상 지속되었다. 많은 사람이 통일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점에 통일됐다.
- 통일의 초석은 대화의 정치와 동·서독 간 긴장 완화였다. 긴장 완화가 철의 장막을 극복했다. 지난해 독일은 베를린장벽 붕괴 25주년을 기념했다. 분단 극복까지 한 세대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다. 장벽은 베를린만이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이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도 있었다.
- 분단 극복을 위해 '어젠다 2010'을 만들었다. 이것이 통일 후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했다. 통일 후 바로 하지는 못하고 10년이 지나서야 관철했다. 개혁이 너무 늦었다.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 통일 후 10년 만에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게 됐다.
- 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 독일은 통일을 이룬 1990년 이후 10년이 채 안 돼 국가 부채가 약 5000억 유로에서 1조1000억 유로로 배 이상 늘어났다. 노동시장은 구조적 실업이 나타나

고 매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의료보험·연금보험·실업보험은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 국가경쟁력을 잃게 됐다.

- 성공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구조를 슬립화했다. 중소기업은 독일 경제의 중추다. 이들이 자기자본율을 높이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였다. 그 전에는 독일의 중소기업이 국제적으로 크게 활동하지 않았는데 유럽으로, 세계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갔다. 수년 동안 완만한 임금 상승 정책도 펼쳤다.
- 둘째, 노사가 모두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판단했다. 독일은 이원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직업교육을 주로 담당한다. 이원 직업교육 시스템이란 학교와 현장에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것이다.
- 셋째는 제조업 구조다. 독일은 제조업이 강하다. 제조업이 독일 GDP의 24%를 차지한다. 프랑스는 12%, 영국은 16%에 불과하다. 독일 제품은 혁신적이고 지식기반 제품이다. 독일에서 제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 독일의 기간산업으로 지



속 발전하는 분야로 인식된다. '어젠다 2010'이 이를 더 강화했다.

- 개혁은 결코 쉽지 않고,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며, 환영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결단이 필요하다. 인기를 얻으려다 보면 꼭 필요한 일을 못한다. 물론 나라마다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국민경제 상황, 인구변화,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 등이 독일과 다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담]

권영세 '어젠다 2010'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이었나. 슈뢰더 서독은 이미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시장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통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통일 직후 동독 주민은 1800만 명에 달했다. 어차피 새로운 상황이라면 개혁은 빠를 수

록 좋다.

권영세 통일 과정을 잘 관리했다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다.

슈뢰더 후유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다. 동독 지역 철도와 도시 건설 등 엄청난 인프라 투자 기회가 있었다. 사회보장제도도 정비해야 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으로 가겠다"고 외쳤다. 결국 서독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했다. 비용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다행히 동독의 경제 상황이 최악은 아니었다. 한국은 통일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북한 경제는 예전 동독에 비해 훨씬 낙후돼 있다.

권영세 개혁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냈다.

슈뢰더 사민당도, 노조도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 2005년 총선에서도 패배했다. 당 차원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권영세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지고 말았다.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인이 쉽게 권력을 내놓겠는가.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선거 패배라는 리스크는 감내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국가가 첫째라는 점이다. 그다음이 정당이다.

권영세 독일의 '동방정책'이 동독 붕괴와 통일을 촉진했다고 보나.

슈뢰더 동방정책 설계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민당과 기민당의 견해도 달랐다. 헬무트 콜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반대했지만 막상 총리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를 충실히 계승했다. 동방정책이 일정 부분 통일에 기여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과거 동구권 전체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스스로 무너진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독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서독과 동독은 오늘날 남북한처럼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권영세 콘라드 아데나워의 친서방 정책이 통일의 기초가 됐다고 보나.

슈뢰더 아데나워 정책이 통일까지 예견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 서독의 위치를 확고히 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 직전까지 서독의 주권은 상당히 약한 상태였다. 4대 전승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합의가 있어

야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소련과의 관계였다. 당시 헬무트 콜 총리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관계가 아주 좋았다. 콜의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권영세 동독과 소련의 관계에 비해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슈뢰더 동독은 철저하게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다. 주권국이 아닌 소련의 위성국가였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개인적 견해지만 중국은 북한 정부가 유지되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본다. 중국으로부터 평화통일이나 통일 자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통일 후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개혁은 빠를수록 좋음.
-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막대한 통일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통일 후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정치 리더십이 중요함.
-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튼튼한 중소기업 생태계 완비가 필수적임.
- 통일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긴장 완화와 대화의 정치가 필요함.
-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함.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제13차 동아시아포럼 개최식]

비전통 안보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변영

외교부

개회사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
기조연설	에리안 페힌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차관 쑤쉬샹 중국 본부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주아세안 일본대사 무하마드 샤를 이크람 야콥 말레이시아 아세안 담당 차관보
정리	오주희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전문관

제13차 동아시아포럼(EAF, East Asia Forum)이 '비전통 안보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변영'이란 주제로 ASEAN+3 회원국 정계·재계·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21일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식세션에서 외교부 장관을 대신한 개회사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성, 도전과제 및 미래비전 등을 제시했다.

김홍균

- EAF는 2003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출범한 이래, 다양한 분야의 협력증진과 지역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해옴. 특히 정부·학계·기업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동아시아 평화와 변영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동포럼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역통합 노력

-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통합 노

력은 ASEAN을 중심으로, ASEAN+3, EAS, APEC 등 역내 여러 협의체에서 다층적으로 진행해옴.

- 실제로 ASEAN의 지역경제 통합 노력은 양자 간 FTA 체결과 한중일 FTA 협상,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이어져왔고, 그 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의 추진력 발생
- 교육, 관광 등을 통한 역내 사회·문화적 교류도 빠르게 증대하여,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또한 고양
- 아이러니하게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가장 활발했으며, 이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체 구축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기회로 작용함.
- 이때 탄생한 ASEAN+3는 그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달성하면서 동아시아의 단단한 지역협력



체로 발전했으며,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에 대한 도전과 극복 방안

-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이 요원한 희망이자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음. 그 배경에는 △역내 힘의 균형의 변화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여러 갈등과 대립 요소가 있음.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은 진정한 협력의 단절, 곧 '아시아 패러독스'를 경험하고 있음.
- 이는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나 동아시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이 보유한 역동성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실로 안타까운 현상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동북아 지역 내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꾸준히 축적하려는 노력 강화
-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심각하게 분열되었던 유럽은 이제 유럽연합(EU)으로 통합되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1967년 '아세안 선언'으로 출범한 이래 다양성 속의 조화를 통해 공존과 협력을 추구해온 아세안

도 금년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유럽과 아세안의 이런 역사적 경험은 역내 국가 간 공동체에 대한 장기 비전 공유와 실행 의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이제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야 할 때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단계적, 지속적으로 공동체 비전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지역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해당 국가 간 신뢰와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평화롭고 번영된 동아시아 공동체 완성이라는 목표 완수에 이르게 할 것임.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전통 안보 위협

- 국경을 초월하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역내 협력 달성 여부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
- 지역 내 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이 심화할수록 역설적으로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 노출
- 반면 동아시아가 그 어느 지역보다 상호의존성이



김홍균 에리안 페힌 유소프 쑨광상 아이보시 고이치 무하마드 사를 이크람 야콥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것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 수요 또한 크다는 방증이며, 동 분야에서 협력은 정치적 비용이 크지 않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낼 가능성 큼.

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비전통 안보 위협과 역내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모멘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임. 금번 EAF 참석자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실천 가능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함.

에리안 페힌 유소프

- 2003년부터 시작된 EAF는 ASEAN+3 회원국의 정부·학계·기업 대표들이 모여 ASEAN+3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SEAN+3 프레임워크 아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권고 사항 및 2013~2017 워크플랜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함.
- ASEAN+3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임. 특히 이 지역은 상호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비전통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ASEAN에 있어 비전통 안보 문제 해결은 2015 ASEAN 공동체 구축뿐만 아니라 포스트-2015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긴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전통 안보 위협'이라는 금번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함.
- 비전통 안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차원적

인 만큼, 이를 대화 상대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봄. ASEAN+3 국가의 정부·학계·기업 대표들이 모인 금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다자 안보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램.

쑨광상

- 글로벌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동아시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비전통 안보 분야와 같이 역내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협하는 문제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개발이 안보의 토대라면, 안보는 개발의 전제조건이며, 평화와 안정 없이는 동아시아의 개발과 번영은 있을 수 없음.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전통 안보 위협'이라는 금번 주제는 매우 적절함.
 - (신뢰 구축 및 심화를 위한 대화 증진)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 달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 필요
 - (분야별 협력 강화) 지난 수년간 ASEAN+3, ARF, EAS 차원에서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온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아울러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도 함께 시행 필요
 - (역내 경제통합 증진) 많은 국가에 있어 개발은 최고의 안보이며 개발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중국은 역내 경제 및 안보협력이 함께 진전될 수 있도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



[전직 외교장관 초청간담회]

한국 외교의 발전 방향

제주평화연구원

사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발표 및 토론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외교부 장관 유명환 대양학원 이사장/ 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전 외교부 장관
정리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화(CMIM) 협력 등 2020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할 예정

- 13년 동안 EAF는 ASEAN+3의 정부·기업·학계가 대화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으며, 동아시아 협력 발전의 중요한 지원자가 되었음. 앞으로 ASEAN+3 메커니즘 안에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함.

상(breath of fresh air)인 만큼 한국이 동북아의 협력과 화합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진전 △통합 심화 △FTA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노력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임.

무하마드 사를 이크람 야콥

-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만큼 2020년에는 아시아의 총생산이 유럽과 북미를 추월할 전망이다.
-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강대국 간 경쟁구도 및 해양 문제 등으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지정학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 간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은 평화, 안정 그리고 신뢰 구축에 용이한 환경이 아닌 만큼 적대적인 과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축해온 아세안의 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 신선한 발

아이보시 고이치

- 지난해 ASEAN+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ASEAN+3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특히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응해나가는 데 협력을 약속함. 이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전통 안보 위협'이라는 금번 주제는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임.
- ASEAN+3 내 협력 관련, EAVG II 후속 조치 추진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국제기구로 설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외에도, 식량 안보, 관광 및 교육 분야에서 ASEAN+3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제주포럼에서 전직 외교장관들이 한국 외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오늘날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체 등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변화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안을 느끼는 한편 미국은 재균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 외교가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맞을 것인지 주목해야 함.

-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힐 기회이기도 함. 강대국의 세력 전이 속에서 희생되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동북아에서 다자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와 한국의 선택

- 과거보다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판도에 중요한 역할을 함. 한편 이러한 선택을 하기 이전 어떤 지정학적 구도가 우리에게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외교는 남북, 한미, 한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현상 유지와 더불어 현상 변경을 해야 하는 중층적 부담을 안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한편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

-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물론 사실을 좌시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를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 많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함. 또한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따라서 거시적 시각에서 국익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건전한 협력관계를 맺으려는 양국의 노력이 필요함.



천영우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제주평화연구원

- 사회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발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 토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벳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 정리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회담보다 다자적 구도가 필요함.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을 활용하거나 한미일, 한미중 등 다양한 구도의 대화체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임.

Keywords

동북아시아, 중국 부상,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남북관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다자주의, 다자 협력

동북아시아 다자주의의 미래

- 중견국이 다수 존재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동북아에서 다자주의를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북아 다자 대화 및 협력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임.
- 동북아 다자 협력은 북핵문제 등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화채널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되어야 함.
- 동북아 3국(한중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포괄하여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역시 중요함.
- 동북아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다자주의의 선결 조건임. 한국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때 동북아 다자주의가 가능하며 효용성을 발휘할 것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과거보다 위상이 높아진 한국은 동북아에서 다자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일 문제와 관련하여, 거시적 시각에서 국익을 위해 건전한 협력관계를 만들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함. 그 방법으로는 양자 회담보다 다자 구도가 바람직함.
- 동북아 다자 구도 구축의 선결조건은 남북관계 개선이며, 이를 위해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 조태열**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가 복잡해짐에 따라 한국의 외교 현안 및 외교 능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안보 긴장관계는 고조되지만, 다자적 안보협력체 부재로 아시아 패러독스가 나타나고 있음. 즉 상위정치와 하위정치 간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전후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움직임, 러시아의 동방정책 추구 및 동맹국 관계 강화,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등 역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외교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한 상태이고,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므로 한중 관계 증진은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 있음.

- 한미동맹과 한일동맹 역시 제로섬게임이 아닌 상호이익, 즉 공동의 목표, 특히 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관계임.
- 과거사 관련 분쟁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 동아시아 각국이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제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거사를 깨끗하게 청산하자'는 서명운동이 일고 있고,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등 학자적 양심에 따른 예외적인 움직임이 있음.
-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경제 변화를 보면, 미국은 TPP를 최우선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채택하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주도하고 있음.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결성을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고, 그 외 역내 쌍무적 FTA, RCEP, TPP 및 FTAPP와 같은 초대형 FTA 협상 논의가 진행 중임.
- 아시아 패러독스의 근본 문제인 신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상구상을 제안함. 즉 현존하는 갈등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연성안보(핵 안전,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서 점진적으로 경성 안보 이슈로 확대 이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의 대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3자 협력 프로젝트(나진-하산 프로젝트, 신실크로드 추진 외) 정책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원활한 연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함.
- 한반도 통일 3대 원칙은 1) 평화 유지와 평화 조성 간 균형 정책 추구 2)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일정책(북한 주민의 인권 및 생계 개선, 소속감 및 단결심 함양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이웃 국가들과의 조화(국제사회와 인류 전반에 기여)임. 한국은 통일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할 필요가 있고, 남북 모두와 협력하는 국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벤티스 코로

- 외교 문제는 각 국가가 구체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와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함. 그런 의미에서 외교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므로 공통의 이해를 찾아야 하고, 국가 간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중요함. 예를 들어 유럽은 공동 관심사를 찾고,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를 구축했음.

- 최근 열린 재무, 환경, 수자원, 관광 분야의 장관급 회의를 포함하여 한중일 간에는 19개의 장관급 회의가 있고,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3국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해와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북한 핵 문제는 전 세계, 역내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이슈로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해를 같이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음. 역사 문제 등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좀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역할이 동아시아에서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일본의 자위력 및 역내 안보를 위한 공공의 논의를 일본 의회에서 해나갈 예정임. 미일동맹은 이미 굳건하지만,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반면 한일 안보협력 관계는 예상보다 긴밀하지 않음. 한일 양국은 적어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야 하고, 미국이 이에 연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롤프 마피엘

- 독일은 한국의 외교정책이나 한반도 상황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우 신뢰 정치의 가치나 유럽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공감하고 있음. 동북아는 현재 경제협력은 있지만 강력한 안보협력체가 없는 상태이고, 국수주의가 부상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크림사태를 통해 누군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국가 간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 동아시아 대외정책에서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중국이 경제 및 군사적으로 급부상하면서 핵심 국가 이익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영유권 문제 등 긴



나경원 조태열 마크 리퍼트 벤티스 코로 롤프 마피엘

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신뢰 구축 프로세스가 더욱 중요해짐. 정치·군사적 교류가 필요하고, 역내 다른 지역과의 신뢰 구축과 협력, 즉 역동적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유럽의 경험을 볼 때, 미국과의 동맹은 안정성 유지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함. 동맹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듯 역내 안정성의 근간이 되고, 역내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 구축 노력에도 필수적임. 동아시아에서 모든 역내 안보를 담보할 협력적 안보체가 필요함.

- 한국은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북아뿐 아니라 미중 관계의 교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중국을 두려워하기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마크 리퍼트

-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 원자력협정 등 복잡한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임. 한미 관계의 네 분야인 안보, 경제, 글로벌 파트너십, 국민 대 국민 분야에서 신뢰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 FTA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 북한문제는 양자 차원을 넘어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인권을 조망할 기회가 있었음.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1) 동맹 강화 2) 신흥 파트너와의 대화 3) 다자적 아키텍처 구축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

고 있음. 올해 한중 정상 미국 방문은 미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 대국과의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음. 미 해군과 공군의 60%가 2017년 아시아에 배치되고, 공군력의 60%가 2020년까지 아시아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파트너 관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반도의 경우 국방 예산 및 국방 펀드가 집중되고, 최고 장비들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고 있음. 안보 우산은 평화 번영의 근간이므로 계속 유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에 대한 국방비 지출과 관련한 법안은 미 상·하원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는데, 전체 국방비는 6000억 달러 규모임. 국방비 중 내부 인당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향후 군 관계자 보상, 주택·의료 비용 등 총금액은 유지하되,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이루어질 것임.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과거와 비교해 한국 외교는 괄목할 진전을 이뤘고, 동북아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음.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짐.
- 신뢰와 화합의 아시아를 위하여 한국은 결단력 있게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외교정책을 결정해야 함.

환동해 다자 협력

에너지, 교통, 물류, 투자, 관광

제주평화연구원

- 사회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우준모** 선문대학교 교수
세르게이 스바스티아노브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왕용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경제센터 소장/ 국제관계학원 교수
이케가미 히로시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이수택 UNIDO ITPO 한국 대표
데니스 피터슨 텍사스텍대학교 교수
 정리 **박상현** 국방연구원 박사

우준모

- 남북러 협력 사업을 환동해권 협력 사업의 성공 모델로 키워야 함.
-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정보나 상호 신뢰가 부족한 협력 대상이지만 나진-하산 철도 사업 위해 필요

왕용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정책의 공조
- 환동해 협력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
- 역내 협력을 위해 선도 국가 리더십이 필요함. 중국은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
- 중국은 AIIB 등의 협력을 통해 향후 3단계 확대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하는 방안 연구 필요

이케가미 히로시

- 다자간 협정을 통한 환동해권 항구의 발전과 협력을 증진해야 함.
- 일본은 5년 전부터 이 지역에 항만을 확대하려 노력함. 하카타 항만은 성공 사례
- 다자간 합의를 통해 물동량 확보
- 물동량 확보 이후 투자 증대
- 현재 2020년 외국 관광객 2000명을 목표로 중국, 한국 크루즈를 통한 관광에 기대

이수택

- 다자적-다국적 산업지대를 통해 협력을 증대해야 함.
- 환동해권 지역은 산업협력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지역
- UNIDO가 제안하는 신국제협력 모델로서의 산업협력
 - 1 각국의 장점을 활용한 산업단지 설립. 러시아



고상두 우준모 세르게이 스바스티아노브 왕용 이케가미 히로시



이수택

데니스 피터슨

극동에 위치 가능

- 2 산업단지 설립 → 확장(중국 동북성, 북한에도 설립 가능)
- 3 한국의 노동력과 역량, 북한·중국·러시아의 천연자원, 투자는 민간 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

데니스 피터슨

- 학술, 문화, 스포츠 교류를 통해 협력의 장애를 극복해야 함.
- 오래된 도전(남북, 중일 등 양자적 대결 구도)과 새로운 도전(중국의 부상, 아베의 일본, 미러 갈등)이 상존
- 중견국 한국의 역할이 중요
- 현재 활발한 사기업 협력활동과 더불어 학술, 문화·관광·스포츠 교류를 통해 협력 분위기 조성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환동해 국가 간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의 신실크로드정책이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공통점을 찾아내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국제기구, 공공기업, 사기업, 문화·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협력 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 방향을 환동해권 협력을 위한 촉매자의 역할과 촉진자의 역할로 구분하여 우리 역량으로 가능한 사업을 식별하고, 차별적으로 시행해야 함.

아시아의 지역주의 무엇이 다른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통해 본 지역주의

제주평화연구원

사회 **김세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알란 청 싱가포르 난양대 교수
토마스 칼리노프스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중근 전 싱가포르 대사
 정리 **이현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아세안(ASEAN)은 유럽연합(EU)과 달리 아직 정치적 신뢰의 수준까지 가지 못했음.
- 문서상의 수사는 유럽연합 수준의 논의이며 현실적으로는 아세안 웨이(ASEAN Way)에 집착함.
- 정치적 지역주의의 장애 요인으로는 국가주의, 초국적 협력이 아닌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는 소극적 평화 추구 등이 있음.
- 경제적 지역주의의 장애 요인으로는 아세안의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 회피 경향을 들 수 있음.
- 유럽연합은 아시아 지역주의 모델로 적실성 없으나 유럽 통합의 역사적 교훈 존재
- 유럽 통합은 단일한 설계가 아니라 느리고 점진적인 제도 수립 과정을 거쳤음.
- 조화와 신뢰는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됨.
- 유럽연합이 추진했던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과를 잘 살펴볼 것
- 위기가 지역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지역통합의 혜택이 중요함.
- 동아시아의 경우, 역사가 협력보다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제도가 취약하고 역내 국가들이 서로를 시장이 아닌 경쟁자로 바라보는 문제 존재
- 아세안 경제공동체 발전의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단일 시장으로서의 자족성, 둘째 경제성, 셋째 정치적 유사성과 국가 간 신뢰가 충족되어야 함. 첫째와 둘째 조건 충족을 위해 아세안에 국한된 역내 경제통합으로는 부족, 동북아를 포괄하는 확장된 지역주의가 요구됨.
- 유럽연합은 소득과 경제구조가 차이 나는 국가들도 단일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선례
- 독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연합과 달리,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강대국 주도형이 아닌 약소국 주도형 지역통합의 가능성 제시



김세원

이영섭

알란 청

토마스 칼리노프스키



김중근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아세안 각국의 경제 민족주의는 경제통합의 장애물이지만, 자원과 부의 배분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잠재적 도구가 될 수도 있음.
- 아세안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공통 입장 없음. 아세안은 대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실용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지역주의 전망: 미국 주도 TPP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간 경쟁
- 중국 주도 AIIB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으로 1) 한국 기업의 역내 인프라 시장 참여 2) 한국 정부의 역내 인프라 설계 과정 참여와 한국과 관련국의 연결성 강화 3) 장기적 통일 비용 감축 기대 가능
-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해야 함. 동아시아의 다자간 통합협약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가장 대표적 사례이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발전하려면, 규모 확대, 명확한 용자 조건, 실제 납입 자본 확보 필요
- 동아시아 내 지역 금융기구로서 아시아개발은행(ADB: 개발과 원조에 집중)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인프라 투자), 아세안+3(지역 안전망 구축) 존재, 역할 분담 필요
- 한중일 FTA 성공적 타결 시, 아세안+3 국가 간의 메가 FTA 타결 가능성 타진. 현재로서는 한중일 FTA 타결 가능성 높지 않으나 아세안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음.
- 아시아 지역주의는 비현실적 초국가주의를 배제해야 함. 공통 이해에 기반한 기능주의 모델에 기초, 아시아의 독특한 모델 찾아가기

Keywords

아세안(ASEAN),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아시아 지역주의, 유럽연합(EU), 지역통합, 제도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한중일 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견국 외교

해양 안보와 중견국 네트워크

국립외교원

사회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발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샤피야 무히바트 라자라트남 국제연구대학 부학장
토론	캐롤리나 에르난데스 필리핀 전략개발연구원 창립학회장
	김태완 동의대학교 교수
정리	황선희 국립외교원 연구원

- 동아시아 해양 갈등은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으므로 해양에서의 갈등과 분쟁 예방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확보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
- 해양에서의 이해증진에 따라 호주의 인도-태평양,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인도네시아의 해양 축, 인도의 인도-태평양 등 새로운 독트린 제시를 통한 관련국의 입장 재정립이 진행되는 추세
- 해양 안보 논의는 강대국과 중견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이 참여하여(open), 안정적(stable), 정기적인(regular)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peaceful)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자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남·동중국해에서의 긴장은 미국과 중국 간 세력 변화와 경쟁의 결과이므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자, 규범 제정자로서 중견국의 역할 필요
- 해양 분쟁은 각국의 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협력을 추

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해양 커뮤니티' 같은 공동체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 과정에서 중견국이 촉진자로서 기여 가능

- 특히 남·동중국해에서의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행동 규범에 대한 합의의 시급성과 해양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기
-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의 해양 구조, 오염 방지 공동 연구 등 관련국이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기존의 구체적 협력을 통해 협력 습관을 축적해가는 노력이 중요

Keywords

동아시아 해양 분쟁, 중견국 외교, 해양 거버넌스, 해양 다자 안보협력, 위기관리 메커니즘, 규범 제정자, 촉진자



신성원

이재현

샤피야 무히바트

캐롤리나 에르난데스

김태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미타(MIKTA)와 같은 중견국 협의체 참여국(한국·호주·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남·동중국해 분쟁 당사자인 6개국을 동시에 참여하는 세미나를 2015년 중 개최하는 방안 제기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해양포럼 등과 같은 기존 협력체에서의 해양 협력 강화 방안 수립
- 다자 협력체에서 해양 경계와 유연 해양법협약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에서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 특히 중견국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해양 안보 관련 대화 지속을 위해 아이디어 제공자, 규범 제정자로서 역할 모색
- 우선 역내 중견국 간 해양 문제를 식별하고 의제화해 관련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장기적으로 관련국 전체가 참여하는 해양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 수행
- 중견국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 다자 협력체 참여에 따른 이득과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예측해 관련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논리와 비전 개발 및 제시

국제법상 사이버 범죄, 테러 및 전쟁의 규제

국립외교원

사회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발표 데이비드 피들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교수
 토론 리처드 데가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법률고문
 차이추이홍 푸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교수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준구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정리 박미경 국립외교원 연구원

- 사이버 범죄, 테러 및 무력 충돌 등 다층적이고 복잡한 사이버 공간상 불법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국제법이 부재하며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시대 이전 국제법에만 의지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상 불법행위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뿐 아니라 비국가 주체들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국가 간 정치적 이해 대립이 심각함.
- 전문가들은 사이버 무력공격 등의 정의 및 성격에 대한 국가 간 동의가 부족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별 인식 및 정치적 이익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규제를 위한 국제 규범이 당장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다만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 (UN GGE) 제4차 보고서 채택, 탈린 매뉴얼 개정, 정보안보행동수칙(CoC) 개정, 상하이

협력기구(SCO),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정보안보협약(Information Security Convention) 채택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 및 원칙들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이런 가운데 경성법보다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을 통한 규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가 무력을 행사할 경우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은 전통적 의미의 추동적(kinetic) 공격이 없는 사이버 공격의 경우에도 추동적 공격과 동일한 피해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Keywords

사이버 공간,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사이버 국제 규범



신각수 데이비드 피들러 리처드 데가니에 차이추이홍 임종인



박노형
유준구

- 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경우 행위 주체가 불분명하고 국가 귀속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의 세부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민간 공격 대상과 군사적 공격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구별의 원칙은 사이버 공간 적용 시 민간과 군사적 대상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
- 사이버 시대 이전에 핵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억제력이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적·비국가적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 및 방위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억제력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논의되고 있음.
- 다만 사이버 억제력은 보유만으로 억제력을

지닌 핵 억제력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사이버 억제력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함에 따라 사이버 군비 경쟁 현상이 과열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이버 무기까지 개발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사이버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용이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이버 범죄, 테러, 무력 충돌을 금지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나, 현재 동북아의 경우 역내 협력 정도는 국가별 인식 및 정책 방향성의 차이, 제도적 리더십 부재,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동북아 원자력안전과 핵안보협력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 방안

국립외교원

- 사회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 발표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
-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 토론 황일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평가실 책임연구원
- 정리 김자희 국립외교원 연구원

-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 분야 지역협력을 위해 ASEAN, SCO, APEC 등 기존의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 간 공조 방안 및 UN 등의 국제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을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의 이중적(주권적 요소와 글로벌 공용재) 특성에 맞추어 적절히 유추, 적용되는 것이 필요함.
- 사이버 무기의 경우, 피해의 효과 측면에서 실제적 내용, 목적, 수단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이버 기술의 특성상 군축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적 이용 금지에 초점을 두고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후 대응에는 기술적 한계 및 국가 간 공조 제약 등이 있어, 구체적 국제법 및 인도법 적용 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요구됨.
- 사이버 협력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용이한 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이버 범죄, 테러, 무력 충돌을 금지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현재 동북아 역내 사이버 분야의 지역적 협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비하므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역내 협력기구 및 논의 기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 최근 UN, NATO, SCO, BRICS 등 지역기구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 문제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필요함.

동북아 원자력 협력의 성과 및 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북아 지역 원전 밀집 현상에 따라 역내 원자력 협력 필요성이 부각됨. 한중일 3국 간 원자력 합의와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TRM+)의 출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신뢰와 협력의 부재로 상호 핵 협력의 잠재적 편익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역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여 동북아 핵공동체의 구체적 비전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협력 가능한 분야 모색

△전력 부족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사고 위험성 등 동북아 3국은 원자력 분야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협력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여 3국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함.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원자력정책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원자력안전, 핵안보, 연구개발, 인적교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이행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 협력의 장애 요인 극복

동북아의 원자력 협력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원자력 협력의 공동 이익을 포함한 강력한 비전 제시 △원자력 협력을 위한 역량과 재원 등 수단 확보 △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과 전략 개발 △동북아 원자력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 △실천적 과제 개발 및 추진 △협력의 제도화 방안 등 정책 개발이 요구됨.

원자력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 ① 원자력 협력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 조성, 공동 연구센터 설립, 역내 핵

Keywords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원자력안전, 핵안보
2016 핵안보정상회의, 지역협력, 원자력정책

광복 70년, 남북 민간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



신정승

장원형

이선진



원동욱

평중시엔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추진이 구체화될수록 이면에 숨겨진 외교안보적 의도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강해지고 있음. 단순한 물류량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전략적 의미를 면밀히 살펴봐야 함.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추진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비치기도 하나, 이 구상이 미국과의 전략적인 충돌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노멀에 부합하는 경제성장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적 로드맵이라면 인프라 투자 및 자원 조달을 위해 설립된 AIB, 브릭스개발은행, 신흥실크로드기금 등 새로운 금융기구의 투명성 있는 운용이 요구됨.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의 참여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유지되어야 함.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맞물려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한려 협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국, 몽골 등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신흥실크로드 공동 구축 등과 같은 계획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견국 등 비슷한 국가들을 연대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임.
- 유라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만이 아닌 미국, 러시아, EU, 한국 등 주변 국가들도 다양한 구상 및 외교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구상들이 정합성을 갖고 협력적 메커니즘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자간 정책 조율이 요구됨.

제주특별자치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사회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노베르트 에쉬보른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정리 염규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 부장

독일의 통일 과정이 한국에 제시하는 시사점

노베르트 에쉬보른

- 남북한과 비교해 독일의 분단은 덜 잔혹했고, 더 많은 접촉이 있었으며, 더 많이 협력했음. 그러나 독일의 분단 상황은 남북한보다 훨씬 복잡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승 4개국(소련·미국·영국·프랑스) 때문이었으므로, 독일 통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국내 정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각각의 단계들을 구분해야 함. 독일 통일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끝난 기나긴 정상화(normalization) 과정, 그리고 짧지만 매우 흥분되고 중요한 두 번째 과정인 1989년 11월과 1990년 10월 사이에 이루어진 독일의 공식적인 통일, 마지막으로 서독과 동독 사이의 내부적 통합과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 계획 과정이며 이는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임.

- 정상화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과거로 고통받기도 하는 등 길고 지난한 과정이며, 이 과정은 점진적인 공식적이고 개별적인 단계의 접촉, 긍정적인 교환과 협력 확대, 이전에 대립하던 여러 정당/분파(parties) 사이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호 의존을 이끌어낼 수 있음. 정상화는 정보와 협력의 흐름을 증가시켰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살상하던 정부가 유지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음.
- 1989년과 1990년 변화의 시대에 동독을 혁명으로 특징짓던 인식이 바뀌었음. 통일은 그 자체로 연결(joining)이고 자발적이고 합의된 합병이므로, 결코 '흡수'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음. 왜냐하면 그것은 불분명하고, 연방공화국에 속하기를 바라는 수백만의 동독(GDR) 국민들에게 모욕적이며, 시스템 전환으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임.
- 독일의 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는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남북한은 독일과 같은 길을 걸을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함. 하지만 확실한 것은 통일 이전에 남과 북이 교류를 통해 '정상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이며 내적으로 먼저 통합되어 그 혜택을 양측이 공유해야 함. 독일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수상은 "재정적인 통일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역사적 소명을 저버린 국가"라는 말을 남겼음. 통일된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민간교류의 역할과 과제

조한범

- 서독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2조 원(21억 달러)을 동독에 지원한 반면 지난해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196억 원임. 올 초 북한 주민의 70%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유엔의 발표가 있었고, 결핵으로 매년 북한 주민 2500명이 사망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음. 최근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이는 지역적인 분석이고, 김정은 정권 들어 더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한국의 현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거론하고, 통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에 대한 열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은 나아지지 않고, 북한 역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현실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민간의 접촉이나 인도적 지원은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북한 정권으로 갈 것을 우려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발상임. 과거 동독 정부는 서독의 지원을 정권 안정을 위해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동독 주민들이 동독 정부를 불신하

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기억해야 함.

- 현 정부가 8·15광복 70주년을 맞아 비정치성을 전제로 남북 민간교류를 무제한 허용하고, 아울러 쌀과 의약품 등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지원은 결국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게 만들 수 있음. 분단 70년을 맞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며, 민간의 비정치적 분야의 식량, 의약품, 인도 지원, 기술 지원 등은 남북 모두 감당할 수 있음. 일정한 형태의 교류협력 패턴이 형성되면 이를 막기 어려움. 결국 통일 이전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가 통일의 첩경이 될 것임.

지자체 간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 협력

최용환

-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모두 남북 교류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11개 지자체는 자체 기금을 조성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한 경험도 있음. 기초자치단체 중 40여 곳 역시 관련 조례를 구비하고 있고, 5억~10억 원의 자체 자원을 확보한 상태임.
-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한 곳은 제주도로, 1999년 제주도가 감귤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비로소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음. 제주의 감귤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며, 이는 감귤 농가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아울러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경기도 등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음.
- 남북 교류에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자체장의 업적 쌓기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음.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조건 등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동기가 되고 있음. 향후 지자체 차



최대석

노베르트 에쉬보른

조한범

최용환

김영윤



이승환



고성준



원의 남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변수에 대한 취약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특정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일방적 지원의 성격, 실무진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임. 개별 지자체의 특성과 필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이를 돕는 민간의 역할 분담, 민간단체의 전문성이나 재정 등 역량 강화도 필요함. 지자체나 민간이 남북 교류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간접적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남북 교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자 돌이킬 수 없는 추세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성사됨으로써 남북

교류 역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음.

김영윤

- 독일은 오랜 세월을 걸쳐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 통일을 이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 서독 정부는 민간교류를 막지 않았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독과 교류를 이어왔음. 통일되기 전에 460만 명의 동독 국민이 서독으로 넘어왔는데, 이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통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줌. 민간교류는 통일의 원동력이자 추동력이므로, 우리 역시 정부가 민간 교류를 통일의 과정으로서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역시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야 함. 북한에 대한 불신을 버리



북극 및 동아시아 해역의 평화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
축사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발표	준자오 중국 저장대학교 교수
	방호삼 전남대학교 교수
	프랭크 칭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논설위원
토론	이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성기주 제주해양본부 경비안전과장
정리	양병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원

고 그들을 굴종시키겠다는 마음을 배제해야 비로소 통일의 가능성이 보이므로 정경분리에 입각하여 통일 문제, 남북관계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

이승환

- 핵심은 민간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므로 전임 정부처럼 민간교류를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됨.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 있어 과도한 정부 혹은 국가 주도성에서 벗어나 협약과 타협의 정치 영역으로 바꾸어야 하는 만큼 정부당국의 정책과 시야의 변화가 필요함. 협약의 정치를 남북문제와 통일 문제에서 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가져가는 변화가 있어야 민간교류가 발전할 수 있음. 중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발전할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함.

고성준

- 남북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민간 차원, 지자체 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므로 정부가 민간교류에서 손을 뗄 게 아니라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나 규모의 사업은 민관의 적절한 협력 시스템을 갖춰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임.

- 북극해 지역의 모호한 권리와 북극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최근 북극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와 투자 등 정책 방향, 전략에 대한 소개
- 동중국해, 특히 한국·일본·중국 간 불법어업 현황과 이를 제도적으로 조절, 관리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 제도 필요성 제기 및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시아 어업권 등 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제시
- 일본과 중국 간 영토 분쟁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영토 분쟁 현황을 보고하고, 북극해 항로, 즉 동아시아 해역과 북극해 분쟁에 동시 적용 가능한 거버넌스 모색

홍기훈

- 북극 및 동아시아 해역의 평화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과 관련해 인류 발전을 위해 그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것임. 과거 빙하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던 곳에 접근하게 되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해졌음. 과학기술을 이용해 북극해와 동아시아 해역을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 세션에서 그 해결책과 방향을 모색함.

준자오

- 기후온난화에 따라 북극의 이용 방안과 이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으나, 현재 북극에 대한 권한이 불분명하고 이해가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 중국은 북극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향후 북극 지역 자원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항로 개발과 북극 관련 거버넌스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Keywords

북극해 항로(NSR), 동아시아 해역 분쟁, 북극해

성기주

- 북극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전략에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함. 중국이 노력해서 거래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5개 연안지역과의 정보 공유, 한국과 일본 등 관심 있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 이에 대한 중국의 협력 방향은?

준자오

- 중국은 몇 차례 탐사에 성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이를 공유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공동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거래비용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임.

방호삼

- 동북아시아, 서해 지역 내에서의 불법어업 행태 및 특성에 대한 현황 보고와 아울러 이러한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관리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 설명.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 관리와 국가 간 분쟁 억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동감시, 단속을 뛰어넘는 다자간 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동남아시아의 다자간 관리제도 사례에서 보듯 한중일 간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

이희일

- 동중국해, 남중국해 내 영토 분쟁 등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다자간 관리제도 구축처럼 불법어업 관리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방호삼

- 일부 지정된 지역에서 한중이 공동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한 적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임. 국가 간 관리제도(RESIME)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동으로 단속, 순찰 등을 하면서 나



름대로 제도를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는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이며, 한 나라의 의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많은 아시아 국가가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프랭크 칭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영토 분쟁,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열도 영토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를 중재할 국제중재심판원과 유엔해양법이 있음에도 영토 분쟁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중국은 유엔해양법이나 국제중재위원회의 성명을 거부하거나 이에 반감을 보이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만큼 신뢰와 조화를 통해 새로운 아시아를 만

들어가야 하는 시기임.

이희일

- 방호삼 교수가 제안한 다자간 관리제도를 민감한 이슈인 영토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가?

프랭크 칭

- 국제중재심판원의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나 중국은 국제중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독도 분쟁도 비슷한 문제로 양자간 협상이 아닌 다자간 협력, 국제중재재판을 거쳐 이를 따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김현수 홍기훈 준자오



방호삼 프랭크 칭



이희일 성기주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청중)

- 동아시아 지역 불법어업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선 주변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하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임. 한중일 관계, 바다에서의 조업 등은 어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 나라만 질서를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한중 FTA에서도 이슈였는데, 구심점이 없음. 중국, 일본, 주변 국가 간 수산자원과 불법어업을 관리할 수 있는 수산자원 관리 기구나 기관이 필요함.

■ 방호삼

-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한 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선 대화의 시급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동 정보교류 센터를 포함한 기관이 필요하며, 이는 역내 수산자원 관리센터로 발전될 수 있음. 또한 자금 확보가 중요하며, 조직의 법적 지위나 소속도 검토해야 할 것임.

동아시아의 미래

역사, 권력, 이익, 정체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재단

사회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발표 **나안 찬다** 예일 글로벌 온라인 편집장
G.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리 **김현진** 동아시아재단 <글로벌 아시아> 펠로우

나안 찬다

-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아시아는 태양이 뜨는 곳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지리적 개념이다. 아시아는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7~8시간 시차가 나는 광대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존재했는지, 공동체가 설립된 적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계절풍을 타고 아랍 여행자들을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무역 및 상거래가 확대되었던 적이 있고, 집단적인 노력으로 경작이 가능한 벼농사에 집중했던 점, 다양한 종류의 향신료, 식량, 채소 등이 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을 대변한다. 일부 국가들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불교도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요소 중 하나다. 약 7세기부터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교역로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연결되어왔다. 물론 민족국가를 중시하는 경향도 존재하지만, 과거부터 아시아 국가 간 동질성이 있었다. 20세기 중반 일본의 팬아시아주의나 대동아공영권 개념이 식민주의와 제국

주의로 연결되기도 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개념을 천명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도 각자의 꿈을 가져야 한다며, 공동 성장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점과 관련해 아시아인들이 최근 베이징에서 일어나는 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꿈을 지역의 꿈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해상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 먼저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과연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확장을 꾀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표하며, 중동에 집중해온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 회귀' 정책을 지지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길 바란다. 현재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역내 국가는 많지 않다. 역내 국가 간 경제무역 의존도



존 들러리



나안 찬다



G. 존 아이켄베리



문정인

는 심화되고 있지만, 복잡한 국내정치, 민족주의 부활로 역내 국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시아에는 비전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아시아에 더욱 많아져야 한다.

G. 존 아이켄베리

- 자유주의와 국제화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되어갈 것인지 생각해보면 분명히 기존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각 국가가 지금까지와 같이 정치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뤄낼지에 의문이 제기되며, 앞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국가도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는 인기를 구가하며 새로운 질서 및 규범을 만들고, 독일과 일본을 포함해 현재의 국제질서를 구축해 자유무역, 다자주의, 다양한 국제기관, 민주적 연대 등이 발전해왔다. 1990년대 들어 느슨한 연대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된 국제질서가 도입됐고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에 많은 기여를 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전후 모범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핵화 산업국가 이뤄냈다. 따라서 부상 중인 중국도 책임의식을 갖고 기존 질서에 편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국제관계가 더 분화되어 여러 권역이 탄생되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 일본은 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뤄내고 세계경제 질서에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뿐 아니라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자유주의 질서의 모델로서 정치·경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최근 중국도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국가적 규모에서 빈곤을 퇴치했으며,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독주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기존의 거대한 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동반 쇠락이 우려되기도 된다. 향후 국제관계에는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필요하



다. 미국 정부도 새로운 프로세스와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좀 더 깊이 고려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 경제성장 정체,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갈등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앞으로도 역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자유주의 이외에 현재 딱히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다자주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제

도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자본과 상품 거래, 전문성의 공유를 통해 국가들은 모두 이득을 볼 것이다. 인권 및 권익 보호, 법치주의 확립, 사유 재산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도입되어야 한다.

- 국가 간 안보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국가주권 및 국제화 개념이 아시아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왔다. 세계질서는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도 구축되어 지역에 맞게 변화해가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적 측면에서 많은 원칙이나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정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미국이 서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중국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일본에서도 서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가장 큰 적이었던 일본을 미국이 제압한 것이 그 예다. 중국은 성장 과정에서 분명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취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미중 내러티브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공산당 정권 차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완전히 편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정권의 정당성과 통치력 확보를 국제무역과 경제적 성공에서 찾으려 한다. 중국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지만, 기존 국제질서 하에서 성공이 가능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자유주의 질서는 분명 변화해야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도 중국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이에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높은 수준의 자유주의는 모두에게 분명히 이익이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이행한다면 더 책임감 있고 친근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들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기후변화, 재래식 무기 확산 방지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는 이들이 자국 내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개입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점만 분명히 해야 한다.
- 해양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관련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을 통해 견제함으로써 계속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 이는 제로섬게임이 될 뿐이다. 과거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의를 이끌

어낸 사례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영토 문제 해결에 힘을 이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쟁 해결 방식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EU의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지지를 보냈음을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이를 포용하는 데 실패했고, 중국도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국가도 강압적인 제국주의화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 아시아 지도자들이 아베 정권처럼 움직이지 말고 조금 더 영웅적인 행보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결단 등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국가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제를 혁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소프트파워를 구가하며 차세대 1등 국가로 인정받을 때, 정상국가화를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과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위험하겠지만 분명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정인

- 종전 후 경제적 상호의존성,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가능케 했으며, 이는 놀라운 자유주의의 실현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은 세 가지 점에서 쉽지 않은 길이다. 첫째, 역내 지정학적 담론의 부활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대륙주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해양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정학적 사고를 통한 국가전략 수립은 히틀러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일본도 해양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어 분

열 조장이 우려된다. 현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 내 공동체 설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의 방위 전략도 이러한 기조 위에 수립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던 민족주의의 부활은 중국이 강해진 해군력을 바탕으로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로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일본에서는 국내 여론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맥아더가 종전 후 심어준 자학주의적 사관을 버리고 식민주의에 잘못이 없으며, 서구 제국들도 식민지를 구축했었고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사과하기는커녕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 등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며, 미국과의 전쟁은 일본의 존엄을 보존하고, 서구의 아시아 정복을 막으려 했던 것임을 강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남하했을지 모른다는 역사수정주의적 가설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 극우민족주의 기조는 직면한 해상 영토 분쟁 중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주의 경향은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국가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역대 공동체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은 예측 가능성,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비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내정치와 선거에 국가 정책이 지나치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유독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이 또한 국내정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정치가 안정되지 않는 한 범아시아적 공동체 설립은 어렵다.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갈등, 민족주의 문제, 각국의 민족주의가 상호작용하는 지점, 이러한 담론들이 각국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잊지 않을 것이며, 한일 관계에서 이를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고정변수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압박을 행사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 또한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질서와는 다른 아시아 특유의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역대 리더십을 구축하려면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중국이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하고, 기존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아시아 내부에서 덜 위협적인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아시아 국가 간에는 분명 비정상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존재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유주의, 법치주의, 국가 간 협력이 상존하고, 생각보다 국가 간 소통 통로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분열의 요소가 있지만 통합의 가능성도 있다. 국내정치가 아시아 국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관리 가능한 요소다. 따라서 국지적 국내정치에 매이지 않는 비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리더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유럽처럼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민의 전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지도자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청중석의 조 클라크 캐나다 전 총리가 국내정치 현안에 얽매인 지도자가

Keywords

판아시아, 일대일로, 남중국해 해양 분쟁, 아시아로의 회귀, 아시아 민족주의, 리더십, 자유주의 국제화, 법치주의, 다자주의, 동아시아 질서, 동아시아 공동체, 지정학, 정상국가화, 해양 분쟁, 일본 극우주의, 동아시아 국내정치, 중국의 부상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비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언급)

- 냉전시대 일본의 부상을 우려하던 시각이 현재 중국으로 옮겨간 것이 아닐까. 중국의 부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의 과정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문제가 있고, 정책 추진에서 순자의 주장처럼, 미덕, 헤게모니, 무질서를 동시에 기반으로 한 복잡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브레튼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아시아 여러 민족은 민족국가 수립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과거부터 아시아 국가 간 공동체意識이 존재한 경우가 있었고, 지난 세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선언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중국이 역대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경 분쟁 및 해양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해야 하며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기존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데 진정성을 보여야 함. 현재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지지하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원하는 것으로 분석됨.
- 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복잡한 국내정치와 민족주의 부활이 상호협력을 어렵게 함.
- 아시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더욱 많아져야 함.
-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주의 외에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다자주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
- 새로운 제도 수립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자본 및 상품의 거래, 전문성 공유를 통해 역대 국가들은 모두 이득을 볼 것이며, 인권 및 권의 보호, 법치주의 확립, 사유재산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함.
- 중국은 성장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취했으며, 기존 국제질서 아래 성공이 가능했음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대외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함.
- 높은 수준의 자유주의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이행한다면 더 책임감 있고 친근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서구는 이들이 자국 내 권위주의 정권 유지에 개입

우즈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AIIB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세계 분쟁지역에 PKO도 꾸준히 파병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경우도 많다. 동시에 중국은 해양 갈등을 해결하는 데 헤게모니적 모습을 보이며 무력을 과시하려 한다.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중국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해군력 증강을 통해 견제하고 계속된 해양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는데, 법치주의에 기반한 합의를 이끌어냈던 전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 문제 해결에 힘을 이용하려 하는 성향은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으며, 어느 국가도 강압적 제국주의화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됨.
- 종전 후 경제적 상호의존성,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가능케 했지만, 최근 역대 지정학적 담론이 부활하고, 지정학적 사고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만연하면서 아시아 공동체 설립이 어려워짐.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은 예측 가능성,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치 지도자가 비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내정치와 선거에 국가의 정책이 지나치게 좌지우지되어 역대 공동체 설립을 지연시킴.
-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계속적이고 결정적인 고정변수로 감안해야 하며, 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찾아나가야 함.
- 중국이 역대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택해야 함.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하고, 기존 국제질서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아시아에서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것임.
- 아시아 지도자들이 합의에 기초한 진취적인 행보를 취해주기를 촉구함. 국지적 국내정치에 매이지 않는 비전 있는 지도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유럽처럼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새 비전과 도전

동아시아재단

사회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좌교수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창립자 겸 소장
하산 위라주다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전략리뷰> 편집장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미래

김태환

2001년 처음 열린 제주포럼 주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그 기본틀이었고, 본 세션을 조직한 동아시아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출판 프로젝트로 올해 준비하고 있는 대주제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임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무엇보다 아시아 패러독스와 다자 안보 매커니즘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과연 동아시아 공동체는 그저 당위론적 미래이자 희망이고 실현 가능성 낮은 꿈에 불과한 것일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경제·안보공동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의 실현에 있어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논의하겠다. 먼저 안충영 교수부터 지역 경제협력 주제 발표를 부탁한다.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물

론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머지않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구축되리라 기대한다. 일단 안보 분야에서 6·25전쟁 이후 이 지역에 전면전이 없었고, 양자 혹은 다자간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일정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은 제조 분야의 핵심 지역으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93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이란 책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이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 대외지향적이고 시장친화적인 환경 구축, 인적자원 투자 강조와 성과 중심의 포상제도 등을 꼽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일종의 공동체 소속감, 유대감이 생기게 되었다. 예기치 못한 국제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으며 일종의 유대감이 생긴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아시아 채권



김태환

안충영

무티아 알라가파

피터 헤이즈

하산 위라주다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 이러한 지역 간,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가 빠르게 부상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개의 메가트렌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TPP와 RCEP이 부딪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두 개의 메가트렌드가 통합되어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APEC을 뛰어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미래

무티아 알라가파

동아시아 역내 많은 국가는 오랫동안 정치적 개체로 존재했으나, 국민국가의 개념으로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다들 비교적 신생 국가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도 1949년에야 제대로 된 국민국가를 건설했다. 안보공동체 구상에 앞서 먼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뚜렷한 지역공동체가 없음에도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글로벌화되는 경제체제가 그 배경일 수 있다. 이렇듯 미래의 안보공동체는 국민국가 건설 과정뿐 아니라 전략적인 변화의 모습이 현실적인 지역구조에 반영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안보공동체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다. 공동체가 있어야만 평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역공동체 없이도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지금 시점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내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작은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면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역지력은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것이며,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제한된 안보공동체가 가능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6자회담과 같은 프로세스와

Keywords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비핵화지대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매우 진화된 프로세스로 단기적 성과가 아닌 40~50년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 없는 동아시아의 미래

피터 헤이즈

지역 안보공동체와 관련해 네모난 박스를 동그라미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봤다. 핵문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다. 의도를 가지고 한 도시, 국가, 지역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핵

문제의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 보유 국가들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고, 또 동시에 핵 비보유 국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경제 분야와 반대로 안보 분야에서는 원시적인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는 핵무기의 전면적 사용 금지에 대해 논의할 프레임워크가 없다. 중국은 '억제'를 강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미국은 억제라는 위협을 이용해 어떤 행동을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그동안 한국은 기회주의적인 북한의 강권에 이용돼왔다. 오늘날 핵 위협 시스템을 보면 냉전 시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다. 미국과 소련의 양자 관계

가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이 둘러싸고 있고 또한 이차적으로 유럽의 핵보유국 간 의견이 다르고 나아가 핵을 보유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 비핵화 지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핵보유국(미국·중국·러시아) 사이에서 핵 위협을 잘 조절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 되는 것은 북한이다. 따라서 비핵국가인 한국, 몽골, 일본과 핵보유국 간 규정화된 규칙을 만들어 비핵지대를 건설해야 이 지역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핵보유국들이 이를 수용을 한다면 핵문제, 핵 위협을 극복하고 최소 2~3세대가 지난 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비핵지대 관련 조약으로서 후쿠시마 핵안보지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3자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해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점차 핵을 포기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평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장애물: 지정학, 민족주의의 담론 그리고 국내정치

하싼 위라주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직까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사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화합은 2004년 아세안(ASEAN)에서 비롯되었다. 아세안+1 아세안+3이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아이디어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수 국가가 제한된 범위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균형적이며 포용적인 동아시아를 지향하기 위해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것을 구상했다. 이 회

의가 2005년 12월 16개국이 참여한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였다. 이후 동아시아의 개념을 둘러싸고 경쟁이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발리에서 동아시아 정상 회담을 개최하며 동아시아의 개념을 확대해 18개국(미국과 러시아 포함)으로 정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동아시아를 규정짓는 범위를 두고 13, 16, 18개국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동아시아는 단계별로, 블록별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EU의 로마조약과 다르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하향식 접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향식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한중일 3국은 아직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말대로 일본이 독일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모범을 따라 과거를 사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6·25전쟁으로 이는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아직 전쟁 상태다. 이는 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북한을 다섯 차례 방문했는데 북한 외무상과의 만남에서도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느꼈다. 어떻게 6·25전쟁을 완전하게 종전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공동체 건설에 앞서 국제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토 분쟁 해결 역시 중요하다. 공동체 건설에 있어 이러한 핸디캡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의 선례를 거울 삼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아세안 공동체를 모델로 동아시아 지역의 더 큰 공동 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상관관계

안충영

경제협력이 지속되다 보면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엔 안보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

북한의 미래

핵, 인권, 사이버 전쟁의 함의

동아시아재단

사회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토론 **돈 그레그** 태평양세기연구소 소장/ 전 주한 미국대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존 스웬슨-라이트 체트햄 하우스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관/ 케임브리지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교수

에이브러햄 김 몬태나주립대학 모린앤마이크 맨스필드센터 소장

정리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미국-쿠바 수교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이상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핵 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천명한 김정은 정권은 나름대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 대한민국 호전적 태도에는 변화가 없고, '인권 불량국'이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북한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경로가 보여주듯이 그러저럭 버텨나갈 것인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기반해 북한을 둘러싼 이슈와 북한의 미래전망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래: 핵, 인권, 사이버 전쟁의 함의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현영철 북한 인민 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됐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와 오히려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통한 권력 쟁취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해석과 달리 현영철 처형은 사실상 권력 제2인자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암투에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돈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현영철 처형설에 관한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문제 삼았다. 과거 미국이 대북 방첩 활동에서 수많은 오류와 실패를 겪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국정원의 국회 보고는 마치 정보부가 통신사 역할을 하는 듯 보였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기관의 발표에는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다 면밀한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김 소장과 존 스웬슨-라이트 교수도 이번 현영철 처형설과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고위관료 숙청을 토대로 권력기반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김정은의 고립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전

주변 강대국들이 원하는 프레임워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강국 중 하나가 통일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티아 알라가파

통일은 한국인이 결정해야 한다. 다른 강대국의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통일이란 글자가 한국인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이 꼭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꼭 통일이 아닌 두 나라가 협력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길은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이야기지만 공동체는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다르며, 본인도 공동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막연하게 공동체 건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유럽은 탈냉전 이후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단일 시장 및 단일 통화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방위 정책을 포함한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이행하며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원국 국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과 함께 역내 인적·물적 교류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했음에도 정치적·외교적 갈등과 경쟁으로 공동체 구축이 진전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오랜 꿈의 실현을 두고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논의했다.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AIIB와 같은 물류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AIIB는 중국의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자간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후쿠시마 이후 다자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핵 위협을 감소시키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티아 알라가파

경제와 안보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신기능주의를 단순 적용하면,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있어 좀 더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을 끌어내면 된다. 하지만 경제 상호의존성이 큰 중국과 대만만 보더라도 경제와 정치, 안보는 별도의 문제다. 둘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국들은 과연 한반도 통일을 바랄까?

피터 헤이즈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입장에서 안도감을 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지 여부는 한국과 북한의 희망과 역지력에 달려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군 주둔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미군 주둔 여부는 중국이 사실상 주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반도 통일을 통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주변 경제개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자원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종합적으로



격 무산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돈 그레그 대사는 북한이 반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취소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이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반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 철회를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채택에 이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제기에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로 봤다. 정세현 전 장관은 반 사무총장이 개성 방문 전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비판하고 개혁 개방을 촉구한 발언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하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화를 끌고 나가려 한다면 끊임없이 유엔 제재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포기를 통한 국면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러햄 김 소장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로 가는 기회의 문을 열어둔다는 전략 아래 북한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고통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전략적 인내 정책의 골

자인데, 문제는 북한이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김 소장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분쟁 해결이 아닌 문제관리 성격이 강한 정책으로서 당면한 문제를 옆으로 밀어놓고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돈 그레그 전 대사도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면서 북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식으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스웬슨-라이트 교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국면이 점점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대화 없는 정책으로 북한에 핵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상태를 방관한다면 북한은 2020년까지 20~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현실이 되면 북한의 핵 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 위기 타개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절실한 가운데, 핵 협상 무용론에 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핵 협상 무용론이 협상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한 정당화 수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정세현 전 장관은 핵 협상 무용론의 근본 원인



김영희 돈 그레그 정세현 존 스웬슨-라이트 에이브러햄 김

을 산군복합체 이론에서 찾았다. 북핵 위기가 사라지면 이와 관련된 군수시장이 사라질 경우를 상정한 것이 산군복합체 이론이며, 북한의 정책을 산군복합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청중으로 참관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또한 산군복합체 이론에 공감을 표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 산군복합체와 관련하여 네오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김 소장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또한 청중 발언을 통해 산군복합체 이론을 북핵 협상 무용론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을 믿고 무장해제 하자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아프리카가 정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 아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에이브러햄 김 소장은 인권 문제는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자국민 처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도덕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북한은 인권 문제에 있어 불량한 전력이 잔상으로 남으면서 평화적으로 인권 문제를 협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존 스웬슨-라이트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 해

결을 위해 북한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원조 공여국들을 활용하는 접근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비롯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동유럽 인권 개선에 기여한 헬싱키프로세스를 예로 들며,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분야 협력을 통한 지원을 레버리지로 하여 인권 개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 그레그 전 대사 또한 이러한 지원책들을 통해 북한 스스로 인권 개선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이나 인권 문제 등 난제들로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정세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베세토 컨센서스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응이 담담한 편이었다. 존 스웬슨-라이트 교수는 일본이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한중일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의 일본도 아시아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일본몽'과 '중국몽'이 충돌한다는 가정하에 한중일 프로세스의 순항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한국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돈 그레그 전 대사 또한 베세토 컨센서스가 제대로 확립된다면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이고, 그사이 북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중으로 참관한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 정세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조건했다.

지정학을 넘어서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동북아 정치를 향하여

동아시아재단

사회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G.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런샤오 푸단대학교 중국외교학과 교수

정리 김현진 동아시아재단 <글로벌 아시아> 펠로우

캐슬린 스티븐스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광복 할 성장의 이면에 뛰어넘어야 할 많은 지정학적 과제가 있다. 미국이 이들 국가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역할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사례로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동북아 긴장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인도의 동반성장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고려해 현상유지(status quo)를 할 것인지, 지정학적인 재균형(rebalancing)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새로 도입되는 정책은 투명하고 포용력 있으며 신뢰를 주어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 군사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외교력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위협적인 부상이 우려스럽지만, 국가 간 편가르기가 아닌 6자회담 같은 다자적 구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변화 움직임과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상국가

화를 추진하고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기대한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보고, 한일 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갈등 해소를 촉구하거나 복잡한 과거사 자체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한일 관계에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가 정치외교적 현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중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바란다. 현재의 갈등 상황이 이익을 공유하는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지워버릴 수 없고 잔존하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소통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역사 문제가 안보, 지역협력 등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가 역내 환경, 인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좀 더 쌍무적이고 다자적인 관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거대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동맹관계와 제도에 변화를 주어야 함에도, 미



국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 종전 후, 국제 안보체제가 중요한 기여를 했고, 중국도 수혜국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군비 증강, 영유권 및 과거사 갈등, 해군력 증강과 관련하여 미국이 상황을 좀 더 긴장감 있게 보아야 한다.

G. 존 아이켄베리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변화하는 역할을 볼 때 중국과 미국은 복잡한 관계가 지속되겠지만, 과거 냉전 모델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수정주의 국가를 추구하기보다 기존 국제질서 안에서 성장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중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공산당 지도제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유주의, 개방, 투명성을 추구하고 금융 및 무역을 비롯한 국제체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편입돼야 한다. 권위주의적 권력 모델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에 직접 압력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지만, 중국과 경쟁하며 동시대 패권국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면서도, 중국과 미국의 장점을 취하고자 좀 더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역내 민주주의, 법치주의, 투명성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리더십을 행사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중국 주도의 AIIB와 관련해, 중국은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영향력 증대를 꾀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문제다. 브레튼우즈 체제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며, 중국의 확대된 역할은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 중국이 AIIB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첫째, 중국 내 잉여 생산 능력을 대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꼽힌다. 물론 중국이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좋은 이웃 국가로서 선의를 보이고자 하는 점도 있다. 둘째,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보다는 AIIB와 같이 다자적·지역적 플랫폼에서 목소리를 내는 점은 다자

주의 원칙 안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참여국에 긍정적이며, 중국이 좀 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입되어가는 것이다. 미중 간 경제무역 분야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며, 양국 관계가 투명성,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원칙 아래 발전해야 한다.

일본의 변화 움직임과 관련해, 전후 일본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을 유지하며, 비핵국가지만 강국으로서, 국제 안보 및 공적개발원조(ODA), 유엔체제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소프트파워를 유지하며 차세대 슈퍼파워 국가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하드파워를 추구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 최근 대외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변화 외에 동북아 지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미사일 및 핵 실험이 계속되는 한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 지역은 정치·경제적으로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 분명하다.

무티아 알라가파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적, 지정학적, 다른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전체적인 부상이라 할 수는 없다. 과거 일본이 성장에 과도하게 집중했듯이 현재 중국의 부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현대 주권국가로 성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지정학적 관점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의 부상만이 아니라, 남북문제, 양안 갈등,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주권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럽의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국경선의 변화가 있었지만, 티베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독립 문제는 헌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주권국가 수립에 있어서 아시아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하나의 민족국가가 아닌,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여러 주권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온 메커니즘을 새로운 변화에 적용해나아가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균형을 유지했고, 대규모 전쟁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소규모 해상 분쟁 외에 앞으로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영향력이 아닌, 힘의 균형을 통한 역지력의 일환이며, 국가 간 신뢰, 화합, 공동체 설립뿐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중국을 통한 국제공동체 설립은 쉽지 않으며, 여전히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를 통해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적 현실주의가 유력하다. 역내 국가 간 공동체 설립 및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해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지배력은 지속될 것이며 일본과 미국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억제력 행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과거 일본을 과대평가했듯이 지금은 중국에 과도한 관심이 쏠려 있음을 비판한다. 미일 관계가 아태 지역 경제 및 안보에 미칠 영향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린사오

중국은 경직된 비합리적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혁명적으로 수정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기존 질서 안에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많은 이웃 국가들도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며, 의결권 및



박철희 캐슬린 스티븐스 G. 존 아이켄베리 무티아 알라가파 린사오

지분 문제에 대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비롯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함에도 기득권을 가진 미국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중국은 AIIB를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할 뿐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도 적극 참여하고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일본, 한국과도 협력해가며 생산적인 논의의 제도화와 국가 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의 '부상'이라 하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강국이었으며, 지금은 '재부상'하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세기 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부강한 국가를 이룩해왔지만,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변화된 힘의 균형과 전략적인 질문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합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중국인들은 아베 총리가 다가오는 종전기념일에 어떤 연설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중일 관계는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는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Keywords

동아시아, 지정학, 중국의 부상, 일본의 정상국가화, 한일 갈등, 동북아 과거사 갈등, 동아시아 영유권 갈등, 미중 관계, 수정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방, 투명성, AIIB, 브레튼우즈, 민족국가, 힘의 균형, 미일 관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성장 외, 지정학적 과제 해결에도 관심이 필요함.
-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이 현상유지를 추구하는지, 수정주의 국가인지에 관심을 갖고, 투명하고 신뢰를 주며 중국을 포용할 수 있는 다자주의 구조 수립 등 안보, 경제, 외교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추진함에 있어, 역내 국가 간 안보 및 경제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 차원에서 관계 개선과 과거사 및 영유권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중국은 자유주의 및 개방, 투명성의 요구를 수용해 국제질서에 좀 더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역내 민주주의, 법치주의, 투명성 원칙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야 함.
- 중국이 AIIB와 같이 다자적 플랫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자주의 원칙하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뿐 아니라, 남북문제, 양안 갈등, 인도·파키스탄 갈등 등 역내 민족국가 수립에서 나오는 다양한 갈등관계에도 주목하고, 지난 수십 년간 지역 평화를 유지해온 메커니즘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나아가야 함.
- 역내 국가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설립도 중요하지만, 평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을 통해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평화를 유지할 대안임에 주목해야 함.
- 중국에만 과도하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일 관계가 역내 상황을 변화시킬 카드임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아니며, 선진국 위주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원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일본이 변화하는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적응하고 올바른 역할을 찾으려 노력해야 함.

제주포럼의 선구자들

회고와 전망

동아시아재단

사회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토론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전 외무부 장관
돈 그레그 태평양세기연구소장/ 전 주한 미국대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전 국가정보원장
스펜서 김 CBOL 회장 겸 최고경영자/ 태평양세기연구소 창립자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제주포럼의 출범 배경과 의의

원희룡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다. 14년 전 해안을 가진 몇몇 선구자들이 제주가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2001년 첫 제주평화포럼이 열렸다. 그 후 제주포럼은 내실 있는 발전을 이어가 초창기 외교안보를 통한 평화에서 경제, 문화, 환경, 에너지로 평화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왔다. 오늘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포럼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주춧돌을 반듯하게 세워주신 공헌자들을 패널로 모시고 제주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포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탄생 비화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문정인

1990년대 제주의 큰 화두였던 국제자유도시를 만

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시급했다. 국제자유도시와 평화, 이 두 가치를 합친 것이 평화의 섬이라는 아이디어였고 여기서 제주포럼이 출발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던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해서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을 만들자는 의도도 있었다. 특히 첫 제주포럼이 열린 2001년은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던 시기로, 미국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로 제주포럼을 활용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석을 이끌어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에도 평화라는 아이덴티티는 고수되었고 초창기 연세대 국제대학원,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오늘날 제주평화연구원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특히 제주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서 중앙정부인 외교부가 지원하고, 그 밖에 현대자동차그룹 정

몽구 회장이 만든 외교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인 동아시아재단, 윌리엄 페리 전 국무장관, 돈 그레그 대사를 섭외한 해외 민간단체 PCI가 합심해서 만든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임동원

제1회 제주평화포럼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그 후 1년 동안 진전된 남북 관계, 향후 전망을 골자로 연설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제주포럼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을 당부 하셨다.

제주평화포럼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하려는 한미 공동 노력을 배경으로 출범했다.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는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정책 공조를 추진했다. 특히 당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이 우려한 두 가지 안보 현안이 해결되며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첫째, 북한이 1994년 합의한 제네바 결의안을 지키지 않고 평안북도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의혹이 미국 조사단의 시찰을 통해 잘못된 정보임이 확인되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합의하면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로 고조되었던 긴장이 해소되고 양국 간 미사일 협상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위 한반도 프로세스라 일컫는 페리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다.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 8·15 이산가족 상봉, 시드니 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끊어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기공식(9월 18일) 등 감동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한편 2000년 9월 제주도에서는 북한 특사 김용순을 맞아 비공개 남북특사회담이 열렸고, 보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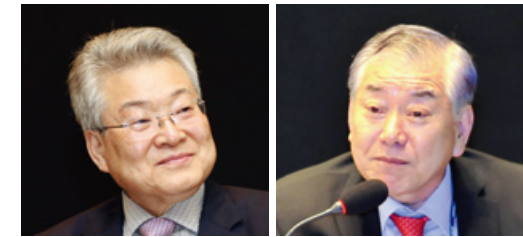
원희룡

공로명



돈 그레그

임동원



스펜서 김

문정인

남북국방장관회담(9월 24일)과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9월 27일)에 이르기까지 한 달 동안 남북회담이 세 차례 연달아 개최되며 제주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재조명받았다. 또한 10월에는 북한 특사 조명록이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북한 지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북미공동코뮤니케'(10월 12일)를 채택했으며, 뒤이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10월 23~25일)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가졌다. 이렇듯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페리 프로세스)가 활기를 띠며 밝은 미래가 전망되는 가운데 제1회 제주평화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주포럼 1회와 2회 사이 미국 부시 대통



령이 집권하며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부시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심지어 이라크 다음으로 북한 침공 의사를 밝히며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행히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발표했다.

당시 나는 특사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만나 그

간 오해했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남북 관계 원상회복 협상을 이뤄냈고, 이후 4월 북한에서 돌아와서 문정인 교수의 부탁으로 제주포럼에 참석해 페리 전 국무장관, 돈 그레그 대사 등과 평화를 위한 토론을

Keywords

제주포럼 탄생 배경과 의의, 평화의 섬 제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북한 참여 유도 국가 정상 참여 필요, 네트워킹 창구, 새로운 어젠다 제시 임팩트

이어갈 수 있었다.

원희룡

스펜서 김 회장에게 물겠다. 어떤 인연으로 제주포럼과 관계를 맺었으며, 초창기 PCI가 많은 도움을 준 배경은 무엇인지, 또 향후 제주포럼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기 바란다.

스펜서 김

제주도는 친구인 문정인 교수의 고향 방문을 목적으로 처음 오게 되었고, 당시 우근민 전 도지사를 소개로 만나 그 인연으로 제주도 경제특별자문관이 되었다. 제주도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하와이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나는 외국인 유치 이전에 한국 사람이 방문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컨퍼런스 센터를 제안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 내 호텔은 평일은 텅 비고 주말에만 사람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제회의 주최가 시급했다. 또 당시 민간 주도로 국제행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민관이 함께 하는 행사로 더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 같아 뿌듯하다.

제주포럼에 대한 비교론적 평가

원희룡

임동원 전 장관님께서 미국 정권 교체 과정에서 촉발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제주가 이를 해소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귀중한 사실을 증언 해주셨다. 다음으로 공로명 전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1회부터 10회까지 개근하신 데 감사를 표한다. 제주포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유와 전직 외무장관으로서 지금까지 제주포럼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공로명

문정인 교수의 초청으로 처음 제주포럼에 참석하

게 되었고, 제주포럼의 공동 주최 기관인 동아시아재단의 이사장이자 전직 외무부 장관의 자격으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사실 제주도는 1991년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간 한소 정상회담이 열리면서부터 평화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주포럼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2001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열리게 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전직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등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은 흔치 않았다.

중국 하이난 섬의 보아오포럼은 경제에 치우쳐 있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싱가포르의 상그릴라포럼이 안보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반면, 제주포럼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대화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어느덧 10회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햇수로는 14년째다.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쯤 되었는데 이런 제주포럼이 대학생, 대학원생이 되도록 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제주의 역할

원희룡

그레그 전 대사님 역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제주포럼에 가지는 개인적인 특별한 애정과 그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대사님은 북한을 여섯 차례나 방문해 북한에 대한 남다른 안목도 가지고 있다. 제주포럼에 대한 소회, 의견과 더불어 제주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한다.

돈 그레그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제주도는 1973년 처음 방문한 이후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반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 매번 올 때마다 다양한 방면으로 제주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가시적인 성

과를 얻는 듯해 기분이 좋다. 특히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온 것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그분의 생명을 두 번 구해준 적이 있는데 납치 당시 구해드렸고, 이후 구명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취임식에도 개인적으로 초대해주었고 미국의 한인사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탁하셨다. 그 밖에 남북 관계 후일담을 이야기하자면, 클린턴 행정부 때 올브라이트 장관은 방북 이후 김정일을 만나본 소회로 현명한 사람이라 평가했다.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악명 높은 언급 덕에 미국과 북한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 그때 나는 조금이나마 관계 개선을 시도해보고자 개인적으로 김정일에게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썼다. 북한 정부에서는 방북 신청 이유를 물었고 개인적으로 김정일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2주 뒤 정식으로 초청했다. 지금 돌아보면 미국 무부 역시 이 같은 개인적 북한 접촉을 내심 반겼던 것 같다.

방북 당시 김정일이 내게 한 질문은 첫째 왜 아들 부시는 아버지 부시와 다르냐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다 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답했다.

두 번째로 김정일은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의 경우 전임자와 그 정책 기조가 전혀 다른데 국가 운영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나는 민주주의가 원래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후 우리 사이엔 많은 유머와 유익한 대화가 오갔다. 이처럼 내가 북한을 여섯 차례나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북한과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닫혔던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주도가 남북대화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부상하고, 그 평화의 씨앗이 제주포럼에서 심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제주 포럼의 가시적인 업적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

공로명

오늘날 트랙1 주도의 포럼 및 국제회의는 많다. 제주포럼은 트랙1.5 즉 반관반민 차원의 역내 다자 간 대화 채널의 물꼬를 튼 국제 포럼으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 10회 동안 주요 국가 역대 총리가 대부분 거쳐 갔으며 그들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포럼은 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포럼이다. 화룡점정(畫龍點睛)이라고 용의 밑그림은 잘 그려놓았으니 이제 눈을 그려 넣는 작업이 남았다. 평화포럼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러한 대화의 장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북한이 의혹과 걱정을 덜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한반도의 평화가 더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정인

다보스포럼에 교수위원으로 8년간 참석했다. 그간 여러 국제 포럼에 관여하며 지켜본 결과 포럼 외교가 공공외교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포럼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 국내에도 인천,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단절되었다. 행정부가 바뀌면 지속되기 힘든데 제주포럼은 10회가 되도록 이어온 점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한다.

둘째로 포럼이 잘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다를 만들어야 한다. 백화점식 다양한 어젠다를 다루는 게 바람직할지 혹은 평화나 경제에 특화시켜야 할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처럼 어젠다가 다양하면 많은 사람들과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제주포럼의 정체성을 잡아갈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포럼은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다보스포럼에 돈을 내고 가는 이유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함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이슈가 아닌 평화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넷째, 포럼은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다보스포럼이 유명한 이유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다. 제주포럼 또한 그간 의제와 담론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참석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제주포럼에 오셔서 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제주평화연구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연구원을 보충하고, 연구비 지원(지방정부, 중앙정부)을 늘려 국가적, 세계적 연구기관이 되어야 제주포럼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돈 그레그

두 개의 상반되는 그룹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제주 오기 전 서울에 24시간 머물렀는데 그동안 들은 북한 관련 이야기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처럼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는 미국의 탓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접점을 찾는 의미에서 남북한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고 이게 시발점이 되어 남북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원희룡

사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에 북한 측의 참가를 수차례 요청했다. 처음에는 4월 말 군사훈련을 끝내고 이야기하자는 연락이 왔고, 군사훈련이 끝나자 행사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으며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통보가 왔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7~8월 백두산-

한라산 생태 연계 연구 및 관광개발, 감귤 보내기 등 다양한 대북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 중이다.

공로명

개인적으로 한반도 북한 핵문제는 남북 간 직접 해결보다는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북 간의 대화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한다. 원칙은 이리한데 구체적으로 각론 부분에서 어떻게 시행해나가는지가 커다란 과제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감귤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원희룡 도지사의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

문정인

제주포럼은 어느 한 도지사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도지사들의 합심으로 이어져올 수 있었다. 일부에선 제주도가 갈등과 분열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놀라운 성과다. 개인적으로 원희룡 도지사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래의 비전을 본다는 것이다. 제주포럼이 제주도뿐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하며 재임 5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원희룡

오늘의 귀중한 말씀을 초석으로 삼아 제주포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모색이라는 목표로 출범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2001년 제1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역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포럼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2015년 제10회 제주포럼을 맞아 지금까지 걸여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반도 통일의 경로

기회와 도전적 과제

동아시아재단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전 국가정보원장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창립자 겸 소장
 정리 **강한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국내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반도 통일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 없이 남북한은 상호 비방, 견제하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정치, 외교안보, 군사적, 경제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로 가는 데는 어떤 기회와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단 70주년을 맞은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길은 통일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이른바 한반도 ‘통일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통일, 어디까지 왔나?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3년간 6·25전쟁이

후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가 3000여 차례 발생했다. 그 와중에 북한은 핵 기술 개발을 지속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1979년 당시 150~200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미국은 한반도 핵 딜레마에 빠지면서 1992년 2월까지 한반도 내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다. 또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 방안 25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핵 위기 해소 및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졌지만 고비 때마다 이어진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정책 등으로 남북 간 대화 단절 및 북한의 고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 그 기회와 도전

지난해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상되는 통일 경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자체 붕괴로 인한 통



문정인

김태영

임동원

캐슬린 스티븐스

피터 헤이즈

일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법으로는 남북 합의 통일이 1위로 꼽혔다. 한반도 통일이 참고할 수 있는 예로 독일식 통일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동·서독과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핵으로 인해 발생한 한반도의 비대칭 군사 능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한미일 공조체제가 확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한이 북한에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이 바라는 방식의 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무엇보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를 언급하며 통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본합의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은 프로세스임을 강조하면서 완전한 통일에 앞서 교류협력을 통해 사실상 통일과 다름없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에 동감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 통일은 선택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과거 남북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통일 방안에 대한 남남 합의와 대북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렇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은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다.

북핵 문제, 해법은?

반면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북핵 개발 위협을 강조했다. 헤이즈 소장은 현재 북한은 팜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보유한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러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방지하면 10년 후에는 북한이 상당한 위력의 핵탄두 및 핵탄두 운반 기술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가 늘어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이 배가되면 화해는 불가능해지고 특히 북정권 붕괴 시 핵무기를 인질로 한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제안했다. 우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이 잘못된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동북아 협력의 틀을 조성하여 비적대적 관계를 공식 선언하고 한국에서 몽골에 이르는 동북아 비핵지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



동북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공동체의 선결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사회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발표 우츠미 아이코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거자오광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우성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리 윤선화 동북아역사재단 행정원

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전 장관은 북핵 문제를 미북 적대 관계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한 '북핵 개발 중지 조건을 내세운 미북 관계 정상화'가 아닌 '미북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정책 전환이 미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북핵 개발의 원인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 평가하고 선례에 비추어 관계 정상화 시도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여러 난관들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한반도 통일의 길 위에서 미국은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스티븐스 전 대사는 과거 부시 행정부나 현 오바마 행정부 모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일련의 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통일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철저한 안보 태세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선제조건을 내세우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평화 무드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괄적인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 체제가 자리 잡게 되고, 이는 북한의 안보 위기감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성민

동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부상과 함께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현상을 보여 일각에선 '아시아 패러독스'를 제기함. 근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만 역사 갈등이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함.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는 역사 분쟁의 상징이 되어왔는데, 상대국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이 역사 교과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음. 다행히 한중일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

우츠미 아이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샌프란시스코조약에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음. 한일합병조약의 무효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인은 대부분 도쿄재판,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을 통해 역사 청산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함. 일본

에서는 식민지, 식민지배라고 하지만 한국은 강제 점령이라고 하므로 일본은 이런 용어를 받아들여야 함.

거자오광

문화 공감대는 첫째 공통의 역사 연원과 문화 전통, 둘째 서로 다른 사회, 풍속과 문화, 셋째 공동 발전의 미래를 기초로 하는데 동아시아는 이런 문화 공감대의 기초를 갖추지 못했음. 특히 몽골의 침입과 임진왜란 이후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공통성이 많이 약화됨. 근대화를 거치면서 일본은 중국을 철저히 멸시했고 청이 명을 대체해 왕조를 수립하자 조선은 청을 오랑캐라 칭하면서 소중화사상을 주장함. 17세기부터 동아시아는 정치·문화적으로 공동체의 기초가 사라졌고, 이는 야스쿠니, 센카쿠, 고구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됨.

도시환

세계적 역사학자와 저명인사들은 위안부 문제에



최운도 우치미 아이코 가자오광 도시환 우성민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지적함. 특히 양심 있는 일본학자들을 보면서 역사의 정의는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됨.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이며 일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협약, 헤이그협약 등 자국이 가입한 국제법을 위반했음.

Keywords

문화공동체 재건, 전후 처리, 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적 과제, 역사 화해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동아시아 역사문화 공동연구 협력기구 설치
- 일본제국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국가주의 철학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 사고의 법리 재정립이 필요함. 국제사회 공동 규범으로서 국제법 법리는 정의 구현을 향한 소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로 정립해나가는 것임.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정립을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을 모색해야 함.
- 지리적 접근성은 문화공동체, 경제 보완성의 필수요소가 아님.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반성하고 융합에서 분리에 이르는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동북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공동체의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사회 노기식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발표 미마키 세이코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교 교수
- 추사오보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
-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정리 남지연 동북아역사재단 행정원

미마키 세이코

일본이 왜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도넛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음. 현 아베 정권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며 안보를 중시함. 헌법 개정, 안보 관련법 개정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문제시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역협력 재정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역사 문제임. 예를 들어 2012년 한일 양국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이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해 결렬되었음. 이 일은 일본이 한국인의 불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함.

첫째, 보통국가 일본을 위해 역사적 화해가 필수 조건임. 둘째, 악조건을 깨기 위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 먼저 정부 차원을 넘어 학자, 일반 시민 간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현재 아베 정권이 보여주는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의 역사가들을 아군

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여성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한 논의를 학자, 일반 시민 사이에서 할 수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개인적으로 지난해 독일·폴란드 화해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는데, 젊은 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역사적 화해에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했음.

또한 미일 간 역사 인식을 확인하는 것도 주효함. 미일 간 역사적 화해가 가능했다지만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 미국은 여전히 원폭투하가 정당했다는 인식이 있어 미일 간 과거사를 극복했다고는 볼 수 없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에 관한 연설을 접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민들이 그의 인식에 크게 공감함. 물론 인식 차이는 좁혀야 하지만 미래비전을 함께 구상함으로써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예가 한일 관계 타개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임.

마지막으로, 8월에 발표되는 아베 담화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내용이 명기될 것인지가 논점이



되고 있음. 현재 일본 국민의 74%가 고노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 매체도 아베 총리가 침략을 인정하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민 의견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추사오보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해 복잡한 현재에 직면해 있음. 세계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몇몇 국가 사이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한반도 주변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힘에 의한 지역 협조 체제가 없으며, 특히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음. 이렇듯 지역 간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배경에는 역사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한 예로서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계승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태도

를 들 수 있음.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서는 일본 내에서 담화를 다시 검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전쟁 피해국에 대한 일본의 성의를 느낄 수 없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아베 총리를 보면 정치인들의 행위가 국가 종교가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고, 포츠담선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일본에 대한 주변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되고 있음. 일중 간 역사 문제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한중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는 데에서 기인함.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중국에 대한 인식보다 나은 정도임. 이처럼 동북아 지역 역사 문제는 현재 동북아 지역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문제, 동북공정 문제를 두고서도 중한 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3국 사이에 역사적 인식의 차이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1933년 루쉰은 전쟁 중에 일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역사 화해를 바라다면 그러한 인식이 출발점일 것임. 한중 무역 규모가 올해 3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영토 갈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며,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한중 양국이 이런 문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함. 과거 역사에 대한 화해가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양국 청소년들도 한중 간 역사 화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역사적 화해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한중일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거의 없음.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을 보는 관점을 중국이 이해하고, 중국도 한국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상대국을 생각하기 때문임.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불신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상대방을 위협적으로 보는가 하는 점으로 양국이 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함. 제주포럼 주제가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이듯, 한중일 3국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각국의 다른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화해로 나아가야 함.

서현주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하나의 배경으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미국은 유엔 차원에서 인신매매의정서가 채택되기 직전인 2000년 10월 11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인신매매 철폐를 위하여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지국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각국 정부가 이러한 인신매매를 철폐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미 국무

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인신매매에 대한 전 지구적 감시에 나서 매년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1년부터 각국의 실태를 1, 2등급, 2등급 주의와 3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에 인도적이거나 교역 관련 지원 이외의 것을 제공할 수 없고, 해당국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재원을 마련할 때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음.

이처럼 개별 국가 차원의 이행 감시 체제를 구축할 만큼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미국은 위안부 문제를 이러한 인신매매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음. 아베 총리는 방미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의회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매춘 제도’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국무부 논평에서는 ‘일본군의 여성 인신매매’라고 표현함으로써 시행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점이 아베 총리의 말과 다름.

한편 아베 총리는 미국 사회에 대해 그들과 인식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일본 국내 지지자들에게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영어의 ‘human trafficking’ 또는 ‘trafficking in persons’에 해당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人身賣買’와 ‘人身取引’ 두 가지가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인신매매 문제를 다뤄온 일본 NGO인 The Japan Network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에 따르면 ‘人身賣買’는 2000년 이전에도 사용되던 용어로, 여성의 성적 착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의가 불명확하지만 착취적인 노동과 장기매매 등 새로운 과제를 포함하지는 않음. 반면 ‘人身取引’은 2000년 인신매매금지외의정서 채택 이후 사용된 용어로, 성적 착취만이 아니라 강제노동, 예속, 장기매매 등을 포함함.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사용하는 ‘trafficking in persons’의 공식 번역어로 ‘人

身取引'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아베 총리가 인터뷰에서 '人身賣買'를 사용한 것은 강제를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식적인 정의와 연결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아베 총리의 거듭된 발언은 우선 인신매매를 시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일본군과 정부의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음. 아베 총리의 발언은 위안부 개인이 자유의사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군과 정부의 관여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큼. 그러나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소 설치, 운영과 위안부 이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과 강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관현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은 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부분임. 아베 총리도 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되고 있는데도 그 본질을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베 총리 발언이 시사하는 인신매매와 무관하게 동원된 수많은 위안부 피해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임. 1942년 일본에 점령당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억류소에 수용되었던 네덜란드인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위안소로 이송되어 일본군 위안부 될 것을 강요받았음.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에 설치된 네덜란드 임시군사법정은 이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어, 1948년 스마랑 지역 위안소 개설 책임을 맡았던 일본 장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일본군 장교와 위안소 경영자들을 처벌했음. 일본군이 침략한 중국 산시 성과 하이난 섬에서 일본군이 중국인 여성을 강제 납치, 연행하여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로 둔 채 연일 성폭행을 반복하는 행위, 소위 '위안부' 상태로 만든 것은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는 사실임. 따라서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수많은 위안부들의 존재를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갈등을 넘어 화해를 이룬다고 할 때 화해는 용서나 치유처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강조하는 것임. 만행이 있고 난 후 실행되는 화해라는 도전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하려는 것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화해는 자행된 해악을 공적·제도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함. 이러한 화해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화해는 그 진상을 드러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과거에 대해 어떤 합의점을 이루고 미래로 진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에 공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말과는 달리 '인신매매'란 단어의 해석에 시간을 할애해야 함. 이 단어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임. 성폭력과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고 아시아에서 평화와 우의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편견 없고 솔직한 인정이 절실히 필요함.

차재복

국제관계 차원에서 볼 때 동북아 역내 협력 과제는 주요 관계국인 중국, 일본과의 역사 및 영토 관련 대립이 해결되어야 가능함. 2015년 4월 한일, 중일, 미일 간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여한 미일 국무장관 회담은 4월 말 아베 총리의 방미를 준비하는 회의였음. 고위급회담 결과 아베 총리가 침략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 일본의 대외 전략적, 미일 동맹 강화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임. 비슷한 시기에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일중 무역촉진회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으며, 4월 22일에는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30분간 환담해 이를 계기로 중일 관

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1997~98년 이래 미일 간 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 대상이라고 견제하는 발언이 있었음. 미일 간 동맹을 강화하는 배경을 중국이 탐지했지만,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으로선 일본이 차지하는 지리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함.

중국을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론을 내세우나, 필리핀이나 베트남과의 갈등,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 등을 겪으면서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확대하는 데는 모순이 있음. 2014년 4월부터는 시진핑 주석의 외교 행보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음. 지난해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서 시진핑의 새로운 안보 구상이 드러났는데,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져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함. 시진핑은 이어 이웃 국가 몽골을 단독 방문했는데, 여기서 '단독'이 중요한 이유는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 장쩌민 주석 집권 당시에는 주변국을 단독으로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 이후 11월 말 시진핑-리커창 등이 주축이 된 전당공작회의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체제를 확대, 운명공동체론을 발표함.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중국은 동아시아와 유교, 남아시아와 불교,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 동북아시아와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당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임.

중일 관계는 근대 이전에는 '강중약일' 구도로,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조공, 책봉 체제였던 데 반해 근대 이후인 메이지유신 후에는 '강일약중' 구도로 바뀌었. 이후에는 침략국·피침략국, 선진국·개도국, UN 원조를 주는 나라·받는 나라 구도였다가 1971년 중일 국교 정상화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면, 중일 관계가 역전된 것은 2010년 이후부터지만, 현재는 대등·평행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새로운 대칭형 관계라고 보고 있음. 이 관계에서 고대부



터 근대, 21세기인 현대를 짚어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전망할 수 있음.

2008년 후진타오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후쿠다 총리와 중일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명기한 성명을 발표했다. 2005년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를 연속 참배하면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거셌는데 3년 후 전략적 호혜관계를 선언한 것임. 그런데 2010년 9월 7일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이후 중일 간 관계가 갈등관계로 변해 2011년 9월에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센카쿠열도를 도쿄도가 매입하겠다고 발언함. 그때 노다 정부가 센카쿠열도 세 개 섬을 국유화함.

3국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경우, 역사수정주의가 중단되어야 함. 특히 교과서를 통해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않은 역사를 주입하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해야 함. 중국의 경우, 자국 국익뿐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역내 갈등 관리에 책임이 있음. 한국의 경우, 2015년 3월 한중일 외교 장관회담이 열린 만큼 한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해 중일을 포용해서 3국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3국 간 문제는 지난 20년간 일본의 국력이 약해지고, 한



노기식 미마키 세이코 추샤오보 서현주 차재복

국의 경제력이 상승했으며, 중국이 급부상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 기틀이 되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함.

[질의응답]

서현주 미마키 교수에게 질문하겠다. 8월 아베 담화가 고노 담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차재복 미마키 교수에게 질문하겠다. 주일 미국대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지를 방문한 것 예로 들었는데, 그것은 미일 역사 화해의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원폭투하의 배경과 원인이 존재하는데도 희생자가 따랐기 때문에 미국이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종전 과정에서 배경을 건너뛰고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다. 추샤오보 교수에게 질문 하겠다. 중국의 주변국 중시 외교가 사실인지, 베이징대 학자로서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최운도 추샤오보 교수에게 질문하겠다. 동아시아 협력과 화해도 좋은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 건설 사업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협력도 도모하면서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은 남중국해 사업을 계

속할 것인가?

미마키 위안부 개인 인권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세계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아베 담화가 고노 담화를 계승할지에 관해서 일본 시민의 반응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안 돼 지금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아베 총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외로 나는 낙관적으로도 보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을 밝혀두고 싶다는 의견이다.

추샤오보 중국의 주변 외교에 대한 입장은 남중국해 문제도 주변 외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먼저 '외교'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외교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외교란 아무런 모순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성립 이후 여러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평화 공존 원칙을 확고히 했다.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주변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발전을 이뤘는데 중국인의 노력, 국제적인 환경이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게 이용됐다. 아태 지역에서 1999년 이후에는 갈등이 크게 없었던 만큼 평화 발전의 시대가 도래한 이래 중국의 발전은 평화적 분위기를 탄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이후 중국의 외교는 주변국이 가장 중요하고, 대국과의 관계, 다자 외교는 우리의 무대가 되고 있다. 주변국을 외교의 무대로 보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가 목적을 갖고 주변국 외교

에 대한 기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은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같이해야 다른 역내 공동체에 대응할 수 있다. 목적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서양학자들은 남중국해 정책이 변화하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지만 나는 남중국해 정책은 주변 외교의 틀 안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갑자기 남중국해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남중국해에 관해서 필리핀, 베트남도 갑자기 대응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중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주변에 경쟁국들이 있지만 반드시 경쟁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중국해나 다오위다오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시아로의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대국의 꿈은 외부의 압력을 받아 분출된 반작용이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서현주 미마키 세이코 교수의 발언처럼 위안부 문제가 한일 외교 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 문제라는데 공감한다. 아베 총리 발언을 비판한 이유도, 위안부 희생자 문제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희생자가 발생한 한국, 동남아로 제한하려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중국의 사례를 말한 것도 한일 간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행한 성

Keywords

보통국가, 도넛 외교, 외교, 아베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한중 FTA, 역사 인식, 동북아 협력, 위안부 인신매매, 중일 관계, TCS

폭력 문제이고, 현재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나 무력 분쟁하 인권 침해라는 면에서 지적하고 싶었다.

차재복 거자오팡 교수는 유럽의 현상을 동북아에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추샤오보 교수가 말한 대로 모순이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한일 간 혹은 중일 간 많은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역사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은 역사 갈등이 일어나면 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데, '선 역사 화해, 후 안보협력'이라는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현재 담보 상태에 있는 한중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역사 화해를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역사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역사적 갈등을 넘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안부'에 대한 진상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인신매매'란 단어의 해석에 시간을 할애해 이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함.
- 동북아 3국 역내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중단,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책임감 회복, 한국의 한중일 가교 역할이 중요함.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역할을 토대로 한중일 협력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문화와 유엔 개발 목표

한국국제교류재단

개회사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사회	마틴 프라이어 주한 영국문화원장
발제	올가 비스카 아담 미초키에비츠 인스티튜트 부원장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펠리페 드 리옹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
정리	이서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

공공외교 네트워크 회원 기관의 글로벌 기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례 및 계획

■ 아담 미초키에비츠 인스티튜트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를 통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는 이러한 목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브라질, 터키, 인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 문화를 증진하고, 폴란드 예술가들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음. 특히 해당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폴란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폴란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All of Poland Reads to Kids' 프로젝트 시행 예정임.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문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임.

■ 한국국제교류재단(KF)

- 지난 20년간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데 주력하면서 이를 통한 쌍방향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전시와 공연예술 등 주로 한국의 예술과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기도 함.
- 2013~2015년 수행한 여러 프로그램 중 베트남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세안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이 대표적. 많은 베트남 청년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선 공연, 음식 공유 등 나눔의 시간을 가짐.
- 2015년 계획 중인 프로그램은 'KF·POSCO Global Bridge Program'과 '하모니 어린이 합창단'으로 미술과 음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경험하게 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프로



유현석

마틴 프라이어

올가 비스카

윤금진

펠리페 드 리옹

그램에 기여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히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임.

■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에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예술이 있음. 아쉽게도 현대적인 교육 시스템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 공동체의식이 강화될 수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는 매우 큰 강점을 가짐.
-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분석적·조직적 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런 교육은 인간적 측면을 억제하는 것임. 지금은 효율적·창의적 가치가 중요한 시대이며, 정보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창의적 인식은 문화적으로 소통할 때 가능한 것임. 따라서 아시아의 민족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해야 함. 이는 아시아적 가치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이 문화와 접목되어야 함.
-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창의적 다양성을 확장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담론의 공유는 궁극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체성을 강화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함.



Keywords

문화, 예술, 문화교류, 공공외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지구촌 공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협력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문화예술이 △환경 개선 △초등교육 보급 △여성 인권 보장 △빈곤 완화 등 글로벌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슈를 부각시켜 혁신적인 대안을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음.
- 특히 공공외교 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그 영향력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글로벌 공헌 프로그램이 공공외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음.
- 문화예술이 가진 소통의 영향력을 각국이 인식하여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외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반도 통일의 국제 공공재적 성격과 국제 언론의 역할

한국국제교류재단

사회	박홍순 선문대학교 대학원 원장
발표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로저 쿠버 미국 신문 <더 레코드> 대표 가브리엘라 보그단 루마니아 일간지 <Nine O'clock> 편집장 사이먼 먼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특파원
정리	우희정 호주 매쿼리 통번역대학원생

- ‘대박’인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제 언론의 역할
- 고전적인 정치뿐 아니라 경제, 갈등 해소,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 및 청정 에너지, 인신매매에 이르는 통일의 수혜 분야들을 고찰하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통일의 범위에 대해 인식
-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국제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님.
- 한반도 통일은 현재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의 문제 해결책으로 작용하며, 핵 확산 금지, 환경보호, 인권, 자유무역을 보장
- 국제 언론은 전통적인 감시자(watchdog)의 역할 이외에도 한반도의 상황, 통일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세계 언론은 한반도 상황에 주목하고, 통일 방향에 대한 관심, 전통적인 감시자 역할 지속
- 한국 젊은이의 통일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하고, 한국과 북한의 통합 문제에 앞서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통합을 우선 추진
- 루마니아의 선례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보다 선구적인 정책이 제안되어야 하고, 원-원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며,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미디어가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 및 일부 국가 언론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비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 필요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언론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은 국제 언론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함.



박홍순 김재천 로저 쿠버 가브리엘라 보그단 사이먼 먼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 네트워크 구축전략

세종연구소

개회사	박준우 세종재단 이사장
사회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발표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수 유재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토론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이세열 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 정규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권 한성대학교 교수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리	양정아 세종연구소 연구원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내 외 정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을 엮는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질적인 진전 방안 모색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 네트워크 선정 7개 분야 중 환경, 재난관리,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 논의
- 환경 분야: 생물다양성협약, 평창 로드맵, 국제협력 어젠다를 통해 구체화. 동북아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함. 따라서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역내 국가 간 협력 시급
-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생물다양성 분야 과

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와 신뢰관계 구축 필요

- 재난관리: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 패러독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안전의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 기후변화, 해양 재난의 세 가지 어젠다를 통해서 해양 민간 네트워크 구축
- 사이버 스페이스: 최근 사이버 위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 동북아 국가 간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
- 최근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정보 분야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렴하고 조직하는 플랫폼 필요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동북아에서 협력 가능한 어젠다를 설정해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의 습관을 형성하고, 문화로 정착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신뢰 기반 마련
- 동북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Keywords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동북아시아, 연성 이슈, 아시아 패러독스

유엔 창립 70주년

새로운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

유엔협회세계연맹

사회	조창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부회장
축사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발표 및 토론	캐서린 화이트 유엔협회세계연맹 집행이사회 의장/ 캐나다 유엔협회 회장 박흥순 선문대학교 대학원장/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유대중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최중무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전 네덜란드 대사
정리	존 후그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보좌관

조창범

올해는 유엔(UN) 창립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유엔은 지난 70년간 다자주의의 원동력으로 서 세계 평화와 개발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내재적 제약에 따른 비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러 도전에 직면한 세계에서 유엔의 역할은 무엇인지, 특히 긴장 완화와 한반도 통일에 유엔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박수길

한국인은 전쟁과 전후 복구를 도와준 유엔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한국이 이룩한 번영은 한국인의 근면성만이 아니라 유엔의 원조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원조 제공국으로서 유엔 글로벌 어젠다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유엔은 현재 핵무기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우려된다. 이런 문제들은 부분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책임이다. 개인적으로 유엔 대사로 일할 당시 안보리 거부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보호 의무'는 새로운 국제법적 규범이라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량학살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 충격을 준 듯하다. 아직 강제수용소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기후변화, 교육, 성평등 문제 등 큰 업적을 남기게 됐다. 반 사무총장의 재임은 한국인이 유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했고, 이러한 관심은 그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유대중

유엔은 창립 이후 70년간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몇 가지 예로 6·25전쟁과 걸프전쟁에서 보여준 안보



박수길

조창범



캐서린 화이트

박흥순



유대중

최중무

리의 역할, 평화유지군 창설, 인권보호 활동, 새천년 개발목표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은 정부 간 기구 속성과 21세기 새로운 환경이라는 본질적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보리 개혁,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협약, 책임성을 동반한 업무 유연성 관리 개혁 등이 주요 개혁과제다.

유엔 창립 이후 '최고의 학생'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 경제개발, 민주주의, 인권 문제를 한 세대 안에 달성해냈다. 그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조력자, 후원자, 주도자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 한국은 안정적이고 활발한 글로벌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국가 간 분쟁을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엔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함께 대비해

야 한다. 유엔은 민주주의 정당성과 다양한 전문성, 경험을 활용해 사회경제 개발, 인권, 난민, 군비 축소 분야에서 한반도 사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캐서린 화이트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은 유엔을 지지하는 '대중운동'이며, 필요할 때 '유익한 비판'을 임무로 하는 기구다. 유엔 안보리는 구성상 지역적 균형과 거부권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자발적 거부권 제한에 관한 프랑스의 제안은 원로 정치인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토론에 참여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안보리는 천안함 사태에 잘 대처했다. 당시 안보리 의장은 남한의 고발과 북한의 반응에 공정한 논의의 장 역할을 함으로써 안보리의 신뢰성을 높였다. 북한은 여전히 인권, 핵무기 개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안고 있다. 남한은 이해당사국 간의 '최소화된 협력체'를 구축했으나, 유엔 틀 안에서 다자적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양국 합의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접근 방식이 안보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박흥순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체제의 속성과 정책 수행 방식에 있다. 공개적 핵무기 개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국가 폐쇄와 자국민 억압, 세계 최빈국 상태, 핵무기와 100만 명의 지상군으로 남한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통일 문제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교훈을 준다. 독일은 평화통일을 성공시켰고,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란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핵화 협상을 타결했고, 리비아와 다른 국가들은 국제적 간섭이나 민중 봉기에 의해 체제가 붕괴됐다.

한반도 통일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유엔과 한국이 함께 발생 가능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산하 기구들은 유엔현장의 집단안전 보장, 평화 이행, 각종 제재,



Post-2015 개발협력 체제와 한중일의 전환적 파트너십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학회

개회사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본부장
사회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발표	메이보 황 서연대학교 교수
	나오히로 기타노 일본국제협력기구 연구소 부소장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리	김지현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연구원

Keywords

한중일 전환적 파트너십, Post-2015 개발 의제
국제개발협력, ODA

평화유지 활동, 인도주의적 간섭, 보호 의무, 인도적 지원, 형사사법제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특권으로 두 개의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는 정치적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한 정부는 중국과 미국 같은 주요 강대국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다.

최종무

유엔헌장에 규정된 목표들은 긍정적이지만, 유엔이 회원국들의 활동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권력투쟁이 일어날 때 유엔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또한 유엔은 자원 부족에 처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지역·경제 그룹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유엔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원국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캐서린 화이트 유엔협회세계연맹 집행이사회 의장이 언급한 ‘대중운동’이란 말은 이런 점에서 적절해 보인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힘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는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 사태에 충분히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북한은 혼돈 속에 붕괴하기보다 급속한 체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때 서로 대립할 인종·종교 그룹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유엔은 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엔체제의 기초와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함의가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위기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유엔의 역할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발적인 거부권행사 자제 제도 도입 등 유엔의 지속적인 개혁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발이 있지만 이에 좌절하지 말고 정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이들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 나가는 대중운동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 실현 노력 과정에서 유엔의 기여와 역할 잠재성이 크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사업, 특히 DMZ 생태평화공원 추진, 남북관계 개선, 인권, 인도적 지원, 북한 급변사태 대비 등과 관련 유엔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차원에서 유엔과의 협력강화 등 대유엔 외교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유엔 창설 70주년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유엔 회원국들은 물론 시민사회 등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의 대의와 제반 원칙 그리고 그 역할 강화에 대한 지지와 공약을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우용

Post-2015 개발협력 체제하에서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는 개발협력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개발협력을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와 재원 결합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한중일 파트너십 강화는 3국 모두 이 분야에서 의제를 선도해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협력 방식을 넘어서 전환적 파트너십의 모색이 필요하다.

메이보 황

중국 정부는 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협력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의 원칙,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Win-Win)의 원칙,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Win-Win)의 원칙에 기반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으

로서 중국과 국제개발협력 주도국으로서 중국의 입장이 공존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한중일 3국 협력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나오히로 기타노

한국의 국제사회 소통 능력, 중국의 AIIB 및 BRICs New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한 재정확보 능력, 일본의 섹터별 접근과 상대적으로 오래된 ODA 경험 등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3국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지역 내 유사 프로젝트로 ODA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 시도되고 있는 한일, 일중 양자간 협력을 통해 다소 경쟁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포럼(ADF, Asia Development Forum) 등과 같은 지역적 기반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동아시아 영토 및 해양 문제

발전과 과제



대한국제법학회

- 사회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도널드 로스웰 호주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박찬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부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석용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
 정리 서진웅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Keywords

동아시아, 갈등 해소, One Asia, 국제법의 역할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동아시아 지역 영유권 문제 갈등 해결
- 아시아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된 법적 논점 교류
- 2015년 중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재협상에 대한 법적 갈등 해소
- 동아시아 해양질서 안정과 평화의 발전을 위한 모색과 문제점 해결
- 해양 지역에 관한 영유권 주장 문제 고찰
-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통상 번영을 위한 영토 및 해양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 모색
- UN 해양법 협정의 경계 획정에 관한 법 제정으로 심화된 아시아 주변국의 갈등 해결 모색
- 동아시아 지역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 연구활동에 관한 국가 간 공동개발 추진 및 공동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 해양경계 획정과 영토 분쟁에 관한 국가 간 열린 대화채널의 유연한 활용과 확대
- 동아시아의 해양경계와 영유권 확보에 대한 법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현 국제법적 판례에 관한 영향력 고찰 및 이러한 국제법 판례가 제시하는 국제법적 기준에 관한 심화된 연구의 확보
- 영토 및 해양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현 공식적 국제법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적절성과 합리성에 관한 고찰



김태균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전통적인 공여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AIIB 창설 등 새로운 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신흥 공여국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환적인 파트너십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목표와 의제 구성 능력을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설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박복영/ 김석우
 협력적 관계 구축은 매우 이상적이거나 무조건적인,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닌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쟁적인 성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비서구

공여국으로서 3국의 강점을 살리고,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전환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좀 더 큰 차원에서 한중일 3국 간 '역할 배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어야 함.
 - 3국 모두 서구 위주의 전통적인 공여국 역할에서 자유롭고, 자조(self-help)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영역이 많으며,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와 영역 발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수원국의 필요와 주인의식에 기반한 자원 동원과 활용의 극대화 전략이 3국 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협력관계가 다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 채널 확보가 중요함.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미해결 사항 및 잔존 문제

국내 법원과 국제법

대한국제법학회

사회 오병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표 존 유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원상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원
 정리 서진웅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Keywords

일본 강제징용, 중군위안부,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
 보편적 관할권, 외국인 주권면책법

- 동아시아에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전쟁범죄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최근 한국과 중국 국내 법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국내 소송이 제기되어 다시 이목이 집중됨.
-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국제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이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해결로 남아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 유럽의 관련 문제 대응 참고: 포츠담선언의 한계, 독일 분단과 통일, 전쟁범죄, 학살 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
- 아시아의 관련 문제: 샌프란시스코조약,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 중국 하이난 분쟁 등의 영토 분쟁, 강제노동과 일본군 위안부 등의 배상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일본 국내 법원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 1963년 도쿄지방법원, 2007년 일본 최고법원 판결 등, 일본 법원의 소극적 태도
- 미국 국내 법원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 당사자의 확장, 관할권 확대, 증거개시제도 등의 용이성
-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ATCA, Alien Tort Claims Act)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미국 국내 법원 소송 제기 가능성 타진
- 미국 국내 법원의 필라티가 대 페냐이랄라(Filártiga vs Peña-Irala)에서 본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의 법리, Joo v. Japan 판결 등 검토
- 외국인 주권면책법, 미국과의 관련성, 청구권 시효 등의 문제
- 한국 국내 법원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2012년 대법원 판결 등 기념비적 판례
- 비사법적 해결방안 검토: 사안의 시급성, 정부 간 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 법치주의 강화

새로운 법적 쟁점들에 대한 평가

대한국제법학회

- 사회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블라디미르 골리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석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리 서진웅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법치주의에 따라 주권국가들이 국제법에 합치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
- 그럼에도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제법의 강제성 결여 등의 이유로 국제법 이행을 도외시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법적 현안들을 중심으로 국가들이 국제법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결책 모색
- 법의 지배의 역사: 칸트,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법의 지배에 대한 선언과 해석
-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재판소, 국제중재 등의 분쟁해결제도 검토
- 강제관할권의 의미, 구속력 있는 결정, 권고의견(advisory opinion)의 중요성, 이행의 문제
- 사안의 정치성과 법의 지배의 관계: 역사성, 지역성의 검토,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성립, 진실 발견과 외교적 기능주의 간 간극

Keywords

국제적 법치주의, 동아시아, 국제해양재판소, 강제관할권, 이행과 집행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2009년 방글라데시 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 획정(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Bay of Bengal(Bangladesh v. Myanmar)
- IUU fishing(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국제적 법치주의의 현황: 동아시아 인권재판소의 부재, 인권과 주권의 갈등,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각국의 해석 차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자국 이익추구 경향
- 민족자결주의, 난민제도,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의 개념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 등
-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한 국제 판결
- 공통의 개념, 안보, 환경, 금융 등에 대한 지역공동체적 대응의 필요성, 지역공동체 현장 성안 가능성, 경험 축적의 필요성



최태현 블라디미르 골리친 홍성필 김석현 박덕영



장신



이용호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PROSPERITY

제2장 경제·경영

TOWARDS A
NEW ASIA
OF
TRUST &
HARMONY

[창조경제대담]

무엇이 세상을 리드하는가

제주평화연구원·인간개발연구원

사회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발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리아 봉황넷 대표이사
 정리 **정진혁** 인간개발연구원 전문위원

- 스마트폰 혁명은 세상을 초연결의 시대로 이끌고 있음. 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해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IT가 필수 요소로 등장함. 스마트폰 연관 사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카카오톡, 위챗,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 다음카카오는 연결이란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인과의 연결(메시지, 이모티콘 등)에 집중하며 사람을 넘어 정보와의 연결, 즉 IoT(사물인터넷)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전통적인 제조업은 근대 경영학과 만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IT가 결합되어 10~20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테슬라를 들 수 있음. 테슬라는 자동차에 대한 관점을 바꿔 자동차 자체를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든 하나의 사례임.
- 중국은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를 통해 인터넷 인프라를 전국에 보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인터넷 활용 기회를 넓히고 있음.
 ■ 중국 기업 봉황넷은 콘텐츠 플랫폼과 콘텐츠 퍼블리싱을 융합한 뉴미디어 모델로, 플랫폼 각도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Keywords

스마트폰, 개인 맞춤형 서비스, SNS, 빅 데이터, IoT, 인성 초연결 시대, IT 융복합



홍석우



이석우



리아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스마트폰 연관 사업이 성장하고,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꼭 있어야 함.
- 사용자 중심 사고를 플랫폼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이니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기술은 계속해서 혁신할 것이며, 추후에는 개인의 취향, 취미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발달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폰의 부작용(음란 정보 노출, 게임 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야 함.
- 서비스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 등 인문학적 마인드가 기술에 반드시 필요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많으므로 여성의 의견을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함.
- 기업의 인재관리와 관련해 개인보다 팀플레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팀워크가 잘 짜여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음.

동북아 지역협력과 새로운 개발 구상 어디로 가야 하나

동아시아재단

사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교수
발표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왕용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경제센터 소장/ 국제관계학원 교수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 원영진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처장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정재호

이번 제주포럼에서 동북아 협력 관련 세션만 8개나 된다. 과연 협력이 잘돼서인지 아니면 안 돼서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번 세션은 단순히 구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각론, 액션 플랜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두만강 개발 이니셔티브와 나선지구 개발

김병연

오늘 발표할 내용은 두만강 지역과 나선 선봉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다. 두만강 유역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이 만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큰 도시는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경우 훈춘, 북한은 나선, 선봉이 있다. 나선 선봉 개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라든지 다국가 연합 도시개발 프로그램과

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이곳을 개발할 때 외국자본 유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이 지역은 잠재력이 큰 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잠재력이 크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일종의 상호보완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만약 이 지역이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하면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지역통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 지역 개발로 북한의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고 북한 개방개혁이라는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2050년 동아시아 지역 국가 경제 순위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1위, 일본이 5위, 러시아가 6위, 대한민국(통일될 경우)이 8위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하게 될 경우, 세계 어느 곳보다 경제적 잠재력이 크다. GTI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이다(북한은 2009년 탈퇴). 현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정재호

김병연

왕용

나희승

원영진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이유는 모두 자기 지역 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 간 의견 절충이 어려운 문제다. 나아가 최근엔 GTI와 AIIB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도 문제다. 김석철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두만강 하부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각각 100만 평 정도씩 땅을 내놓고 그곳에 여러 산업을 유치, 인프라와 결합해 다국가도시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종의 국제도시로 3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해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이테크, 관광, 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점 개발해 초기 5만 명, 장기적으로 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북한도 두만강 하부의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지역에 각각 100만 평의 땅을 내놓고 그 지역을 국제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 지역 인프라(공항, 항구) 개발도 포함된다.

나선지구 개발에 관해서는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구상한 계획안을 토대로 발표하겠다. 계획에 따르면 남한은 산업단지 조성, 북한은 부지와 노동력 제공, 중국은 나선항 개발, 러시아는 가스 및 철도 개발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10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국은 6조 원의 부가가치와 더불어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나선항을 끼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포스코는

하산-나진 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석탄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사업을 맡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만 톤의 연탄이 수입되었고, 그 이익도 상당하다고 한다. 먼 거리를 돌아서 가져오는데도 수익이 있다면 정치적 리스크 없이 북한을 통해 바로 가져올 수 있다면 더욱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 이상의 투자·무역 기업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라는 국가에 따른 불안정한 요소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망을 제시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되는 한, 나선-선봉 지역 개발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 개발이 더욱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빅푸시(Big Push, 강력한 부양정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 개발과 AIIB, 실행 가능한가

왕용

오늘 발표는 동북아시아 개발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 먼저 동북아 개발과 AIIB 둘이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동북아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큰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 한반도, 일본 서부지역을 포함하는 인접 지역의 경우 광활한 농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 다섯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정책을 조율한다면 머지않아 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중국의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 계획에 대해 언급하자면, 그 범위에 부분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도 이미 독자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일대일로 계획들과 얼마든지 연결해 역내 지역을 포괄하는 야심찬 개발계획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AIIB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중국을 비롯한 57개국이 창립 멤버로 확정되었으며,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그리고 발전소 건설을 통해 아시아 저개발국가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즉 AIIB의 플랫폼 역할을 통해 동북아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러시아의 경우 증가하는 서방의 압력에 따라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에 향후 5~10년은 아시아 개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도 지원할 계획이고,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AIIB는 펀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갈 것이며, 강한 기반을 갖추고 동북아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전기연결망 실행 가능한가

원영진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간 전력망 연계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슈퍼그리드(Supergrid)란 장거리 송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장거리 송전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국가 간도 연계가 될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반면 연계되는 국가 간에 각자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의 선택으로 갈등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 전력망 연계 사업은 동북아 지



역보다 북유럽, 남유럽, 아프리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북유럽은 풍력발전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고, 남유럽에서는 사하라사막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전력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수력 자원을 이용해 공급하는 등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슈퍼그리드를 추진해야 하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북아 지역만 송전망이 연결돼 있지 않다.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의 경우 모두 국가 간 송전망이 연결되어 에너지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독립된 전력 계통이며 러시아, 중국, 몽골은 아주 미약한 지역적 차원의 전력 연계 수준이다.

그렇다면 전기연결망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 기술적 측면과 건설 비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더군다나 AIIB에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한결 더 쉬워진다. 전기를 통해 에너지망이 연결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서로 부족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궁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망 연계가 필요하다.

유라시아 철도 이니셔티브

나희승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외부적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무역 규모나 교통 인프라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최근 동북아 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EU, NAFTA, 동북아) 가운데 하나로 세계 물동량 중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급증했다. 아시아 지역 역내 국가 간 물동량 증가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월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년 간 전 세계 고부가가치 컨테이너 물동량이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 물동량은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극동·시베리아 지역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물동량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국제 컨테이너 수송량은 1999년 7만 TEU에서 2007년 62만 TEU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2011년부터 교역 1조 달러 시대에 돌입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

아 역내 국가들과의 수출입 교역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북방 경제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과 동북아 역내 지역의 교역 물동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연계된 물동량의 경우, 환황해권 화물뿐 아니라 환동해권 화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해운을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고부가가치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남북철도로 운송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할 경우, 해운은 4주 이상 소요되지만 철도 운송은 2주면 가능하다.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TSR 물류 운송 시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TSR 7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해운보다 4배 이상 빠른 화물 운송이 가능하며, TKR-TSR 철도망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동북 3성 성도인 '하얼빈-창춘-선양 간 고속철도'를 2012년 개통했다. 중국 전체가 이미 고속철도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2016년이면 선양-단둥과 창춘-훈춘 간 고속철도도 완공될

기술과 혁신 그리고 창조경제의 미래

동아시아재단

사회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토론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박태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의준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 MD/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정리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IT 분야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이진법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저장과 이동이 가능하다. 바이오테크도 이와 유사하게 DNA 사진법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동시킨다. 즉 사람의 정보를 박테리아로 옮겨 그 사람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테리아가 인간 성장호르몬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유전공학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000년 역사에 대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를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두뇌에 로봇을 연결하거나, 후각에 대한 정보를 운반체에 실어 세포 속에 주입해 냄새를 포착하는 세포를 생성하는 기술 등 이른바 융합기술로 다양한 기술을 실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먹을거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융합기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각 분야 간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를 터주면 쉽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박태현 서울대 교수는 아이폰을 좋은 예로 들

며, 전혀 새로운 것 없는 MP3, 인터넷, 전화기를 서로 융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 융합기술의 본보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박 교수는 바이오 기술은 신에 도전하는 기술 분야로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인정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유전자 변형식품(GMO)과 유전자 차별 논란을 들었다. 실제로 미국에는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도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과학자들만 고민할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IT, 나노, 소재 기술 개발과 산업화 선도전략

산업 차원에서 IT 나노 소재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산업 전반적으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코닥 필름은 과거 아날로그 기술의 대명사로 디지털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회사였다. 하지만 디지털카메라의 가능

확보하고, 일본은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셈이다. 또한 본 사업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와 TKR-TSR 사업 투자에 매우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및 대륙 철도의 비전은 한반도 경제통합과 유라시아 교통·물류의 기교다. 기존의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단기와 장기로 나눠 남북 및 대륙 철도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 추진과제로 조속한 남북 간 철도 연결 및 운행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철도망 구축을 위해 GTI, UN ESCAP,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동북아 운송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 추진과제는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이 미래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이 바로 '상호교류다. 한반도가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닫힌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 공간 발전을 추진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구조개혁과 인프라 투자를 촉구했다. 또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올 하반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건설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북아는 무역, 금융, 투자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과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호의적인 여건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분야, 그 실현 가능성과 장애 요인 등을 논의했다.

계획이다. 즉 북한만 연결이 된다면, 동북아가 일일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철도·물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는 물리적 연결 단계를 넘어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망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식민지 경영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유럽의 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해 유럽연합(EU) 결성을 앞당긴 것처럼, 동북아 철도사업은 동북아 역내 지역을 통합하고 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남북 경제통합과 한반도 장기비전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인프라를 공유하고,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려는 초국경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남북러 3각 협력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나진항 제3호 부두에서 하산까지 철도(54km)를 개보수하고, 항만 화물터미널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나진항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계하는 글로벌 물류사업을 추진 중이다. TKR-TSR 사업의 시범 사업인 것이다. 특히 나진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남북러뿐 아니라 중일 간 인프라·물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시범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동북아 역내 국가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이다. 북한은 노후된 북한 철도 일부를 복원해 나진(나진·선봉)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북러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다자 간 경험 사업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포화상태의 극동항을 해결하고, TSR 경쟁력 제고를 통한 유라시아 물류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북러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철도·에너지 대국으로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한러 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3자 또는 다자 사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중국은 창지투 개발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동해 출로를



이상엽 강성모 박태현 윤의준 최중배

성을 경시한 결과 이 회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노키아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개발사이지만 결국 코닥 필름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전혀 다른 소재가 나타나서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소재가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다. LCD 기술과 OLED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통신과 센서 기술의 융합으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스마트카 등 스마트 소재가 출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현대 제조업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 단계로 발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업계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절실하다.

윤의준 서울대 교수는 외형에 비해 부품 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소재 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소재 부품과 나노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미국이나 독일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도 제조업 리턴을 외치며 경쟁력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공장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가동 중이다. 윤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공장인 지멘스를 예로 들며, 이 공장 한 곳이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하는 데이터 양이 5000만 개이며 이러한 빅 데이터를 스마트 데이터로 전환함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스

마트 공장을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 및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창조경제 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 기술발전 동향과 창조경제 위한 대학의 역할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경제 저성장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저성장의 기류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그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은 현재 카이스트에서 시행 중인 에듀케이션 3.0(교수의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닌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소개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실 밖에서도 해외 학생, 연구진과의 국제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모르는 부분을 협업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총장은 창조경제 성공에 필요한 인재는 좋은 직장, 안정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교육의 단점으로 창의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포용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의적인 인재는 트렌드와 시스템 콘셉트에 대한 관심, 관



심 분야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문제를 찾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정책과 한국의 미래발전 전략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나라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fast-follower' 즉 항상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무작정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며, 바로 이것이 한국형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다.

최중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전체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조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드림엔터, 무한상상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중 인터넷상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를 언급하며,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도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도 함께 소개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로 현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마음껏 놀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런 구상이 지속가능하고 소기의 성과를 맺으려면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과 민간 분야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조경제 성공의 키워드는 '혁신'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끊임없는 소통과 기술혁신만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산업 발전기에 필요했던 'hard work'에서 'smart work'로 방향을 전환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융합을 꾀해야 한다.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과학기술은 이미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음. 창조경제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아이디어 제시 및 피드백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 중이며, 학교에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에듀케이션 3.0 등을 도입해 시도 중임.
- 독일은 제조업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가장 스마트한 공장으로 알려진 지멘스 공장은 빅 데이터의 스마트 데이터 전환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크게 줄임. 한국도 스마트 공장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제조업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유시장과 환경보호주의, 이 둘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사회	마티아스 그라브너 오스트리아대사관 부속 무역관 상무책임관
개회사	지그프리드 헤르초크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동아시아 지역본부장
환영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발표	오윤 산아수렌 몽골 국회의원, 유엔 환경총회 의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헤닝 회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의원 수닐 라사일리 QED 그룹 창립 파트너
정리	미클로스 로만디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지역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에 이르고 있음. 유엔은 21세기 중반에는 9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이는 엄청난 양의 자원 소비로 이어질 것이며 지구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임. 만약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경우 지구는 그 성장을 버텨낼 수 없게 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하며,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오염은 경계 없이 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경보호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해 국제적인 협력과 관심을 갖추고 접근해야 할 문제임.

Keywords

자원 소비, 오염, 환경보호, 협력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거버넌스의 역할은 규제나 인센티브를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그러나 성공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실천을 포용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것이 자유 시장이 역할을 하는 부분임. 유럽연합의 환경배출권 거래 정책(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이 좋은 예임. 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식임.
-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예컨대 개발도상국에서는 채광산업이 국가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운영자인 동시에 단속자 역할을 하려니 이익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음.
- 환경보호는 시장 중심적 관점에서 성공할 수 있음.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 시장은 기업이 더 효율적이지만 덜 낭비할 수 있도록 규제함. 이는 최근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제기한 주장임. 경제적인 자유와 환경 보호 사이 상관관계를 보여줌.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국가들이 환경보호 문제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 시장 중심 원리를 기반으로 환경보호 과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개입이 필요한 순간에만 규제를 통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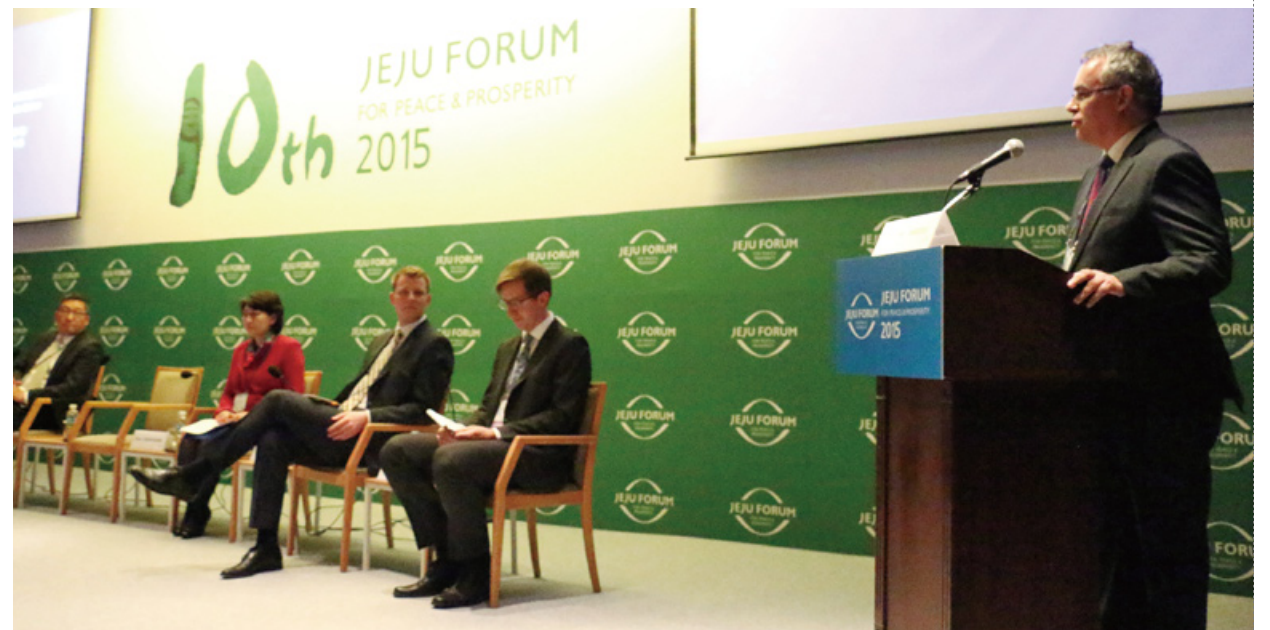


마티아스 그라브너 지그프리드 헤르초크 롤프 마파엘 오윤 산아수렌 윤상호



헤닝 회네

수닐 라사일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자정부

유엔거버넌스센터·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사회	케핑 야오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전문가
발표	위짓 아티파야쿤 국제전기통신연합 아태지역사무소 ICT 전문가 김성희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토론	차상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천준 상하이사회과학원(SASS) 연구교수
정리	윤창록 유엔거버넌스센터 역량개발팀장

- 전자정부는 세계 정부가 굿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 받음.
- 많은 경우 국가들은 상업 분야에서 달성할 수 있었던 기술혁신에 뒤처져 있음.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는 신기술을 따라잡을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전자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필수적인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제도를 가능하게 함.
- 빅 데이터와 분석은 효과적인 정부 행정에 중요 함. 특히 소통이 잘되지 않는 정부 부처들이 사용하는 빅 데이터를 통합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열린 형태의 정부 데이터가 빅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함. 통합된 기술적 플랫폼은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 접근 방식을 통한 통합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장려해야 함.
- 국가는 사용자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람 중심의 전자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안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광범위한 개인 전자정부보다 '디지털 정부'라는 용어 사용을 장려함.
- 시민의 관점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지, 왜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함. 애플리케이션 사용 장려를 넘어 열광하게 만들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시민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고 쓸모없어질 것임.



케핑 야오 위짓 아티파야쿤 김성희 차상균 천준



시민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수요자 중심적 지방 전자정부 계획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유엔거버넌스센터

사회	클라우디아 부엔첸 주요 공공관리 전문가, 지역 및 지속가능 개발부, 아시아개발은행(ADB)
개회사	김경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사무국장
발표	임학진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고문 이종건 자카르타 펄스 연구소(UN Global Pulse) 데이터 과학자 모하메드 릿완 카밀 인도네시아 반둥 시장 하지 로잘리 빈 하지 모하무드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 부시장
토론	황준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과정 교수
정리	김지현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선임주임

-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탈중앙화, 시민참여 강화, 디지털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음.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솔루션)이 필요함.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걸어다니는 GPS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유한 시민을 활용할 수 있음. 시민 생성 데이터가 축적될 시간, 시민에 대한 믿음, 빅 데이터 플랫폼만 있다면 도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공공 분야에서 빅 데이터 활용은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관리에 있어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민간 분야에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상 실시간 키워드 분석을 정부가 활용한다면 공공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모든 정부가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분석을

-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시민을 참여시키는 클라우드 소싱 방식. 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설계 아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는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반둥(인도네시아)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구현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반둥명령센터(Bandung Command Centre)임. 센터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요구 및 불만 처리, 교통 시스템 제어 등 통합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소셜맵은 시장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 지역마다 강조되는 문제점이나 민원 등을 지도상에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주는 디지털 지도로 시장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됨.



클라우디아 부엔첸 김경서 임학진 이종건 모하메드 릿완 카밀



하지 로잘리 빈 하지 모하무드

황준석

- 세베랑페라이(말레이시아)는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쌍방향 행정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Smart Monitoring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시민들의 불만 사항 등을 접수받아 처리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해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관리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시민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빅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에 따른 실시간 의사소통 증가에 힘입어 행정상의 빠른 의사결정과 도시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통해 모바일 기반 행정환경 구축 필요
- 저개발 도시의 물리적 제약(재정·조직·인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 API 기반 소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저개발 도시에 보급 필요
- 소셜미디어 정보, 불만처리 시스템 등 공공 시스템 정보 등을 통해 생성된 광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표현하는 빅 데이터 기술은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류 및 협력 방안

유엔거버넌스센터·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사회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김영수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과장
토론	정윤수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바틀지 바출룬 몽골 울란바토르 시 정부기술국장(CIO)
	왕싱관 상하이사회과학원(SASS) 연구교수
정리	김현정 유엔거버넌스센터 연구개발팀장

한국 지방자치는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이 약 80대 20으로 자치 사무보다 국가 사무의 비중이 매우 크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를 나타내는 단면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 지역정보화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생활·산업·도시 기반 등 분야별 정보 기반 및 정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정책적 활동이다. 이러한 지역정보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화·확대되었다. 먼저 초기 지역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정책 의제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정보 격차 해소가 주된 정책 목표였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발전과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목표가 변화했다. 지역정보화의 주요 내용도 초기에는 기반시설과 정보통신망 구

축 등 하드웨어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의 행정, 생활, 경제 등의 분야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변화·확대되었다.

한국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지방행정 전산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고, 2000~2010년에는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통해 업무의 전산화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 이후에는 국민 참여 서비스의 확대,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다양한 지역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양상을 살펴보면,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을 비롯한 9개의 법령을 통해 지역정보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42건의 정보화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책 추진의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지역정보화 관련 조직은 중앙정부 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 조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독립적인 정보화 부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자체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지역정보화 사업은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 지원, 빅 데이터·클라우드·사물 인터넷 등 IT 신기술 확산 및 융복합 촉진,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 확대, 정보 보안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사업은 행정업무 정보화 위주에서 대민 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와 중앙정부에서 위임됐거나 같이 수행하는 업무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한국적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보다 향상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정보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해 지속가능한 자립발전 토양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좋은 사례로 올해부터 시작한 국가위임사무 통합관리체계 ISP를 들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상당 부분이 국가위임사무 및 공통사무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제각각 개발되어,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관리를 통해 중앙에서는 편리하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고, 지

방에서는 위임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행정자치부의 U-City 사업과 비슷한 개념이다. U-City 사업은 신도시 구축 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전자정부 및 ICT 기술을 적용한 후 도시를 설계, 구축하는 것으로 송도도 그런 차원에서 발전했다.

Keywords

중앙정부, 지방정부, Whole-of-Government, 협업
전자정부, 정보화, Smart City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방 전자정부 계획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 및 협력해야 함.
- 지역사회의 독특한 요소와 특징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방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 지방정부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이끌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활동과 추진을 지지해야 함.
- 지역정보화 과정과 스마트 시티 설립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력을 넘어선 민간 부문과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
- 지방정부의 선택된 최선책을 중앙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방정부 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

[도시리더 좌담회]

전자정부를 통한 지방정부 신뢰성 제고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유엔거버넌스센터

사회	김경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사무국장
좌장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3.0지원센터장/ 전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사무국장
발표	유영록 김포시장 아마르 하미드 솔리만 아바스 수단 이스트나일 시장 아나스타샤 라코바 모스크바 부시장/ 모스크바 시장 수석보좌관
토론	클라우디아 부엔첸 주요 공공관리 전문가, 지역 및 지속가능 개발부, 아시아개발은행(ADB) 버르나디아 이라와티 찬드라드워 UCLG 아태지역사무국장 모하메드 릿완 카밀 인도네시아 반둥 시장 하지 로잘리 빈 하지 모하무드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 부시장 최영훈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바틀지 바출론 몽골 울란바토르시 정부기술국장(CIO)
정리	김지현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선임주임

황종성

-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23%에 불과하고, 이는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정부 신뢰도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임.
- 이 결과는 한국 정부가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것과 상반됨.
- 전자정부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지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자정부에 대한 투자 노력과 시민의 신뢰 확보 사이에 괴리가 발생함.
-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존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정부 3.0의 네 가지 특징은
 - ① 데이터 분석에 기반
 - ② 정보 개방과 공유
 - ③ 전체 관점에서 협력하는 정부
 - ④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마르 하미드 솔리만 아바스

- 이스트나일(수단)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웹·모바일 기반의 수입 관리 시스템, 서비스 콜센터, 그 밖에 지리정보 시스템,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 정부 웹사이트, 전자학교 등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스트나일의 전자정부 사업의 대시민 효과는



김경서 황중성 유영록



버르나디아 이라와티 찬드라드위 모하메드 릿완 카밀 하지 로잘리 빈 하지 모하무드



아마르 하미드 술리만 아바스 아나스타샤 라코바 클라우디아 부엔첸



최영훈 바를지 바출론

부패 방지로 정부의 투명성 증대, 업무 프로세스의 전자화에 따른 시민 편의성 증대를 통한 정부 신뢰 향상임.

아나스타샤 라코바

- 모스크바(러시아)의 전자정부 추진은 공개, 참여, 편의성의 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음.
- 전자 시민 의사결정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스크바 시는 전자투표 시스템인 'Active Citizen', 일상적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신고·제안 포털인 'Our Town', 참여한 도시 문제에 대한 시민 토론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Crowdsourcing Projects'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강화하고 있음.
- 정책 결정 시 전자정부를 활용한 시민 제안과 결정을 반영, 활용하는 것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의 만족도도 높음.

모하메드 릿완 카밀

- 기술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에 김포나 모스크바의 우수한 사례를 접할 수 있음.

- 모든 도시가 60% 정도에 대해서는 공통된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정부는 시민의 신뢰 획득이 중요하며 WeGO의 미래는 어떻게 도시 간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하지 로잘리 빈 하지 모하무드

- 기술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지만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정부는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도시, 투자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꿈꾸고 있음.

최영훈

- 모스크바와 유사하게 서울시도 전자적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국 전자정부는 도시정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시민 모두에게 ICT(정보통신기술)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쓰레기통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IoT(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실험을 진행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WeGO를 통해 다른 회원 도시와 공유할 계획임.

바를지 바출론

- 도시 행정에서 업무의 간소화나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IT 기술이며 이 과정에서 IT 부서는 다른 부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사 역할을 수행함.

클라우디아 부엔첸

- 현재 어떤 정부도 도시 문제와 관련해 ICT 기술의 도움 없이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자정부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분야임이 틀림없음.
- 한국은 재난관리나 도시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높은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낮은 신뢰성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Keywords

신뢰, 정부 신뢰, 전자정부, 정부 3.0, 스마트피아(Smartopia), 김포, 이스트나일(수단), 모스크바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국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은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관점에서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음.
- 정부 3.0의 네 가지 특징은 1) 데이터 분석에 기반 2) 정보 개방과 공유 3) 전체 관점에서 협력하는 정부 4)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임.
-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적시에 시민 위험을 인지해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단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정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이와 관련해 전자정부는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CSR에서 CSV로 가는 기업의 여정

사례, 전략, 그리고 시스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좌장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사회	김주남 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베이징 장강상학원 교수 강태선 (주)블랙야크 회장
토론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전 (주)LG 부사장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정리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한국 사회의 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호감도의 상반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존속에 대한 의문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 사회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책임감,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적 가치, 이익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동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기업 성장과정에서는 이익에 기반하는 CSR 활동이 수월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따라서 CSV가 중요해짐. CSV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회와 경제성장이 같이 진행될 수 있음. 초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혼란스럽고 비용이 커질 수 있으나 지속적인 실

- 행을 통해 결국 기업의 성과 창출이 가능해짐.
- CSR과 CSV가 분리되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CSR을 토대로 CSV가 진행되어야 함. CSR은 이익에서 투입되고 CSV는 매출에서 투입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 목적과 기업 목적의 추구에 있어 4단계 좋은 기업 발전단계를 놓고 볼 때, 1단계 자선활동 → 2단계 사회봉사 내부화 → 3단계 BOP (Bottom of Pyramid) 전략 → 4단계 지속경영 기업(매출액 전체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1, 2단계는 CSR이고 3, 4단계는 CSV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와 기업이 서로 학습하는 관계이자 발전하는 관계가 궁극적인 목표

한국 기업의 CSV 목표와 전략 사례

- 블랙야크는 이윤추구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김일섭 김주남



조동성 강태선



허정옥 김영기



노운하 최규복

(1926년)은 CSV의 전형적인 목표인, 유한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향후 30년을 위해 시니어 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유한킴벌리의 경우 CSR과 CSV의 동시 실행을 진행하고 있음.

중국 사회 메커니즘의 내재화된 CSV

- 중국 사회에서 CEO는 조직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고, 공산당 당서기는 공산당 목적을 추구하면서 모든 기업의 CEO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인민의 행복, 나아가 중국 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 추구는 CSV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일본 기업의 전통적인 CSV 사례

- 일본의 경우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CSV 실행에 앞서나갔던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음.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이며, 이윤은 사회공헌의 대가'라는 철학으로 기업을 운영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성장 시대에는 기업의 다양한 CSR이 가능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기업의 이윤과 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이를 위해 기업들의 다양한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익률 등의 기존 가치평가 기준에서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 등의 사회공헌 가치평가 기준을 포함해 CSV를 실행할 것을 제안함.
- 기업들의 노력을 평가해 CSV의 확산과 적극적인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기업뿐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비영리기업, 해외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필요. 이러한 CSV를 위해 제정된 'Porter Prize for Excellence in CSV'는 기업들의 진정성, 객관성, 체계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효과성(혁신성), 창조성, 전파성, 상생성을 시상하는 프로젝트상을 포함함.
- 전략적 CSR의 초석 위에 기업과 모든 조직의 CSV가 확산될 때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

갖고 아웃도어 산업과 관련된 철학, 비전, 사회적 기여를 실행 중. 특히 2014년부터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최근 네팔에 13억 원을 지원해 재건에 기여뿐 아니라 공동체 정신 회복, 자연재해 극복을 도울 예정임. 블랙야크의 산과 자연에 대한 사회공헌은 아웃도어 산업 기업가치 증대와 연계되는 CSV로 발전되고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유일환 박사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유한양행 창립이념

G2 시대 아시아와 한중 경제협력 과제

인간개발연구원

사회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발표	신동일 중국 량시그룹 회장
토론	조평규 중국 연달그룹 부회장 전병서 중국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신운철 한중마케팅협회장
정리	정진혁 인간개발연구원 전문위원

- 2014년 중국은 경제성장이 7.4%로 둔화되었고,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로 기록되었지만, 중국 경제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엄청난 수치임. 2015년 중국은 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민간 진출을 완화하며,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중 소비를 장려하고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업과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연결 플랫폼 구축, 단일경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중 FTA 발효는 중국이 한국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공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한중 FTA는 한중 간 교역의 최대 기회이며, 한국이 중국의 내수시장에 쉽게 빨리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임.
-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품 중심이 아닌 브랜드 중심이어야 함.
- 량시그룹은 한국-중국 간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 채널 구축을 통해 유아동 패션을 중심으로 글

로벌 1위 패션 리더를 지향함.

- 중국은 중화민족주의의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 문화 개방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용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국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봄.

Keywords

한중 FTA, 일대일로, 산업구조의 변화
브랜드 중심의 시대,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동반성장



홍석우



신동일



조평규



전병서



신운철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서양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경제가 새로운 평형을 찾아 이동하고 있음.
- 한류가 중국에서 각광을 받는 등 문화가 수입만 되지 수출은 되지 않아 중국은 자국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문화 무역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의 화장품, 뷰티 산업은 중국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 생산 제품에 대한 성공사례가 늘어가는데, 한국은 이런 점을 잘 분석해 중국을 위한 제품 기획과 개발에 노력해야 함.
- 중국이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좋아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한류를 판매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금융 콘텐츠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새로운 축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한국은 고립된 국가이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문화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도 선결과제로 남아 있음. 한국에 건너간 80만 명의 중국인, 기업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한중 FTA라는 위대한 시기가 다가왔으니 한국의 좋은 기업, 제품, 문화가 중국에서 거대시장을 만들 것으로 확신함.

기업의 글로벌 경제협력과 평화적 아시아 교류의 길

일본 타마대학교·인간개발연구원

사회	오종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발표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토론	이종훈 한성대학교 이사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조우진 타마대학교 교수
정리	허진원 인간개발연구원

-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도레이 그룹은 신흥 아시아 국가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술 전파와 상생 발전에 힘쓴, 그 성공 요인은 네 가지가 있음.
 - ① 일본 도레이 그룹과의 긴밀한 협조
 - ② 매년 한화 5000억 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R&D 분야에 투자. 이를 통해 동종 분야 제품보다 질적, 양적으로 50% 우수한 제품을 완성함.
 - ③ 안정적인 노사관리와 투명 경영 그리고 인본주의 경영: 1970년대 공장 직원들을 위한 호텔식 화장실 구비, 3%의 낮은 퇴사율과 애사심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 ④ 녹색성장(Green Innovation) 경영이념: 최첨단 소재인 탄소섬유를 개발해 한국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 한일 양국 경제발전을 꾀함.
- 도레이 그룹의 부직포 사업은 현재 아시아 1위지만 수년 내 세계 1위를 목표로 신흥 아시아 국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지원하려는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음.

- 도레이첨단소재는 한국과 일본 고유 문화의 강점을 성공적으로 융합해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선진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사 간 신입사원 연수 및 인턴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경제협력력을 추구함. 또한 녹색성장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경영이념의 하나로 보고 지구환경 문제와 자원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도레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함.
- 인본주의 경영방침에 따라 1970년대 공장에 직원들을 위한 호텔식 화장실을 갖추는 등 복지에 힘쓴 결과, 3%의 낮은 이직률과 함께 기술집약적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일 상생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90년 동안 한 번도 직원을 내쫓은 적이 없다는 일본의 인재경영 대표 기업 도레이그룹을 한국에 현지화시키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영상의 이점을 살려서 잘 접목시킴. 향후 상생경영 노사 신뢰 투명한 기업문화 성공사례 등 한일합작 경영을 보다 구체화하고, 한국 사회에서 더 연구할 수 있는 한일 산업협력 사례로 연구할 것을 제안
- 현재 한일 관계는 역사와 정치의 문제로 최악의 상황이기에 앞으로 한일 간 교류협력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함. 특히, 기업의 사회적책임 측면에서도 한일 청소년 교류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큼. 도레이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에게 일본 연수 기회를 주고, 일본에서도 신입사원 교육으로 한국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한일 평화교류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모델로, 이런 문화가 다른 기업에도 확대되었으면 함.



21세기 자본주의와 경영 실천

아시아에서 세계로



최은수 마루야마 도시야키 오쿠보 히데오 이종윤 다카마사 이시즈카

인간개발연구원·일본 윤리경영연구소·일본 공익자본주의추진협의회

사회 최은수 MBN 경제부장
 발표 마루야마 도시야키 일본 윤리경영연구소장
 오쿠보 히데오 일본 공익자본주의추진협의회장
 토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다카마사 이시즈카 나미키 대표이사
 정리 권해란 인간개발연구원 통역사

- 금융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공익자본주의가 대두 되는 시대로 변화와 재고가 필요한 시점
- 정당한 노동관을 가진 공익자본주의 사회로 진화하는 방안 모색
- 회사를 주주만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거래처, 사원, 사회 등 전체의 소유로 인식해 중장기 투자로 지속적 성장 도모
- 가치를 만들지 않는 제로섬게임 경제를 가치를 창출하는 플러스섬게임 경제로 변혁이 필요한 시점
- 단기투자 8, 장기투자 2의 단기투자적 구조를 단기투자 2, 장기투자 8 체제로 개혁
- 내부 유보를 두텁게 해서 투자 리스크에 대비하고 높은 차입이 아닌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자율적 시스템 필요
- ROE ROI ROA EPS 등 가시화되는 요소만 평가하는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평가 기준, 즉 종업원,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 지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공익자본주의로 변화 필요

- 윤리경영과 공익자본주의에 대한 리뷰
- 조화를 위한 물이 윤리이며 기본이므로 희생과 권리를 조화롭게 하는 윤리경영이 필요한 시대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공익자본주의와 윤리경영은 이상적 개념으로 바람직하지만 국가마다 당연한 현실과 이념이 존재하므로 쉽게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려움. 잘 정화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균형을 이룰지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절한 고민이 필요함.
- 자국의 국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공동체로서 진정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해 각자 역할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함.
-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윤리경영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해 아시아적 가치로 받아들여서 황금만능의 서방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개념이 되도록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간은 이기심뿐 아니라 이타성도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메커니즘을 구성해 현실화 하고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세상을 리드해야 함.



아시아 금융시장 성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 방안

한경비즈니스

사회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기조연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발표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사장
토론	오규택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장 교수 홍준욱 국민연금 이코노미스트 이상화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안수웅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부장
정리	이홍표 한경비즈니스 기자

- 금융투자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하지만 한국의 금융투자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그 요인은 그동안의 과잉보호, 즉 규제에 있었음. 최근 아시아는 급변하는 중임. 특히 역내에서 중국의 역할이 급격히 부상 중이며, 한국 금융투자업은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함.
- 한국 제조업의 성장이 더디진다면 그다음은 금융업이 이어나갈 때임.
- 중국을 금융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함. 특히 리서치센터의 역할 중요함.
- 지금 한국은 기록적 저금리로 머니 무브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임. 이런 머니 무브의 시대에 애널리스트들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애널리스트 각자 리더십을 가져야 함. 아울러 최신의 트렌드에 더욱 민감해져야 함. 인터넷상의 정보보다 통찰력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함.

- 한국은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함. 이는 업계 발전, 나아가 사회 발전에 큰 저해 요소임.
- 주식 투자를 해야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늘어남. 결국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 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 수출해야 함. 이는 장기투자 문화이며 선진시장의 금융회사들도 이런 문화를 수출했음.
- 결국 단기투자를 조장하는 것보다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진 통찰력 있는 리포트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내야 함.



조용준



황영기



홍성국



존리



오규택



홍준욱



이상화



안수웅



오광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포인트는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핀테크임.
- 금융의 삼성전자가 힘들다면 금융의 아모레퍼시픽이 나와야 할 때. 금융은 역사성과 문화라고 봄. 애널리스트는 이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함. 유목민 DNA를 가진 애널리스트가 많이 나와야 함.
-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있음. 바로 우리의 실패 경험. 아시아 시장은 선진 시장과 달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런 식으로 극복했다는 스토리가 먹힘. 아울러 한국의 특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금융투자 회사는 고객의 수익에 가장 주안점을 뒀야 함. 이를 위해서라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며 상명하복 문화를 벗어나야 함.
- 그동안 한국의 금융투자업은 해외에 진출할 필요가 없었음. 이유는 고성장 때문. 그러나 저성장 상황에 놓인 지금은 해외 진출이 필수임. 앞으로 리서치 역량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상품'을 찾는 데 올인해야 할 것임.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SUSTAINABILITY

제3장 환경·기후변화

TOWARDS A
NEW ASIA
OF
TRUST &
HARMONY

제7차 세계물포럼 이후

외교부

사회	이성호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발표	겐조 히로키 일본 국토교통성 수자원계획과장
	고덕구 한국물포럼 사무총장
	우효섭 한국 응용생태공학회 회장
	이보 드 보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정리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
정리	이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 사무관

-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는 과학기술 과정을 신설해 과학기술과 물 관리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물 문제 해결 및 실행 방향 제시
- 수자원이 풍부하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물 부족(EWI, Economically Water Insecure)'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역별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여
-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물과 위생을 단독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지지했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물 문제 해결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촉구
-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실행 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액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지속적 관찰 및 평가 필요

- 역대 물포럼 개최국(모로코,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터키, 프랑스)과 월드 워터 파트너십을 구축해 물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이성호



겐조 히로키



고덕구



우효섭



이보 드 보어



정상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향후 국제사회 논의에 세계물포럼 성과를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 세계물포럼은 대규모 참여, 개방성, 합의의 비구속성, 새로운 접근법 시행·취사선택, 계속성 등을 강점으로 하며, 이러한 강점을 연쇄효과(Cascade Effect)로 활용 필요
- 지역 차원 협의체에서 구체적 제안 필요
 - 소규모-지역-정부 간-물포럼 간 수직적·수평적 협업 강화
- 세계물포럼의 핵심 성과인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 방안
 - 이행 로드맵은 지구적 물 공동체의 자발적 합의로 물포럼의 16개 주제에 대한 해결책 이행에 관한 전략 계획
 - 액션 모니터링 시스템은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 물포럼 후속조치로서 이행 로드맵 지속을 위해 대구·경북 물주간 실시
 - 한국과 세계물위원회 협업을 통해 주제별 과정 조정기관들에 대한 지속적 관여 및 지원 필요
- 물 문제 해결에 중요한 투자 유치 방안
 - 제7차 물포럼이 획기적 계기(milestone)인 것은 비즈니스가 전면에서 나섰다. 워터 비즈니스 포럼은 개도국과 물 관련 시기업의 만남을 활성화
 - WWF7의 후속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거 일본 물포럼, 네덜란드 물포럼 설립이 비즈니스 중심으로 성공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워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설립 필요
 - 이를 위해 월드 워터 파트너십에서 비즈니스 비중 늘리고 물 분야 사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유치 노력 제안
- 물 문제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효과적 연계 방안
 - 참여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공 요인
 - 이행 로드맵은 대규모 자발적 기구의 모임으로 도출되었으나 정부 간 정치적 합의에 효과적으로 반영됨.
 - 개도국은 물 분야에 관심 많으나 기후변화에는 상대적 무관심. 기후변화와 물 문제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변화 어젠다 형성 가능
- 과학기술을 활용한 물 문제의 해결 활성화 방안
 - 1) 이번 포럼에서 출범한 CEO 이노베이션 패널, 월드 워터 챌린지를 강화하고 2) 각국별 환경을 고려,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3) 역량 강화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 과정을 발전시켜 차기 물포럼에서 공유 필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기금 확대방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회	이보 드 보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토론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성창모 녹색기술센터(GTCK) 소장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동북아시아사무소 부소장 김희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정리	손희경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홍보매니저

이보 드 보어

-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적 재원은 충분함. 사적 영역에서 충분히 자원 조달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원들이 현재 혁신, 녹색성장·기술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원이 혁신, 녹색기술 개발과 개도국을 위해 쓰이지 않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임. 개도국과 신흥성장국의 녹색성장 투자 활용을 위해 지지와 지원이 필요함.

김희정

-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는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자금 조달은 저탄소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임.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재정 메커니즘은 개도국의 소유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공·사적 영역에서 다양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신흥금융기관과 녹색기후기금(GCF)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기획재정부, GGGI,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같은 기관들이 활동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조할 수 있을 것임.

- GCF는 녹색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개도국을 돕기 위한 기금 유치를 위해 자금 조달 능력을 발휘하고자 함. GCF는 개도국의 잠재력 있는 활동을 발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GCF는 특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음. 선진국도 GCF에 기여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대함. 패러다임의 전환과 포용성에 기여할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는 GCF 이사회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

김영목

- 개도국의 최우선 과제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가 아님. 많은 개도국들은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



이보 드 보어

김영목

성창모

남상민

김희정

- 으며, 녹색성장 정책을 이행하고 설계하기에 제약이 많음. 불행하게도 현실과 야심찬 목표는 거리가 있음. 투자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투자자 유치의 선결조건임. 기관들은 민간 부문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협업해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함. 다행히 민간 부문에 충분한 자본이 있음. GCF는 자금 조달을 하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 KOICA는 GCF 등 신흥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할 계획임.
-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적자금을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투입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과업임.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된 공기는 중국과 한국 같은 산업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함.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같은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과 기술이 핵심 사안임.

성창모

- 민간·공공 분야에서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기술 활용 방법을 모르고 있음.
- 기술이전과 자금 조달 간 연계가 부족함.
- 투자 기회가 있다면, GTCK는 기술자들에게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기술 분야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GCF는 개도국 기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GTCK는 KOICA, 미주개발은행, UN ESCAP, 아세안 국가, 중남미·중동 지역과 연계해 전략 수립, 기술이전, 자금 조달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이보 드 보어

- 다양한 성장모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큰 관심이 필요함. GGGI 또한 기획재정부와 고위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을 얻는 일이 쉽지 않음.
- 리스크와 보상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만들어내고, 녹색성장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남상민

-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녹색성장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낮춰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정책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과 자원 활용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 재원 개발·적용에 시간, 제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국가와 이해당사자의 활발한 학습이 요구됨.
- UN ESCAP와 GGGI 같은 다자 기관에서는 지식 공유, 역량 강화, 정책개발 과정을 촉진하는데 다양한 국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음.

산림치유에 관한 한중일 협력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넘어선 3국 협력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개회사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사회	김기원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발표	임영석 한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 카가와 타카히데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환경계획연구실장 왕귀중 중국 국가임업국 국제합작사 과장
맺음말	천평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정리	김연수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경제연구원

- **한국:** 건강 관련 복지에 대한 관심과 고령화에 따른 정부 지출 모두 급격히 증가. 2010년부터 산림 관련 법제화 추진. 산림치유의 숲 인증제도, 국가 차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복지와 효율적 정부 지출을 동시에 안착 시킴.
- **일본:** 예방의학, 지역 활성화, 산림 정비의 최종 목표를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산림 테라피 발전. 산림치유 기지를 최초로 도입하고 60여 개 산림지역 개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 단위로 조성. 재할 분야에서 활용 빈번함.
- **중국:** 넓은 국토와 다양한 형태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음. 정부가 산림, 생물다양성, 생태계, 사막화 방지, 습지 등에 관여하며 소강사회 건설, 국민의 웰빙, 생태계 발달을 필연적 발전단계로 인식. 도시화, 고령화의 가속화, 서비스업 확대, 관광지 개발, 국민 육구 등 여러 방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산림치유 분야로 인식됨. 한국과 일본 등의 산림치유 정책 벤치마킹, 관광부와

위생부의 협력 등을 통해 통합 테라피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 **한중일 차이점:** 산림 테라피 및 치유는 한중일 3국이 각각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한국은 주로 정부 주도로 산림치유 관련 기관을 지원, 중국은 정부 및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 일본은 증거에 근거한 지방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산림치유 기지 개발이라는 차이가 있음.
- **한중일 유사점:** 한중일 산림 테라피 및 치유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중일 또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건강요법으로, 세계적으로도 한중일이 산림 테라피 분야에서 앞서 있음.



이와타니 시게오

김기원



임영석

카가와 타카히데



왕귀중

천평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국:** 2004년부터 약 4년간 유럽과학기술연합체를 결성해 공동 산림 연구를 한 유럽연합을 벤치마킹, 한중일 3국이 산림치유·산림복지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실시 및 관련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협의체 설립 제안.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은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를 기본으로 산림, 보건의학, 산업과 연결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작은 유엔' 역할을 하는 한중일 3국 연락망이 될 수 있음.
- **일본:** 한중일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 또는 '한중일 산림치유 네트워크' 설립 제안. 정책 결정과 증거 공유 등을 통한 협력 및 다양한 지역의 산림 테라피 사례를 통한 성공사례 및 문제점 공유 등이 가능한 한중일 연락망 개설 필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TCS가 정부기관과 민간을 아우르고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산림치유에 관한 정책 결정, 산림치유 전문가 자격체계 등에 관한 협력 제안. 한중일 3국은 TCS를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자매 산림기지를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한중일 3국이 공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콘텐츠 수립 과정에서 산업협력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포럼·심포지엄 개최, 산림 관련 기관 외 병원 관계자나 산림 테라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초청해 영리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함.

기후변화에 대한 아시아의 협력

제주한라대학교

사회	전용욱 세종대학교 부총장
발표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대학원 교수
토론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대응센터장 강선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정리	김신호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전용욱

-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도모를 위한 녹색 공적개발 원조(ODA)와 개발도상국산림황폐화방지사업(REDD+)을 통한 협력 방안에 대해 관심 고조
- 남북한과 동북아 주요 당사국들이 한반도와 역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해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상생·통일을 지향하는 그린 데탕트(Green Détente)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신뢰와 화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김상협

- 제주도과 한반도를 시작으로 한 동북아시아 그린 데탕트, 녹색협력 방안 조망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등 각국 최고지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협력에 대한 거시 목표를 제시하며 녹색 지정학

(Green Geo-Politics)에 대한 관심 고조

- 한국도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녹화 정책을 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초해 그린 테크놀로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린 데탕트와 녹색 빅뱅 기반 조성
- 북한의 산림, 하천, 식량, 전력 등의 위기적 상황은 한반도에서 그린 데탕트와 녹색 빅뱅 현실적 필요성 증대
- 녹색 협력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대북한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통일 기반 마련에 긍정적 역할

박현

- 환경,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산림 분야에서는 산지 전용이나 산림 훼손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산림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물,



전용욱



김상협



박현



정지원



강선주



아태지역 자연재난 사례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역할

- 식량, 생활, 문화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의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형 REDD+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한국 산림녹화 성공 요인으로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체계적인 추진체계,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등을 꼽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은 작은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모방해 스스로 적용, 확산되는 현상임. 따라서 여러 분야에 걸친 거대한 투자 방식보다 작지만 실질적 투자로 시작하고 스스로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그린 데탕트를 북한, 아시아권 국가로 확산할 때 국토 녹화에서 시작해 생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

정지원

-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adaptation)에 대한 한국의 공여는 각각 세계 18위와 16위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이며, 공여국이 된 지 5년이 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의 ODA 예산은 그 규모와 뉴 머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임.
-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지만 한국은 주로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물 공급과 위생, 산림, 녹색성장 전략 수립 등의 일반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운송 및 보건, 산업, 교육 분야 등에 지원

강선주

-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세계시민 교육, 저개발국가 문화와 환경 이해를 바탕으로 보건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학생 스스로 탐구하도록 설계해 운영

- 현장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베트남 현지 협력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방문해 문화, 보건, 교육 및 환경에 대한 이해 도모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교과목을 통해 제반 전공 분야와 기후변화 관련 쟁점을 연계해 해결 방안 및 대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Keywords

기후변화, 그린 데탕트(Green Détente)
녹색협력(Green Cooperation), ODA, 대학 교육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남북 간 녹색성장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린 데탕트' 추진 가능
- 한반도 그린 데탕트 3단계 전략: 1단계 한반도 신뢰 구축, 녹색지대(Green Area) 협력 발의 → 2단계 심도 있는 녹색협력 → 3단계 포괄적인 녹색협력 확대를 통한 녹색경제협력체 운영 (World Bank, ADB, GGGI, GCF, AIIB 등 국제기구의 전략적 참여 유도) → 남북통일 기반 마련
- 가파도 사례를 비롯해 제주도의 에코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사례는 북한에도 적용해 지원할 수 있는 매력적 모델임.
- 한국의 녹색 에너지 분야가 국제기구나 세계은행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해 한중일과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할 수 있음.
- 한국은 양자 ODA에 70%, 다자 ODA에 30%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양자 ODA가 불가능한 경우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다자 ODA 지원을 통해 잠재적 확대 가능
- 현재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시기에 경제성장 주축이 될 미래 인적자원인 대학생들에 대한 기후변화협력 이해증진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필요

제주국제연수센터 · UNISDR GETI · UCLG-ASPAC

사회	산자야 바티야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 동북아시아소장
발표	에밀리아나 빌라카리요 필리핀 동사마르주 돌로레스 시장 유바스리 유바스리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재해경감부 복구·재건과 부장
토론	버르나디아 이라와티 찬드라드워 UCLG 아태지역사무국장 이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주무관 유카 마키노 세계은행 재해저감복구 국제본부 상임운영담당관 그라함 브루어 뉴캐슬대학교 주거환경 연구센터 소장
맺음말	박정하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정리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동사마르주 돌로레스 시(Dolores, Eastern Samar) 사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의사소통 라인, 감시 시스템, 대피소를 구축하고, 구조팀과 복구팀, 구호물자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시(Banda Aceh) 사례: 피해가 발생한 이후 도시 재건 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에 대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대피소를 설립
- 태풍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만조 시기에 기록적인 양의 강우로 피해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이후 하천을 정비하고 저류지를 건설하는 한편, 배수시설을 확충해 총 저류 용량 증강

Keywords

자연재난, 지방정부, 위험관리, 재난 예방, 재난 피해 복구, 재난 대비 훈련



신자야 바티야



에밀리아나 빌라카리오



유바스리 유바스리



버르나디아 아라와티 찬드라드위



이경호



유카 마키노



그라함 브루어



박정하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적·물적·제도적 준비 태세를 갖추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가능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필요한 대응책을 면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위험한 지역을 파악해 위험 지도(hazard map)를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비 필요
-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통해 재난 대비는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 개인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기부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 행위자들 간 코디네이션 메커니즘을 철저히 마련
- 재난 이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재난 피해를 최소화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DIVER SITY

제4장 여성·교육·문화

TOWARDS A
NEW ASIA
OF
TRUST &
HARMONY

[글로벌 5개국 청년 비정상회담]

국제시장에는 미생이 없다

세대 갈등의 현주소와 해결 방안

중앙일보

사회	정강현 중앙일보 기자
발표	최진기 최진기경제연구소장, 오마이뉴스 대표
토론	가토 고이치 <니혼게이지신문> 서울특파원 다니엘 린데만 JTBC <비정상회담> 패널 진상문 <인민일보> 서울특파원 타일러 라쉬 JTBC <비정상회담> 패널
정리	정고은나래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대리

[발표]

- 세대 갈등이 최근 들어 공론화되고 있는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 때문.
- 한국 사회 노령화의 특징은 은퇴 연령과 빈곤율이 함께 높다는 것. 즉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면 서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
- 보수와 진보는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래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할 즈음 경험한 정치적 상황으로 나뉨.
- 세대 갈등 문제는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표심(票心)을 쥐고 있는 노인층을 겨냥한 '노인정치'가 이뤄지고 있음.

[토론]

'세대 갈등'이란 용어에 대한 각국의 반응

- 독일은 세대 갈등보다 한 단계 높은 세대 전쟁이라 부름. 유럽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

- 이며 노인 인구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도 큼.
- 중국에서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점차 뚜렷해져 추세. 또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일본은 버블경제 전후로 세대가 크게 나뉨. 버블경제 전 세대는 경제에 공헌했다는 의식이 큰 반면 젊은 세대는 피해의식이 있음.
- 미국은 사회적인 이슈가 아님. 세대가 달라 생기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 그러나 부의 분배, 정치 참여 등 세대 간 문제는 분명히 존재함.

세대 갈등의 대표적 원인인 연금 문제에 대한 각국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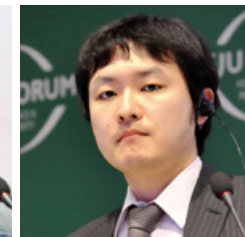
- 독일은 노인 선거인구가 많다 보니 정책이 고령자 위주로 짜임. 젊은 층을 위한 교육 예산 등은 점차 줄고 있음. 과잉 복지로 노인 알코올 중독, 조기 은퇴 등 문제가 생김.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바



정강현



최진기



가토 고이치



다니엘 린데만



진상문



타일러 라쉬



Keywords

세대 갈등, 노인빈곤, 연금제도, 노동시장, 정치 참여

라기보다 개인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 있음. 저출산도 악순환을 부추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임.

젊은 층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노동시장 상황

- 독일은 학력과 직업 선택의 연관이 적고 험한 일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일자리 문제 없음.
- 중국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나 창업 열풍이 불어 큰 문제 없음.
- 일본도 한국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있으나 두드러진 정책은 없는 상황. 청년 세대의 도전정신 결여와 부모에 대한 높은 의존 현상을 악화시킴.

각국 젊은이의 정치 참여

- 세대 갈등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한국의 젊은이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보니 정책이 투표 참여율이 높은 장년층 위주로 기울고 있음.
- 미국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처럼 정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줄 모름. 세대별로 각각 특징을 살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접근함.

- 독일 젊은이도 정치 참여가 저조함. 그러나 젊은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젊은 공약을 거는 정당도 있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세대 갈등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젊은 세대 빈곤율 상승, 표를 많이 주는 연령층에 대한 정책 편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사회문제임.
- 복지의 축이 노인층에 쏠리면서 출산, 교육 등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줄고 있음.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악순환을 초래함.
- 연금 문제로 인한 갈등은 노동시장 활성화로 일정부분 해소 가능.
- 세대 갈등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함.

한중일 소통장벽 극복 프로젝트

한중일 공동상용 808한자



이와타니 시게오 왕민 한우덕 코우사카 세츠조우 신슈즈 김태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개회사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사회 **왕민** 일본 호세이대학교 국제일본학연구소 교수
 토론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코우사카 세츠조우 일본 한자능력검정협회 대표이사
신슈즈 중국 린민대학교 외국어학원 교수
김태국 제주삼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정리 **한수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회문화연구원

- 한중일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한자가 갖는 의미
- 한중일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한자 문화의 재확인
- 각국의 한자 사용 및 한자교육 현황 비교
- 한자의 확산 과정과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 형태 차이 소개
- 한자 장려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관련 기관 노력 소개
- 한중일 각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한중일 30인회'에서 공동상용 808한자가 제정된 배경과 그 과정
- 한중일 공동상용 한자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활용 방안 제시

Keywords

한중일, 소통, 한자, 한문, 한자교육, 공동상용 808한자, 한중일 30인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동아시아 3국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문화적 유전자인 한자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한중일 공동상용 808한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제시
- 한자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역사·문화 등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하는 교양서적 출간
- 3국 공통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한 학생·비즈니스맨 대상의 실용적 3국 공용 한자사전 집필 및 발간
- 한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3국 공동 프로젝트 제안(한자와 대중 간 거리를 줄이기 위한 사진 콘테스트 공동 개최 등)
-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의 형태, 소리, 의미, 뜻 차이에 대한 확실한 인식 필요
- 글자보다는 단어 위주의 학습 필요성
- 대한민국 한자교육의 방향 제안
- 중·고교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자교육 연속성 확보
- 단순 한자교육이 아닌 동양 고전 텍스트와 인성교육을 결합한 한문교육 실시
- 한자 학습과 병행한 3국 간 정서 및 가치 공유
- 한자 보급 및 한문교육 확산을 위한 한중일 공동위원회 설립

동아시아의 갈등 극복을 위한 문화 협력

제주한라대학교

사회	최명철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발표	이지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장
토론	한자오잉 중국 난카이대학교 교수 이태주 한성대학교 교수/ ODA Watch 대표 응우옌 흥 콘 베트남 국립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리	김신호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Keywords

문화협력, 갈등 극복, 공공외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지속가능한 발전

최명철

- 동아시아 국가 간 민족주의의 특징과 갈등 요소를 알아보고 국가별 문화정책 비교와 문화협력 방안 고찰 및 문화교류를 통한 공동체 기반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갈등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이지운

-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화라는 큰 문화정책적 방향성을 향해 다양한 국가 주도적 미술 행사를 진행해왔음. 그 결과 국가 간 교류, 나아가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 문화교류를 통해 미술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 그 중심에는 국제 미술 행사인 비엔날레와 이를 통해 확장된 미술시장, 아트페어가 있음.
- 비엔날레라는 행사의 성격이 순위를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페스티벌로서 다양한 문화적, 국가적 배경을 가진 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즐기는 터전으로 마련되었음. 그 덕분에 국가

를 넘어선 문화교류의 장이 되고, 참여 작가들은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화교류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됨.

- 한중일 글로벌 비엔날레를 통해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와 갈등 극복, 소통 및 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한자오잉

- 최근 10년간 중국은 정치·경제 강대국 입지가 강화되고 있어 무역 상대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가 경계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 추진 강화
- 중국 정부 차원에서 문화, 교육, 국제교류 등 3대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위한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둠.

이태주

- 정치,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문



최명철

이지운

한자오잉

이태주

응우옌 흥 콘

화가 중심에서 작동하는 문화의 시대에 경제협력과 개발협력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다양성과 잠재력을 촉진하고 문화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공동 비전과 아시아 공동체의 토양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문화와 개발 협력(CDC)은 아시아 국가들 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음.

- 문화협력은 경제 수준 차이나 국가 간 복잡한 실리외교 관계를 넘어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장기간에 걸친 긍정적 문화 변용의 촉매가 된다는 점에서 고차원적이며,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인류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응우옌 흥 콘

-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적 문화적 가치인 공동체의식(collectivism),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 소양 등의 가치 공유를 통해 각 국가의 약점을 극복하고 상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와 미국·프랑스 등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동아시아 갈등 해소와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독립, 자립, 평화, 협력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실행하고 개방과 국제관계 다양화, 국제 표준 및 법률에 따른 평등한 대화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동아시아의 국가 주도적 비엔날레 행사 주체는 각국의 글로벌 소통 의지와 문화적 아이덴티티 구축에 기여,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와 새로운 방식의 문화협력 토대 마련
- 중국어, 중국학, 중국 문화 및 사회 이해를 목적으로 한국 내 20개 기관을 포함해 전 세계에 개설·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공자학원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갈등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와 개발 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 문화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창조적 다양성 증진 2) 문화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평화 문화 구축 3) 문화관광산업과 창조산업 육성 4)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변화를 촉진하는 협력 5)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포용적 발전과 문화권 확대를 위한 협력 6)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함.
- 극단적 민족주의와 일방적 행동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및 협력 촉진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 극복 가능

아시아의 평화, 여성 인권을 말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조연설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좌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발표 제임스 랭 유엔개발계획 젠더기반폭력 아태지역 자문관
 모린 맥티어 변호사, 캐나다 여성인권운동가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토론 이연숙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전 정부 제2장관
 김영화 강동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이금형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문/ 전 부산경찰청장
정리 문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구원

- 젠더기반폭력은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 범국가적 연대 필요
- 젠더기반폭력에서 1차 예방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임.
- 기존 법률을 충분히 이행하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쇠신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규범을 확고히 다져야 함.
- 젠더기반폭력 예방을 위해서 개인과 관련된 위험인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차원의 사회·문화·정치적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집중해야 함.
- 가정폭력을 통해 폭력이 학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젠더기반폭력을 재조명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해 폭력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성인지적 개선을 도모해야 함.
-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려면 하드웨어적 지역사

회 안전망 구축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회 인식, 즉 성인지적 인식 개선 필요. 이 두 가지 사회적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을 통해 실현 가능

- 피해 예방교육이 아닌 가해 예방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Keywords

젠더기반폭력, 아시아, 여성과 여아, 1차 예방
 총체적 개입법, 범정부적, 국제적, 가해 예방교육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김행 김형완 제임스 랭 모린 맥티어 변신원



이연숙 김영화



이금형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 측면이 아닌 1차 예방 측면(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법적·정치적 의지만으로는 젠더기반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음. 사회적으로 폭력을 묵인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성인의 성인지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적 예방교육은 단발적 교과과정적 아닌 상호 존중 및 인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필요
- 젠더기반폭력 예방에 대한 각자의 역할·책임과 젠더기반폭력 감소의 효익을 강조함으로써 1차 예방에 투자하고, 포괄적이며 공조화된 행동에 동참할 동기를 부여
- 젠더기반폭력은 법·정책 개선만으로 예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문들이 범정부·범국가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갖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폭력 피해 여성과 여아의 전문적 케어를 위해 최적의 전문가를 미리 훈련하고, 피해 여성과 여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이 필요함. 모든 공적 조직은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
- 국가·국제적 차원의 데이터뱅크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과 여아의 니즈에 보다 잘 대응하고 지역·국제적 차원에서 진정한 변화를 유도해야 함.
- 젠더기반폭력이 야기하는 신체·감정·정신적 문제 치료의 실질적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필요
-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인식 개선 교육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구조적 이해 필요
- '가해 예방교육'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피해자 되지 않기'가 아닌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고양을 통한 여성 인재 양성

전문직여성한국연맹·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사회	이인실 전문직여성(BPW)한국연맹 회장/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베이징 장강상학원 교수
토론	유영선 BPW 한국연맹 부회장/ 동양일보 상임이사 조현옥 BPW 한국연맹 서기이사/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김주남 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
정리	이정숙 BPW 한국연맹 경영기술위원장

-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과제
 - ① 개인 차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음.
 - ② 사회 차원: OECD 회원국 중 가장 극심한 남녀 간 임금 격차로 여성의 근로의욕 저하
 - ③ 기업 차원: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근로 시간으로 일과 삶(WLB)의 불균형 초래
-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 현상은 개인, 사회, 기업 차원의 복합적 이유로 발행
-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되나 법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음. '여성주의'란 여성이 무엇을 더 잘하는지에 집중하고 이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함. 사회는 남과 여가 함께 만드는 것이므로, 조화를 통해 양성평등의 사회로 가게 되는 것임.
- 여성성을 강화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활약하면 훨씬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함.
- 여성 법률가 분야에서도 고위직 승진에 장벽이 존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든 것이 현실임.
- 유연근무제와 선택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모든 남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을 직업의식이 약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시급함.
- 한국은 법적 규정이 절대로 약하지 않으나, 법 실행력이 현저히 부족함.
-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해 후세대는 남녀가 함께 가는 세상이 되도록 변화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여성의 책무임.



이인실



조동성



유영선



조현옥



김주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면 제도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
 - ① 개인 수준: 효과적인 교섭(절충) 능력을 배양하고, 여성 스스로 자기 자본 투자에 열중함.
 - ② 사회 수준: 성 차이에 대한 구태의연한 사회 인식 전환과 가사노동성 평등 확립이 필요함.
 - ③ 기업 수준: 고용 평등과 여성 근무환경 강화가 필요함.
- 성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적인 면에서 여성에게 경제권이 주어지야 하며, 여성주의를 확산해 남녀 간 격차를 줄여야 함.
- 가공할 지구온난화, 미국발 금융위기 쓰나미를 여성의 경쟁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적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유연근무제와 선택근무제 적극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 BPW GOLD AWARD 심사 시 일과 삶의 균형지수를 설정해 심사 기준으로 삼기를 제안함.
-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사회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규의 강제적 집행이 필요함.

여성의 창조경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사회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장
발표	김향숙 어연마루 대표 김혜환 아이테크 대표 방부복 신창유통 대표 신세진 인사동비숍 대표
정리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창조경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경제의 트렌드임.
-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인 지식재산이란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성장을 실제로 주도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지식재산의 원천이 되는 창조의 샘으로서 여성의 섬세한 관찰력과 공감 능력은 창조경제 기업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융합해 제3의 신발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도구임.
- 본 세션에서는 여성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주도해가는 다양한 기업활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조경제 현장에 접목하고자 함.

김향숙

- 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의 왕뜸기가 예비창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됨. 이 자금을 종잣돈으로 특허를 취득, 무

형자산으로서 특허가 제조와 판매를 성공시키는 데 기폭제가 됨.

- 여성 CEO의 실질적 제품 사용 및 섬세한 관찰력으로 세계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간편하고 성능 높은 기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세계 여성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미션에 한 걸음 다가섬.

김혜환

- 여성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기업의 생산활동에 적용해 창조적 기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여성의 섬세함으로 불량률 줄이기에 성공. 결과적으로 동종업계 타사보다 현저히 낮은 오디오 조립 불량률이라는 성과 창출
- 공정과정에서 여성의 민감하고 사려 깊은 눈으로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 라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건비 및 재료비 절감에 성공
- 차별화된 경영 방식, 즉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기보다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 본사 기준보다 더 나은 성과와 고객 만족 창출



한미영 김향숙 김혜환 방부복 신세진

-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 즉 여성은 기계를 다루기 어렵고 비전문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열정과 노력으로 깨뜨림.

방부복

- 주부로서 운동화를 짚는 어려움에 착안, 패션지퍼 분리형 아이디어를 착안해 운동화를 더 쉽고 깨끗하게 빨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적용
- 한 켤레 운동화에 다양한 지퍼를 세트화해 다양성과 창조성, 패션성을 융합, 운동화의 신모델 창조

신세진

- 지리산 약초를 여성 화장품에 적용, 청소년 여드름 치료용 비누로 인사동에 인사동비숍 개점
- 제품에 특허권을 접목해 지식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아이디어 상품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영역 구축. 그 결과 1개 매장에서 6개 매장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과거 10년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CEO가 됨.

Keywords

창조경제, 여성의 창조성, 생활경제의 CEO
꿈은 이루어진다. 실패는 창조와 발명의 어머니
피라미드 저변(BOP) 서민시장, CSV(공유가치)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거창하고 어려운 기존 상품보다 작고 쉽고 저렴한 상품이 서민들, 특히 피라미드 저변(BOP, Bottom of Pyramid) 시장 실생활에는 더 유익함.
- 여성성을 바탕으로 그라민 은행 사례처럼 BOP 시장에 적용 가능한 원-원 상품 개발, 값싸고 유용한 상품으로 기업과 고객 모두 행복한 세상 창조
- 지금은 여성의 창조성이 경제의 한 축(BOP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성이 마련할 수 있음.
- 여성 창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경쟁력 토대
-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엮어주는 네트워크 조직이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이므로, 이러한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여성 발명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
- 한국 여성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제고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법제화 필요
- 여성의 창조성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과 법제화 실행 필요
- 모성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특히 BOP(연소득 3000달러 미만 빈곤 생활경제) 시장을 살려 그라민 은행의 무함마드 유누스 대표(노벨 평화상 수상)가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 제주포럼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평화의 길임.

글로벌 시대, 한중 여성 리더의 역할과 공공외교

한중지역경제협회·차하얼학회·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사회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장
발표	진선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왕만리 타이람 홀딩 그룹 회장 장혜숙 한국뷰티플래너협회 회장
토론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장/ 국회 사무총장 정책자문관 류샤오리 베이징대학교 교수/ 차하얼학회 연구원 쑤치우시아 산시살구꽃원주업유한공사 동사장 양지아오 GE 동방금융그룹 사장
정리	송향경 서울대학교 비교문학 박사과정

Keywords

민간 공공외교, 여성 리더십, 여성의 파워
소프트 파워, 남녀평등

- 한중 양국 경제발전에 여성 기업인들이 많은 기여를 해옴. 여성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 이 과정에서 관습적인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모성의 사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여성의 노동 참여도도 높아짐.
- 그럼에도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향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음. 여성 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원인은 가정으로부터 오는 가사 부담임. 여론조사에서는 가사 남녀 참여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현실을 조사해보면 가사의 80%를 여전히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틀에 박힌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 특히 6·25전쟁이 가져다준 트라우마와 전쟁이 남긴 외상의 질곡으로부터 탈

- 출하는 방안도 여성 차원에서 함께 고안해야 함.
-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이 존재함. 고용시장의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법 등 각종 적극적 우대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성 노동시장은 여전히 열악함.
- 한국은 여전히 성차별 극복, 남녀 소득 차이 축소, 취업 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중국 역시 공공 부문에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음. 특히 조직에서 결정권을 행하는 데 여성 권리의 확대가 필요함.
-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공사례를 많이 제시해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이때 본보기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 전문직 여성과 출중한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국제사회에서 1990년 이후, 특히 1995년 제4회 세



진선미 한미영 왕만리 장혜숙 이상기



류샤오리 쑤치우시아



양지아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정부 간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풀지 못하는 사안을 여성 지도자들이 지닌 여성 특유의 유연한 사고와 부드러운 성격을 살려 국가 소프트파워 외교전략과 적절히 결합해 공공외교 차원에서 대안 모색
- 한국은 성차별 극복을 위해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 영유아보육법 제정,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공직선거법 비례대표제 및 여성 할당제 실시, 여성부 신설 등의 법적·제도적 성과를 이룸. 그 결과 모성 사망 비율, 청소년 출산율 등 여성 생식 건강 부문에선 세계 최고 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여성의 중등 이상 교육 비율과 노동 참여율도 향상됨.
- 중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 양국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무엇보다 양국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과 그에 따른 여성 태아 임신중절은 양국이 함께 해결해가야 할 과제임. 성차별 양상이 유사한 만큼 평등을 이루는 방법에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음.
- 글로벌 여성 리더 역량모델 개발 필요. 조직 내 인력 다양성 관리를 통해 성과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인재 활용을 늘 수 있음. 사회적으로 만연한 젠더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분야별 여성 진출 현황을 보면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더욱 신장되고, 리더 계층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다양한 NGO 활동과 연구가 기업이나 정부 조직 역량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역량 구도를 세분화해 글로벌 여성 리더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 시스템 구축. 한중 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리더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여성 인재 육성 방안이 필요함.
- 고용 창출 시 여성 기업이 자신부터 성별 평등 원칙을 준수하면서 직원 고용할 필요성 높음.
- 글로벌 여성 리더의 권한 범위와 정도를 명료화하고, 리더 역할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나 재단 등에서 필요한 정책, 자금 적극 지원

- 계여성회의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가 현저히 개선됨. 2012년 2월 기준으로 여성 지도자 33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여성 대통령 취임은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을 가장 잘 입증함.
- 여성은 공공외교에서 큰 역할을 발휘할 잠재력이 큰 만큼 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 확대가 필요함.

창조경제와 고등교육의 역할

제주대학교

사회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토론	허항진 제주대학교 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공커 난카이대학교 총장 세이케 아쯔시 게이오대학교 총장
정리	김한정 제주대학교 학부생

- 창조성의 근간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자치적인 환경 마련하기, 창의·융합적 사고와 도전정신 고취하기.
- 제주대학교는 상상력을 배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융복합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기초교양육원을 신설해 인성교육과 학문 기초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중. 현재 해양 바이오, IT 융합과 청정에너지, 아열대 생물, 제주 문화와 창의융합 MICE가 4대 특성화 분야에 선정됨.
- 연구 실적을 반영하는 교원 인사제도 개편, 지역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트랙 개발 및 연계 전공의 개설,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도입, 그리고 최초로 창업교육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학습) 강좌 개설 운영 중.
- KAIST는 학생들이 국제사회 공존과 공영이란 학두에 관심을 갖도록 '국경 없는 공학도 모임 (EWB-KAIST, Engineer Without Borders-

KAIST) 진행 중.

또한 칠판식 교수법을 개선해 이러닝 수업과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상호작용식 수업'으로 바꾸고 있음.

현재 KAIST는 기술 기반 창업이라는 테마로 실제 창업자와 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중심 창업교육 'JETS-Track' 온라인 강의를 운영 중.

KAIST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기회 확대.

- 게이오대학교는 창조경제 속 근본적인 연구교육 시스템 개발을 추구함. 광범위한 학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도록 노력함.

게이오대학교는 매년 정부 지원금 7억 엔을 받아 야마가타 현 연구실에서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함.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과 전문지식, 제조업 마케팅 지식정보를 공유함.

게이오대학교는 문과 사회과학부 협력을 통해 치



고충석



허항진



강성모



공커



세이케 아쯔시



열한 경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난카이대학교는 창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암기 위주의 수업체계, 학업의 분리, 광범위한 학습 저항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시함.

또한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난카이대학교 캠퍼스를 글로벌 캠퍼스로 변화시키고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와 중국어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Keywords

창조경제, 고등교육, 인재 양성, 특성화 계획, 창의성
혁신, 융합, 인성교육, 윤리의식 교육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창의·혁신 역량을 함양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 창업으로 연결하는 교육 필요
- 창조경제는 창조성을 근간으로 창의성, 혁신, 융합, 과학기술, 창업 상징
-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연구교육 시스템 개발
-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창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기회 제공, 최대한 많은 외부 지원 확보, 지역 산업 발전 견인
- 지역 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창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강의 실시
- 치열한 경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위한 인성 및 윤리의식 교육 필요
-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모든 전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학문 수업 제공

동아시아 국가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학 교육의 방향

제주대학교

진행	강근형 제주대학교 교수
사회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허항진 제주대학교 총장
발표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 전 한림대학교 총장
	닝사오 베이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장
	이종원 와세다대학교 교수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리	고경민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허항진

- 대학 교육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역사교육이나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자극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지향
- 대학만의 또는 학자 개인의 일회성 교류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대학과 학자들 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동아시아 공통,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

이상우

- 국민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지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대학
- 협소한 범위의 국익보다 진실에 바탕을 둔 역사인식을 갖춘 참된 지식인들이 각국 국민 여론을 주도할 때 문화와 전통을 달리하는 국민들 간 상

Keywords

동아시아, 갈등 해소, 지역 평화, 신뢰 구축, 화합적 국제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대학 교육,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 가능.

닝사오

- 화합론(和合論)은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로 유가, 도가, 묵가 등 각 유파 학자들이 공유하는 사상이며, 동아시아 각국이 공동으로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자산
- 화합론에 기반한 화합적 국제관은 세계 각국 인민의 상호 이해, 상호 신뢰, 평화 공존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전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음.

이종원

- 유럽 통합의 중심적 인재 육성을 위해 석사과정은 벨기에 브루게에 설치하고 박사과정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설치한 유럽대학원(EU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을 모델로, 일본 와세다대



강근형 고성준 허항진 이상우 닙사오



이종원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



학교가 2011년부터 '동아시아대학원-캠퍼스 아시아(EAUI, East Asian University Institute)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

-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서울대, 도쿄대, 베이징대 간에 설립되어 동아시아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적 경쟁력을 갖춘 미래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학술공동체를 설립하고 한중일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허항진
 - 화해와 상생의 공통 가치를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내면화하기 위한 대학 교육 구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은 동아시아 역사 문제 재인식과 공생적 국익 추구, 동아시아 공동체 인식과 평화 가치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이상우
 - 대학 교육을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협력 체제 구축과 관련한 대학 간 협력 방안으로 1) 좁은 범위의 국익을 넘어서 지역 단위 공동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일 대학 간 협력기구 창설 2) 국민 간 신뢰 조성의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 학생 교류 확대 3) 대학원생 교육, 대학교수 공동연구 지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언론인 교육 등을 실천하는 동아시아 센터(East Asian Center for Inter-University Cooperation) 창설 제안. 한중일 3국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제주(제주대학교)에 동아시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닙사오
 - 동아시아 대학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화합적 국제관을 수립하게 하고 서방 중심주의의 국제관계 이론과 편협한 민족주의를 분석 비판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함.
- 이종원
 - 독일과 프랑스 간 성공적인 청소년(13~30세) 교류 경험을 벤치마킹해 한중일 중심으로 동아시아 대학 교육의 획기적인 '지역화(regionalization)' 확대 방안이 요청됨.
-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
 - 동아시아 교육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로 MOOC(온라인 대중공개 강좌)가 유망함. 한국에서는 숙명여대의 숙명디지털휴머니티센터(KCDH)가 아시아 연구소(Asia Institute)와 함께 MOOC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하고 있음. 또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과 함께 'Young Ambassadors' Program을 개설 운영 중임.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COMPETITIVENESS

제5장 글로벌 제주

TOWARDS A
NEW ASIA
OF
TRUST &
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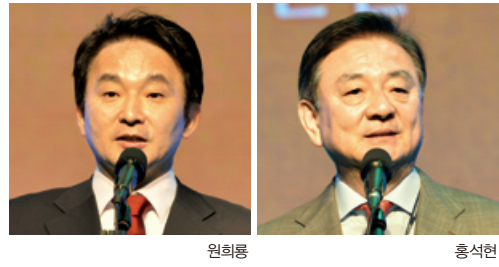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I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컬처오픈

사회	우상임 피아니스트/ 문화기획자
발표	정신지 인터뷰 작가 대련 사우스코트 (제주위클리) 영문편집장 박소연 로컬푸드 요리사 김범진 문화공간 양 관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이지영 꽃자왈 환상숲 해설가
문화선언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석현 월드컬처오픈 위원장/ 중앙일보·JTBC 회장
정리	박신영 월드컬처오픈 전략기획단 연구팀장

- ‘다양성’의 가치를 펼치며 지구촌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제주 문화의 잠재력
- 제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제주와 문화에 대한 시선과 생각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바라봄.
- 이름 없는 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작업. 제주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기록해 희망을 찾고 현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음.
-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은 시대와 함께 변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제주 고유의 삶의 리듬과 속도와 환경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해가는 것이 중요함.
- 건강한 농장에서 행복한 식탁까지의 과정 및 자연과 사람을 아우르는 생태의 순환을 이해하며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음식 문화가 자리잡을 때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 발전이 가능함.

-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과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예술을 즐기는 상호교류 속에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고, 동시에 새로워지며 공동체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짐.
- 숲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지켜야 할 가치이며,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보존,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인간의 삶이 보다 온전하고 건강하게 영유될 수 있음.
- 제주포럼 문화선언: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전 분야에서 조화와 균형이 잡힌, 더불어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과 지구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인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문화는 삶의 질과 사회의 행복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임. 문화의 본질은 인류 공통의 뿌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공유와 상생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
 - 누구나 문화와 예술의 창작자, 후원자, 향유자가 될 수 있는 문화교류 및 교육 기회 확대
 - 사라져가는 제주 고유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록문화 장려, 지원 및 문화 원형 콘텐츠화 지원
 - 마을공동체, 지역문화, 자연환경을 모두 고려한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 및 개인과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적 실천 노력 지원
 - 생태순환적인 건강한 음식문화의 촉진을 위해 농장과 소비자와의 교류 촉진 및 윤리적인 소비를 돕는 교육 확산
 - 외지인 예술가와 도민들의 교류 및 세계의 문화예술인 네트워킹과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열린 교류의 장 제공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제주 자연 고유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개발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지구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글로벌 협업기구 월드컬처오픈은 함께 문화적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 위한 효과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을 위해 노력함.
- ① 다채로운 문화가 전시되고 어울리는 열린 교류의 장 제공
 - ② 지역과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적 노력을 발굴, 지원
 - ③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 정책, 실천 방안을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 플랫폼 구축

류 공통의 언어인 문화를 매개로 하는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월드컬처오픈은 상호협력할 것을 선언함.

Keywords

문화 다양성, 예술,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문화 정체성, 풀뿌리, 교류와 협업,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순환, 환경, 글로벌 협업 시스템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II



제주포럼 문화선언(전문)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타인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바람은 예술, 과학, 생활양식의 다양한 문화 형태로 발현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는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는 익숙하지 않기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르기에 더 알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문화는 우리를 교류하게 합니다.

문화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이 담겨 있고, 문화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바라는 따뜻함과 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온 인류는 지식에 있어서나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이 흘러 곳곳에 스며들 듯, 양산된 물질과 정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문화가 국경을 넘나들고 가치와 생각이 마주치며 많은 부딪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어디서나 수평을 찾아가듯, 인간은 끊임없이 균형과 조화를 찾아 나아갑니다.

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 무엇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인지, 많은 이들이 열린 시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며 지구 곳곳에서 공유와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교류를 넘어 공감과 포용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의식 속에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환경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에서 함께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협력 시스템은 도시와 민간이 함께, 그리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인류 공통의 언어인 문화를 매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와 국내외 문화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문화를 통해 일상과 사회 곳곳에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세계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겸손히 동참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월드컬처오픈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합니다.

하나, 다채로운 문화가 전시되고 어울리는 열린 교류의 장을 펼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하나, 지역과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적 노력들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하나, 세계 지역 간 문화 정책과 실천 방안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월드컬처오픈은 글로벌 협업기구로서, 제주 및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며 최선을 다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이에 선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들 모임

좌장	조정래 소설가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건축가
발표	백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토론	김훈 소설가
	신경림 시인
	현기영 소설가
	방민호 문학비평가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김석윤 김건축 대표
	양건 가우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리	백승현 가우건축사사무소 실장

조정래

- 세계적으로 빼어난 제주의 풍광, 오염되지 않은 청정 바다와 맑은 대기는 ‘한반도의 다이아몬드’라 할 만함. 이런 제주가 일찍부터 관광지로 꼽힌 것은 자연스러운 일. 제주도는 화산섬이라 돌이 많고 농토가 적어 생활을 운택하게 하기 위해 관광산업 진흥이 필연임. 때마침 중국에 관광 바람이 일어 제주에도 중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마치 고기 떼가 제주 바다를 뒤덮듯 국내외 관광객이 밀려드는 것은 발전의 호기라 할 수 있으나, 국민이 합심한 열성적인 보살핌과 가꾸기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 꿈같은 호기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음.

-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는 두 가지 난제에 봉착해 있음. 첫째, 난개발. 그 하나는 고층빌딩 짓기이고, 또 하나는 자연환경 파괴다. 여기저기 치솟아 유연하고도 우아한 모성의 품처럼 느껴지는 한라산 자태가 가려지는 것은 큰일임. 자연환경 훼손을 낳는 개발은 ‘관광 제주’의 또 다른 자살행위임. 둘째, 외국인에게 땅 팔아넘기기. 이 문제의 책임은 제주도와 도민에게 똑같이 있음. 외자 유치라는 미명 아래 외국인에게 땅 사기를 부쳐질 해온 제주도, 당장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농토든 뭐든 팔아버리는 제주도민 모두 어리석기 짝이 없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후대의 것’임.
- 이런 기본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비로소 ‘문화



조정래 김원 백혜선 김훈 신경림



현경영 방민호 민현식 김석운 양건

제주의 꿈이 실현 가능함. 관광의 3요소인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제주도는 빼어난 풍광으로 볼거리를, 청정 바다 덕으로 먹을거리를 해결했으나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음.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이 있다고 하나 일반적이지 않고 웬지 비문화적임. 제주 관광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데 문학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첫째, 제주 명소에 대한 시인들의 시 짓기와 예술적인 시비 세우기. 일부러 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쓴 명편 골라내기. 해당 관광지에서 안내원이 영어나 중국어 등으로 번역한 시를 낭송하면서 구경시키면 관광 효과가 월등해질 것임.
- 둘째, 제주의 상처 깊은 슬픈 역사와 고유한 설화·전설의 소설화. 해당 관광지에서 안내원이 그 내용을 흥미롭게 압축, 요약해 들려주면 관광 효과가 배가될 것임.
- 셋째, 위의 것들을 희곡화. 40~50분 정도 단막극으로 꾸미고, 제주도민들이 지역에 따라 직접 출연하면 제주 고유의 인상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임.

백혜선

- 제주의 정체성은 수려한 자연경관에서 비롯된 고유문화가 존재하므로 특유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지형과 지문(한라산, 오름, 해안선)을 고려한 건축 태도가 필요함.
- 제주의 건축 태도는 제주의 재료, 삶의 문화를 온전히 담아낸 버나쿨러 건축을 기반 삼아야 함. 또한 개발과 보존의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풍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 건축에서 문화 풍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자연보존운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함. 건축은 문화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작업이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초기 단계임. 제도적 통제와 더불어 연구, 학습의 노력도 필요함.
- 정체성은 풍토에 관계된 상징체계로 외부 변화요인에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DNA 같은 것. 건축에서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역사성'과 더불어 '동시대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임.
- 문화 이주민의 시대에 제주의 고유 유산에 보편적인 사고가 더해지면서 변화의 에너지원을 얻는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다는 장점과 더불어 오리지널리티와 슬로시티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제주의 경관 관리에 발터 벤야민의 '다공성' 개념을 더한 도시 경관 형성(풍경 구축) 방식을 제안함. 서사적 풍경이란 시간과 사건이 누적된 풍경으로, 현상에서 흔적을 추적하는 일을 시작으로 '제주민의 삶'이 문화 풍경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함.

Keywords

문화 제주, 제주의 정체성, 문화 풍경, 서사적 풍경, 버나쿨러(vermacular) 건축, 다공성의 도시

- 제주 관광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데 문학이 역할을 할 수 있음. 첫째, 제주 명소에 대한 시인들의 시 짓기와 예술적인 시비 세우기. 해당 관광지에서 안내원이 영어나 중국어 등으로 번역한 시를 낭송하면서 구경시키면 관광 효과가 월등해질 것임. 둘째, 제주의 상처 깊은 슬픈 역사와 고유한 설화·전설의 소설화. 해당 관광지에서 안내원이 그 내용을 흥미롭게 압축, 요약해 들려줌. 셋째, 위의 것들을 희곡화. 40~50분 정도 단막극으로 꾸미고, 제주도민이 직접 출연하면 인상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임.
- 제주의 경관 관리 제도에 제주 특유의 정체성을 보존·유지하기 위해 지형과 지문을 고려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
- 장소에서 해결하고, 관계의 맥락을 복원하며 자연경관을 돌보이게 하는 건축과 여유와 순환, 평화의 문화를 지향하는 건축 태도가 요구됨.
- 제주의 경관 관리는 보존과 개발의 영역이 구분된 정책보다 버나쿨러 건축의 태도를 기반으로 풍경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함.
- 문화 풍경 구축을 위해 자연환경 보존 단계를 넘어 도시 경관·환경 구축의 단계를 같이 고려해야 할 시점임. 제도적 통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연구·학습 노력이 요구됨.
- 제주 건축의 지역성을 논하기 위해 제주다운 삶을 먼저 논할 것. 작금의 제주 정체성을 대표하는 관광정책은 제주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발터 벤야민의 '다공성의 도시' 개념을 제주 경관 관리제도의 철학적 사고로 보태어 제주만의 서사적 풍경이 문화 풍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공공자원으로서 제주물 관리 및 가치 극대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특별자치도

사회	이남호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객석총괄
토론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호원 제주대학교 교수 지영훈 제주대학교 교수
정리	현은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품질관리팀장

- 깨끗한 수자원 확보 문제는 유엔 선정 15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 2위를 기록
- 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 공공재, 효율성 관점에서 경제제, 수질의 관점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
-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급은 줄고 있어 물의 가치는 이미 휘발유를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 세계 물산업은 상하수도, 폐수처리 등 장치산업이 이끌고 있으며, 병입수 시장은 물산업의 12.2%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세계 병입수 시장은 2012년 기준 19억3140톤으로 연평균 성장률 5.9%임.
- 서유럽, 북미 등 전통 생수 소비 시장은 여전히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이 담보세에 들어감.
-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연간 성장률 16.4%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1인당 소비량은 16L로 서유럽(111L)이나 북미(91L)에 비해 낮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생수 시장은 전체 음료 시장의 13%가량을 차지하며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국내 탄산수 시장은 2014년 400억 규모로 전체 음료 시장에서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12% 이상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도는 37억7000만 톤/년의 총가수량의 45%인 16억8000만 톤이 매년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으며 이 중 31%가량에 해당하는 5억3200만 톤/년(적정 개발량의 82%)에 대해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고 허가량의 33%가량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음.
- 제주 지하수는 담수 지하수, 염지하수, 심부 지하수의 다양한 형태로 부존되고 있으며 부존 형태별로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함.
- 제주가 가진 경쟁우위 자원인 지하수를 기반으로 병입수와 다양한 2차산업 상품 및 지하수와 서비스를 결합한 3차산업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제주 지하수를 활용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



이남호 고경수



이수재 이승창



이호원 지영훈



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이 병행되어야 함.

- 제주 지하수는 공공 관리, 적정 관리, 과학적 관리 원칙에 따라 공공의 자원으로서 지속 이용 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제주 지하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육성이 필요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제주물의 우수성에 대한 전략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일관된 이미지 구축 위해 지속적 정책 개발 및 지원
 -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자국 물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물의 생리 활성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 경쟁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제주물의 경우에도 향산화 효과, 면역 활성화, 항아토피, 항당뇨, 항비만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사례가 있음.
 - 제주물의 우수성 연구에 대한 일관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주만의 전략적 스토리텔링을 마련해야 함.
- 다양한 기능성 음료 개발로 제주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 제주 지하수에 함유된 바나듐, 천연 탄산을 활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이 필요함.
 - 기능성 미네랄 농축수를 니어워터 음료로 개발, 상품화할 필요 있음.
 - 미네랄 성분(바나듐, 실리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공공자원으로서의 제주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 제주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춰야 함.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해수를 담수화한 물이나 중수도, 빗물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지하수 사용량의 98%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를 연계할 경우 해수 담수화 비용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에서는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함.
- 제주물의 현명한 이용 전략 수립 및 이행
 - 제주물 전체에 대해 100년 앞을 내다보고 비전 목표를 세워 관리해야 함.
 - 보전을 전제로 합리적 이용 전략 수립 필요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취수 시 담/염수 경계부 교란 및 고농도 농집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최상의 주의가 필요함.
 - 복합이용 전략을 통한 선도성 및 기술적 우위 확보 필요
 - 지하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제주 지하수를 활용한 공유가치를 창출해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주 방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광어 등 수산물 양식에 제주의 염지하수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 연계 동북아 평화 크루즈의 실현과 과제

제주크루즈산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

사회	임혁백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김익근 제주크루즈산업협회 회장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이승신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박인호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 사무관
	김영운 남북물류포럼 회장
	임복순 난징 진선대학교 중한연구소 소장
	팀 왕 코르타크루즈선사 운항담당
정리	오상운 제주크루즈산업협회 사무국장

- 북한 연계 평화 크루즈 실현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 방안을 제시함.
- 현재 동북아 크루즈 관광 루트에서 북한만이 제외된 상황임. 북한 연계 크루즈 루트 개설을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마련돼야 함.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국적 크루즈 선사를 제외한 아시아 및 유럽 중심 선사의 접근이 먼저 이뤄져야 함.
-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승선한 중국 크루즈 선사 → 한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승선한 외국 크루즈 선사 → 한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승선한 한국 크루즈 선사
- 북한을 포함한 크루즈 라인 개설이 서해북방한계선(NLL)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북한 연계 평화 크루즈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행정적 지

- 원이 필요함.
- 제주가 갖고 있는 자치도의 장점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북한과 접촉해 평화 크루즈를 진행해야 함.
- ‘평화 크루즈’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공적인 평화 크루즈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음.



임혁백 김익근 심상진 이승신 박인호



김영운



임복순



팀 왕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북한 연계 평화 크루즈 루트는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만이 아니라 남북한 교류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임.
- 평화 크루즈 루트 개설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평화 크루즈 정책을 진행하는 추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
- 북한의 항만 인프라 수용 태세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을 벗어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북한과의 접촉해 평화 크루즈 라인을 개설하는 자치도 자체 해결 추진이 필요함.
- 중국, 러시아, 일본 또는 북한과의 협력 분위기에 따라 평화 크루즈 라인 실현 가능성이 커짐.
- 향후 평화 크루즈 루트가 만들어지더라도 제주가 모항이 되기 위해서는 플라이 인 크루즈(Fly in Cruise)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미래사회 변화와 제주의 가치 제고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사회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이용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토론	서교 서울대학교 교수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동환 중앙대학교 교수 강신겸 전남대학교 교수
	안나우 홍콩 경쟁력강화위원회 의장
정리	윤원수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용우

- 한국의 인구 및 도시 패턴은 5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단독 주거에서 아파트로, 수도권 도시 성장 위주로 변화돼왔음.
- 국토 변화의 동인은 1) 정치: 민주화와 분권화 2) 경제: 산업화와 경제성장 3) 인구: 인구 증가와 도시화 4) 사회: 가족해체와 개인화 5) 환경: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6) 과학: 기술 발달과 고속화로 정의함.
- 국토 6대 메가트렌드 세부 내용은 1) 정치 다극화: 중국 경제 부상, 지방자치 정착 2) 경제 글로벌화: FTA 확대, 광역화 3)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이상 기후, 자연재해 4) 저출산·초고령화: 가구 소규모화, 장수사회 5)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삶의 질 중시 6) 과학기술 발달과 융복합: INBECS + FT, 접근성 제고
- 국토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의 미래는

- 1) 메가도시권 성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 교류관문 기능, 지역 회복력 및 사회통합적 정주환경 중요
 - 2) 자족적 분립으로 에너지 및 식량 자립공동체 형성, 인구 과소지역 관리 효율화 중요
 - 3) 분산적 집중으로 여가문화 및 건강 치유공간 조성, 국토 자연공간 기능 유지 중요
 - 4) 다중심 초연계로 IoT 기반 첨단 지능형 공간, 토지 이용의 유연성 및 복원력 중요
- 이에 대한 제주의 미래 대응전략은
 - 1) 세계적 첨단 미래도시 시범지역화로 자동주행 시스템, IoT, 스마트그리드, e-health 및 learning 필요
 - 2) 해양-산지 연계형 사계절 교류 및 휴양 기능 강화로 동북아 MICE 중심지, 복합형 해상풍력발전단지, 휴양 타운 중요
 - 3) 의료 중심의 여가, 일자리, 주거 복합공간 확



김태윤

이용우

서교

전성우

김동환



강신겸

안나우



층으로 의료, 복지, 안전 중심의 오프라인 생활권 정비

- ④ 토지 이용 유연성 및 회복력 제고를 위해 계절적 토지 이용, 한시적 토지 이용 및 이용 후 복원 중요
- ⑤ 포용적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 형성으로 다문화(외국인 및 외지인), 청장년층과 고령층, 인공과 자연 및 생태, 기술과 역사 문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해안과 중산간 중요

강신겸

- 제주 미래관광은 그동안 제공해온 짜여진 관광에서 탈피가 필요함.
- 현대 소비문화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 등이 중요한 이슈이며, 진정성이 중요한 부분임.
- 진정성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통해 제주도민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 및 생활로 만들어 내고 관광객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 가장 매우 중요함.

김동환

- 국가의 미래와 제주의 미래가 같을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국가와 다른 독립적인 제주의 미래모델 필요
- 고령화, 다문화는 인구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사항임. 제주의 미래에서 다문화와 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제주의 다문화는 고소득자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도 한국 전체 고령화와 양상이 다름. 따라서 제주의 핵심 동력 산업으로 육성 필요
- 제주의 미래산업 또한 고령화와 다문화 중심으로 전개. 헬스케어 사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IoT, 드론 등 IT 산업 부각 필요(백색산업, 녹색산업, 황금산업)

서교

- 우리나라 농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제주는 20%의 비율을 보임. 특히 제주는 미래의 농업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 제주의 농업 미래는 첫째, 수자원 확보 필요(장기적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둘째, ICT 기술 활용 필요(무인기 기술 농업 적용 등 ICT 기술 적용 필요), 셋째, 관광 연계형 농업 필요

전성우

-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필요
-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려워, 환경은 하나의 축이 아니라 큰 배경임.
- 자원으로부터 많은 생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토지자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따라서 배경인 환경을 다시 재고해야 함.

안나우

- 홍콩은 세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를 고령 인구가 차지할 것임.
- 한국은 국민연금에 존재하지만 압박을 받고 있음.
- 출생률 또한 1.13%로 낮아질 것임. 이는 노동력 감소를 의미함. 경제가 둔화되고, 국민의 요구가 높아질 것임.
- 젊은 시민들은 '우산혁명'이란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노력이 필요함.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전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발표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 허시칭 하이난성 부성장 오자와 타카시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차장 곤살로 오르티스 디에스 토르토사 주한 스페인대사
정리	조은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보실 주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현황과 미래전략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정부 차원의 개발전략으로 제주를 국제도시로 만들어 국가경쟁력과 국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2021년까지 미래비전은 1)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2021년까지 JDC 프로젝트를 통한 1만 일자리 창출 2) 투자유치 6조 원 실현 3) 매출액 7200억 원 달성 4) 국민 평가 1위 달성이며,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임.
-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결과가 국민과 제주도민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 지속적 성장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임.
- JDC의 미션은 관광, 교육, 의료 등 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도시로서 외국인이 정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은 제주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 국가 전체 경쟁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 국가 전략임.

중국의 빼어난 열대섬 휴양지, 하이난 섬

- 2009년 중국 정부는 하이난 국제관광섬 국가 전략 확립 및 정책을 시행, 지난 5년간 단계적 성과 이룸.
- 공항, 고속도로, 철도, 호텔 등 관광 인프라를 개선했고 해변을 중심으로 휴양지 등 관광도시를 건설했으며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함.
- 관광업 발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으로 1) 2014년 관광객 4060만 명 2) 2009년 1.8배, 연평균 12.5% 증가 3) 관광 총수입 485억 위안 달성 4) 2009년의 2.3배, 연평균 18% 증가 5) 관광산업 창출 일자리가 지역 총 일자리의 40% 차지 6) 직간접 취업자 200만 명 이상 7) 하이난 지역내 총생산 2014년 3500억7000만 위안 8) 2009년 2.1배 9) 매년 평균 11.1% 증가 등 성과를 이룸.
- 하이난 국제관광섬 건설을 위해 각국의 관광지



문정인 광진규 허사정

오자와 타카시 콘솔로 오르티스 디에스 토르토사

발전 경험을 하이난 성에 접목·실행했는데, 이에
는 1) 관광 우대정책 실시 2) 관광계획 통합 적용
3) 여행상품 강화 및 신상품 개발 4) 지속적인 관
광 관련 법규 정비 5) 관광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돼 있음.

오키나와, 관광객 천만 시대의 인프라 정비

- 관광은 오키나와 현의 경제 선도산업으로, 입도
관광객 수 천만을 목표로 함(2022년 3월 말까지
목표).
- 오키나와 관광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여행 중 방
문한 관광지 및 관광시설 수리 등 인프라가 상위
에 있음 → 오키나와 관광을 지탱하는 것은 '인프
라 정비'에 있음.
- 오키나와 관광 진흥에 공헌하는 인프라 정비를
명확히 해 6개 분야로 시나리오 작성해 정책 실
시: 1) 관광자원 정비 2) 관광지 등 지역 지원 3)
교통망 정비 4) 정보 전달 확충 5) 환경 보전·재
생 6) 재난 방지·위기 관리
- 도로, 항만 사업을 인프라 수직적 계열로부터 관
광을 고려해 횡적으로 연결하여 추진
- 관광 진흥 목적·목표에 대해 인프라 종합력의 중

요성을 강연, 심포지엄 개최, 패널 전시, 오키나
와 관광 인프라 카드 발급, 인터뷰 게재 등을 통
해 알기 쉽게 제시

- '관광자원 정비'의 예로 다리 건설을 교통 편리
성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경관 관광 거점으로도
활용
- '교통망 정비'의 예로, 항공 수요 증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두 번째 활주로 증설에 착수, 나하
도시권 도로를 정비해 일본 내 교통 정체 1위라
는 오명에서 탈피
- '정보 전달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거점
을 활용, 휴식 및 정보 발신, 지역 연계 등 3개 기
능을 겸비한 시설로 진화
- 관광객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관광에 공헌하는
인프라 정비에 대해 알리고자 인프라 시설을 대
상으로 한 '오키나와 관광 인프라 카드'를 작성 및
배부

스페인, 국제자유도시 발전 모델 및 전략이 보여주 는 관광의 파급효과

- 스페인 관광산업은 GDP의 9% 차지, 전 세계 관
광객 한 해 3.3% 증가 예상

- 여행 및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집
중 육성
- 관광산업은 스페인 경제의 핵심으로 스페인 국
내총생산(GDP)의 10% 직접 생산, 총 고용의
11%를 차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을
관광수지 흑자로 만회
-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지 보유: 2014년
6500만 관광객이 스페인으로 유입, 예상 관광수
입은 630억9600만 유로 달성.
- 2015년 세계경제 포럼에 따르면 관광 경쟁력 부
문 세계 2위
- 국제 관광은 세계적인 동향으로 앞으로 제주, 오
키나와, 하이난은 마요르카와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 관광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의 제주의 역사, 인문학적 배경과 JDC 추
진 사업과의 조화가 필요
- 국제관광섬 하이난 건설의 경험에서 찾은 방안으로 1) 관광 우대
정책 실시 2) 정책방침 강화 3) 관광계획 통합 적용 4) 여행상품
강화 및 개발 5) 제도 및 법률 보장 강화 6) 관광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국제관광섬으로 건설하기 위해 개방과 국제 상호협력은 필수적
요소
- 하이난 성의 관광통합 정책의 전제조건은 환경보호임. 법규에
따라 관련 산업 관리감독 필요
- 건설 추진으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
렴 필요
- 도로, 항만 사업 등 인프라 건설을 관광적 관점에서 횡적으로
연결 추진 필요
- 인프라를 교통 편리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경관 관광 거점으로
활용 가능
- 스페인 마요르카가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방정부
의 자율성 존중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성공적 지원에 있음.
- 제주, 오키나와, 하이난, 마요르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
관광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필요

Keywords

제주, 하이난, 오키나와, 스페인, 관광, 국제도시, 인프라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제6장 제주포럼 이모저모

TOWARDS A
NEW ASIA
OF
TRUST &
HARMONY

개막 축하공연

일시·장소: 5월 20일, 13:20~13:50, 그랜드볼룸
 공연: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참석자: 700여 명



공식 연회

외교부 장관 주최 환영만찬

일시·장소: 5월 20일, 19:00~20:20, 그랜드볼룸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축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건배제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문화공연: 코아모러스 탱고 사중주
 참석자: 65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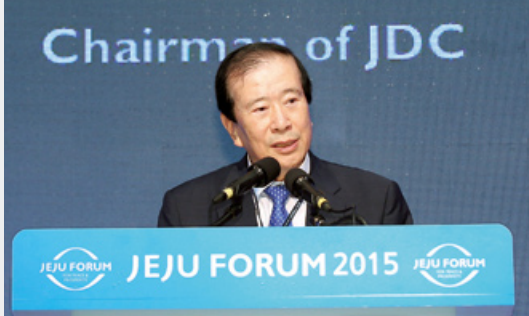
조직위원장 주최 공식만찬

일시·장소: 5월 21일, 19:00~20:20, 그랜드볼룸
 만찬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사: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건배제의: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건배제의: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문화공연: 엘리스 전자현악그룹
 참석자: 600여 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일시·장소: 5월 22일, 19:00~20:20, 그랜드볼룸
 폐회사: 문태영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만찬사: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건배제의: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문화공연: S.O.S. 퓨전국악그룹
 참석자: 370여 명



교류회

VIP 간담회 및 기념촬영

일시·장소: 5월 21일, 10:00~10:20, 하노루 PDR
 참석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문태영 제주평화연구원장



조직위원장 주최 VIP 초청 오찬

일시·장소: 5월 21일, 13:00~14:20, EFL라운지

환영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참석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등



언론인 교류만찬

일시·장소: 5월 20일, 19:00~20:20, EFL라운지

사회: 정세미 아리랑국제방송 아나운서

환영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인사말: 프랭크 칭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논설위원

건배제의: 로저 쿠버 미국 <더 레코드> 대표

참석자: 70여 명(해외 언론인 50명, 국내 언론인 20명)



한중일 기업인 교류만찬

일시·장소: 5월 21일, 19:00~20:20, 다이아몬드홀

축사: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김일섭 서울종합과학대학원 총장,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환영사: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문화공연: 앨리스 전자현악그룹

참석자: 25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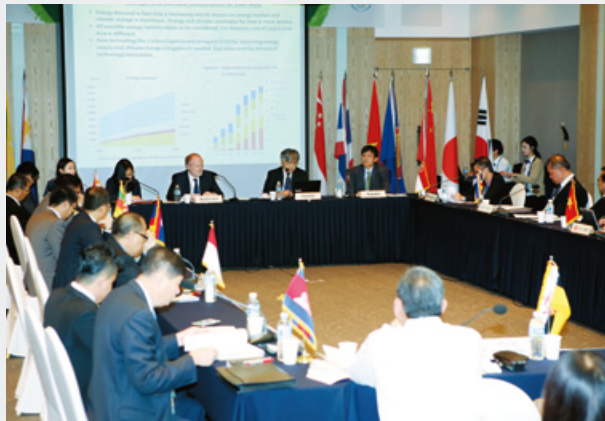
JDC-주한 스페인대사관 간담회

일시·장소: 5월 21일, 19:00~20:20, EFL라운지
 참석자: 김한욱 JDC 이사장,
 곤살로 오르티스 디에스 토르토사 스페인 대사 등 20여 명



세계전자정부도시협의체 간담회

일시·장소: 5월 21일, 루비홀
 참석자: 세계전자정부도시협의체(WeGO) 30여 명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삼다수' 방문

일시·장소: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 삼다수)
 참석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단,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외

동아시아포럼 비공개회의

일시·장소: 5월 21~22일, 루비홀
 참석자: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 실무대표 60여 명



차세대 교류회

일시·장소: 5월 21일, 15:40~17:00, 루비홀
 사회: 오종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이벤트: 플래시몹
 참석자: 40여 명(필리핀, 싱가포르, 몽골, 일본, 한국 대학생 등)



한일학생 교류회

일시·장소: 5월 22일, 17:20~18:40, 다이아몬드홀
 사회: 조우진 일본 타마대학교 교수
 주제: 한일수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참석자: 73명



문화행사

풍낭라운지

- 1 제10회 제주포럼 기념 미디어 갤러리
- 2 한국 전통차와 제주만의 다식 체험
- 3 캘리그라피로 느끼는 평화의 섬 제주
- 4 풍낭샐터&미니 북카페

미니콘서트

- 5 남기다밴드
- 6 뚜렷브라더스
- 7 코아모러스 탱고 사중주

제주 관광

- 8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 9 사진작가의 눈에 담긴 아름다운 제주
- 10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
- 11 숲 해설과 함께하는 힐링 투어



국가별 참가자 등록 현황 (총 62개국 3,788명)

국가명	인원(명)	국가명	인원(명)	국가명	인원(명)
아프가니스탄	2	헝가리	1	폴란드	5
아르메니아	1	인도	4	코트디부아르	1
호주	7	인도네시아	47	한국	3,185
오스트리아	1	이라크	2	루마니아	1
아제르바이잔	3	아일랜드	1	러시아	17
방글라데시	1	이탈리아	1	싱가포르	8
베네수엘라	1	일본	133	남아프리카공화국	1
브루나이	5	케냐	2	스페인	8
캄보디아	5	라오스	3	스리랑카	1
카메룬	3	말레이시아	10	수단	8
캐나다	6	멕시코	1	스웨덴	3
중국	171	몽골	14	태국	12
코스타리카	1	미얀마	3	토고	1
동티모르	1	네팔	4	튀니지	1
에콰도르	1	네덜란드	1	터키	4
이집트	2	뉴질랜드	3	우간다	1
피지	1	나이지리아	1	아랍에미리트	1
핀란드	2	팔레스타인	1	영국	10
독일	14	파나마	4	미국	25
가나	1	페루	1	베트남	9
온두라스	1	필리핀	19	총인원	3,788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5
결 과 자 료 집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

인쇄 2015년 7월 3일

발행 2015년 7월 3일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등록 제 652-2008-00002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우) 697-858

전화 064)735-6533

팩스 064)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 DesignZoo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ISBN 978-89-93764-08-6 93340

〈 비매품 〉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697-8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33 Fax 064-738-6539 Email jejuforum@jpi.or.kr Website www.jejuforum.or.kr

Facebook www.facebook.com/jejuforumpp Blog <http://blog.naver.com/jejuforum>



〈 비매품 〉



9 788993 764086

93340

ISBN 978-89-93764-08-6